

ISSN 1229-6899

동남아시아연구

The Southeast Asian Review



Volume 33 Number 3 (August 2023)

33권 3호 (2023년 8월)

한국동남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ISSN 1229-6899

동남아시아연구

The Southeast Asian Review

Volume 33 Number 3 (August 2023)

33권 3호 (2023년 8월)

한국동남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이 학술지는 2022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차례

■ 일반논문

-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가 아세안중심성 (ASEAN Centrality)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 동 엽 1
- 초국경 댐 개발에 관한 수자원 외교: 메콩강위원회(MRC)의 역할과 과제 이 요 한 39
- 동남아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고 영 경 71
- 이슬람식 경제의 현실 적용: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종교적 인식과 실천 김 형 준 119
- 만달라에서 네트워크로: 트란따우(Merantau) 예술가의 귀환과 장소성의 재배치 이 창 규 153

■ 서평

- 25년에 걸친 트랜스내셔널 한인 공동체에 대한 역작 김 중 영 187
- 한국 학자의 인도네시아 연구,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다! 정 정 훈 193
- 깃잎 뒤에 가리어진 ‘우리’의 얼굴 부 경 환 201

■ 부록 / 209

Contents

■ Articles

- The Impact of Minilateralism on ASEAN Centrality:
Strategic Implication on Korea's Approach to ASEAN
..... Dong-Yeob KIM 1
- Water Diplomacy on Transboundary Dam Development:
Role and Challenges of the Mekong River Commission(MRC)
..... Yo-Han LEE 39
- Startup Support Policies in ASEAN:
A Comparative Analysis of Malaysia, Thailand, and Indonesia
..... Young Kyung KO 71
- Islamic Economy at Work:
Religiou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Muslims in Indonesia
..... Hyung-Jun KIM 119
- From Mandala to Network:
The Return of Merantau Artists and the Reconfiguration of Place
..... Changkyu LEE 153

■ Book Review

- A Masterpiece of the Transnational Korean Community
Over 25 Years Jongyoung KIM 187
- Indonesian Studies in Korea, Written in Bahasa Indonesia!
..... Jeonghun JEONG 193
- Invisible Migrant Workers beyond Perilla Leaves
..... Kyunghwan BOO 201

■ Appendix / 209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가 아세안중심성 (ASEAN Centrality)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 동 업**

국문초록

이 논문은 아세안의 소다자주의가 아세안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아세안중심성은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지역 문제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소다자주의는 아세안 내에서 특정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국제협력 형태를 의미한다. 소다자주의의 부상이 아세안중심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소다자주의가 협력의 분야와 형태에 따라서 아세안중심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또한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탈냉전 이후 본격화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는 최근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동일한 입장에 있는 한국과 아세안이 보다 긴밀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접근이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다자주의 협력을 추진해 가야함을 주장한다.

주제어: 아세안, 한-아세안 관계, 소다자주의, 아세안중심성, 미·중 전략경쟁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1087076).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부교수 겸 아세안연구원 원장. dykim@bufs.ac.kr

I. 머리말

본 연구는 최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국제관계에서 약화되고 있는 다자주의를 대신하여 부상하는 소다자주의가 아세안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다자주의가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전략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은 동남아시아의 국가 연합체로서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 창립하였다. 이후 회원국을 확대하여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함으로써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여 아직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동티모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이 되었다. 지리적으로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선박 항로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중동, 유럽, 호주 등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 간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Chalk 2015: 17).

아세안은 출범 이후 지난 56년 동안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동안 아세안 회원국 간의 이렇다 할 무려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이러한 평화를 바탕으로 많은 해외 투자의 유입과 함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신생독립국으로서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회원국들이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아세안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합의와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한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강대창 외

2011). 물론 이러한 원칙과 의사결정 방식은 아세안의 합리성과 효율성 면에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10개 주권 국가를 하나의 연합체 안에 묶어두는 데에는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 아세안은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에서 의미 있는 행위자로 취급받아 왔다(이재현 2022: 4). 아세안은 특정한 단일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역 다자주의에 다양한 세력을 끌어들이며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균형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로써 아세안은 개별국가로는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고유한 전략을 통해 강대국들에 대해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해 온 것이다(Goh 2013; 이신화 · 이양호 2017). 그러나 근래 이러한 아세안의 전통적인 지위와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회원국인 미얀마에서 2021년에 발생한 쿠데타와 이후 자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다루는 아세안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며 그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까지 불러일으켰다(Davies 2021; Thitinan 2021; 배기현 2022).

대외적으로도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아세안 주변국으로의 영향력 확장, 그리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아세안 회원국과의 분쟁 등은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균열을 낳기도 했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는 이해 당사국과 여타 회원국 사이의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국 간에도 중국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Tan 2018). 그 결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가 아세안 역사상 최초로 2012년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의장 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아세안은 2008년 아세안헌장 발효와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 등 아세안 통합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내부 분열과 불일치는 지역 문제에 관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에 의

구심을 불러일으켰다(이숙연 2020: 235).

최근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아세안 지역은 역외 강대국 간 경쟁의 장으로 변화하였고, 조정자 역할을 했던 아세안의 위상이 도전받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주도의 지역 다자협력 체제의 약화는 새로운 방식의 협력체제, 특히 이해를 공유하는 소그룹 국가들 간의 소다자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관계 형태 가운데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는 소규모 다자주의를 의미하며, 세 국가 이상이 참여하는 협력 방식으로서 양자주의(bilateralism)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구분될 수 있다.¹⁾ 소다자주의는 이미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특정 이슈와 국익을 중심으로 아세안 내 일부 회원국만 참여하는 소지역주의(subregionalism) 형태로 기능하고 있다. 아세안의 소지역주의는 아세안 회원국 간의 다양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다루고, 아세안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이러한 소지역주의는 기능적 차원에서 “아세안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자원(building blocs)”으로 간주한다.²⁾

아세안은 2008년 아세안 헌장을 제정하면서 제21조 1항에 ASEAN-X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소다자주의를 포용했다. 아세안에 있어서 소다자주의는 다자주의가 가지는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이해 당사자들 혹은 ‘같은 생각을 가진’(like-minded) 국가들끼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체제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체 회원국 중의 일부만이 참여하여 개별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아세안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

1) 본 논문에서 사용한 소다자주의의 개념적 의미와 범위는 다음 장에서 다루었다.

2) 까오 김 후은(Kao Kim Hourm) 아세안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서 “아세안 소지역은 아세안의 building blocs”이라고 했다. 2023.06.16.일(부산, 파크 하얏트 호텔).

가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강대국이 주도하는 소다자주의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은 아세안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다자체제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과 미국의 아세안에 대한 접근 방식도 아세안중심성의 약화에 일조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강화되어 자국을 봉쇄하는 것에 경계한다. 무엇보다도 남중국해의 해상 무역로와 잠재적 에너지 자원은 자국의 핵심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과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본다(Chalk 2015: 14). 이러한 입장에 있는 중국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제도화된 다자주의 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여지가 크다(Acharya 2013: 21; Chalk 2015: 23). 미국은 탈냉전 시대 태평양 지역 동맹체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SFS) 하에서 동맹국 간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해양안보, 역외균형, 그리고 지속발전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세계전략에 대응하여 아시아-태평양이란 지리적 개념을 인도-태평양으로 재설정하고 축과 살(hub-and-spokes)로 대변되던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 중심의 대외 관계와 더불어 3자 혹은 4자 관계에도 적극 참여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Hemmings 2020: 145-6). 쿼드(Quad)와 오크스(AUKUS)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들은 아세안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세안 회원국이 배제된 안보 협의체로서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체제를 약화시킬 여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아세안은 내부 결속(unity)을 통해 지역의 다자체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원칙이 곧 ‘아세안중심성’이다. 아세안의 역내·외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소다자주의가 아세안중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향후 아세안의 입지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가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아직까지 아세안의 소다자주의가 아세안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기 힘들며, 소다자주의와 아세안중심성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들은 국내외에 다수 존재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양자 혹은 다자체제와 같은 지역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아세안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진화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공유하는 소규모 국가들 간의 소다자주의 협력은 아세안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강화하여 결국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Heydariian 2017; Lin and Lee 2023; Naim 2009). 반면, 아세안 내의 소지역 그룹이 서로 경쟁함으로써 전체 아세안과 분리된 자체 지역 구조를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분열을 초래하고 지역 이슈를 주도하는 추진체로서의 아세안의 역할과 능력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Jose and Prasetyo 2021; Chen 2021; Ha 2022).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아세안 소다자주의는 그 범위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아세안 내부의 소지역 개발과 관련된 소다자주의와 아세안 주변에서 부상하고 있는 퀴드나 오커스와 같은 소다자 협력을 동일한 소다자주의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소다자주의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세안 소다자주의가 아세안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에 한정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한국에게 아세안 지역만큼 강대국 간의 전략경쟁 속에서 전략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은 없을 것이다. 또한 아세안 지역만큼 한국의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가 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곳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Lee and Park 2017; Howe and Park 2019: 119). 그러나 한국은 아세안이나 동남아 지역 전략에 있어서 소극적이었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재현 2018;

이지영 2018). 이는 그동안 한국의 대 아세안 접근이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각각 안보문제는 아세안 차원의 다자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경제문제는 주로 개별국가 차원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보와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체계적인 대 아세안 협력 전략으로 소다자주의가 제시되기도 한다(김동엽 2022).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약화되는 아세안 주도의 다자주의를 대신하여 주목받고 있는 소다자주의 협력에 관해 알아보았다. 특히 소다자주의가 아세안이 대외 관계의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는 아세안중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아세안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다자주의의 유용성과 그 추진 방향에 관해 논하였다. 본 머리말에 이어 제2절에서는 아세안중심성과 소다자주의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두 개념 간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논하였다. 제3절에서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근래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아세안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다자주의 협력이 아세안중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아세안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한국의 대 아세안 외교 전략으로서 소다자주의 협력의 의미와 방향에 관해 논하였다. 마지막 제5절에서는 논문의 논지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기존 문헌과 언론기사, 그리고 다양한 공공자료 등을 참조하여 논지를 구성하였으며, 이론의 검증보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II. 아세안중심성과 소다자주의

탈냉전과 더불어 아세안이 역외 국가들과 협의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아세안중심성 개념은 지역협력체계 구축과 다자협력체 발전에 있어 아세안이 추동력을 가지고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스스로의 원칙과 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과 규범 하에 1994년 아세안지역포럼(ARF), 1995년 동남아 비핵지대조약(SEANWFZ), 1997년 ASEAN+3,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2010년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 그리고 2012년에 확대아세안해양포럼(EAMF) 등 아세안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지역 정치·경제협력체를 구축하였다. 아세안중심성과 유사한 의미로서 ‘주요 추진체’(primary driving force)라는 표현이 1994년 ARF 기획안(concept paper)에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후 ‘운전석’(driver’s seat)이나 ‘중심적 역할’(central role), 그리고 ‘중심성’(centrality)이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문서에서 등장했다. 아세안중심성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등장한 것은 2011년 아세안+3 의장성명이며, ARF와 EAS의 의장성명에서는 2018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Acharya 2017: 273-274; 이신화·이양호 2017: 127; 이재현 2022: 4).

아세안중심성은 강대국을 포함한 지역 다자협력에서 아세안의 지위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아세안은 2003년 발리선언(Bali Concord II)을 통해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2008년에 아세안헌장(ASEAN Charter)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초로 2015년에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그리고 사회문화공동체 등 3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공동체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아세안은 명실 공히 회원국 공동의 이해를 국제사회에서 대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아세안은 여전히 합의된 행동을 외부에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로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Weatherbee 2012: 4). 이는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 상호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의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의 금지, 회원국 간의 조정 및 합의에 따른 정책 결정으로 대변되는 고유한 ‘아세안 방식’(ASEAN Way)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김동엽 2022: 256).

대외적으로 아세안의 내부적 통일성(ASEAN unity)은 아세안중심성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아세안 10개국이 통일된 하나의 목소리로 외부 세력과 상호 작용하고 협상할 때 아세안 10개국의 집단적 지지를 얻으려는 외부 세력은 지역 다자협력체에서 아세안이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역할을 한다는 아세안중심성 개념을 지지한다. 따라서 아세안의 내적 통일성은 대외적 메시지인 아세안중심성의 전제조건이 된다(Laksmana 2016; 이재현 2022: 3).

한편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크게 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양자관계와 세 개 이상의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관계로 구분된다. 물론 다자관계 내에서도 양자 간 관계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 테일러(Taylor 1987)에 따르면, 비교적 큰 수의 행위자들 간의 협력은 작은 수의 행위자들 간의 협력만큼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행위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이해관계가 관여되고, 이들을 모두 효율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자적 협력이 양자적 협력보다 일부 국가의 기회주의적 행태나 무임승차를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Caporaso 1992: 609-611).

일반적으로 강대국일수록 양자관계를 선호하며, 양자 관계는 약소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등장한 다자주의는 1945년부터 시작된 탈식민주의에 기초한 또 다른 원칙 즉, ‘주권 평등의 원칙’과 연결된다(Kahler 1992: 681). 다자주의는 국가 간 평등의 원칙하에 다수결 투표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주의적 국제레짐 안에서도 강대국들의 이해는 일부 소다자주의 제도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Kahler 1992: 704). 소다자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행위자 간의 합의와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않을 때,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행위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국제협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축소된 다자주의라고 할 수 있다(김동엽 2022: 255). 소다자주의는 역사적으로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기존의 다자간 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Anuar and Hussain 2021: 5). 이처럼 소다자주의는 보다 큰 다자주의에 내재해 있지만, 참가하지 않는 구성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참가하는 구성원이 제도적 규범을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Kahler 1992: 707). 소다자주의는 신속하고 유연하며 혁신적인 실험 정신에 기반하여 탄생했으며, 엄격한 규범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점차 둔해지는 다자주의에 대비하여 발전했다(Anuar and Hussain 2021: 2).

반면 소다자주의는 다자주의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제도화 수준이 낮아서 안정성의 문제가 있으며, 유연하고 비위계적 구조로 인해 지도력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비공식성과 개인적 인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소다자주의는 당사자의 직위 변화나 정권의 변화에 따라 위기에 노출될 수도 있다. 소다자주의가 국제기구나 규칙기반 질서를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만연한 포럼 쇼핑을 통해 공공재보다는 소그룹 이익을 증진하며, 법적 제한의 부재로 낮은 책임성을 드러낼 수도 있고, 배타성으로 인해 도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Anuar and Hussain 2021: 4-5).

인식론적 측면에서 소다자주의를 단순히 참여자의 수와 행태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³⁾ 소다자주의 또한 일종의 다자주의이기 때문

3) 소다자주의는 보다 스마트하고 목적 지향적(targeted)인 접근법이므로 목적 달성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의 국가를 소다자주의의 매직 숫자로

이다. 따라서 다자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소다자주의를 인식하는 것이 개념적 명확성을 위해 도움이 된다. 즉 소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모그룹을 먼저 상정하고, 그 모그룹 중 일부가 새로운 협력 기제를 형성할 때 이를 소다자주의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다자체제 내에서의 소다자주의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된 협의체를 다자주의로 간주하고, 10개 회원국 중 일부만 참여하는 협의체를 소다자주의로 간주한다.

그럼 다자주의 체제 내에서 작동하는 소다자주의는 모체인 다자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소다자주의의 효율성이 다자주의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다자주의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소다자주의는 다자주의 체제 내부 구조들 간의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므로 다자주의 체제 자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Anuar and Hussain 2021: 7). 이처럼 소다자주의는 모체인 다자주의 체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다자주의가 모체인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상호관계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아세안의 소다자주의도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다자체제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 양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소다자주의 협력의 범위와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여 아세안중심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세안의 대외 관계에서 작동하는 아세안 중심성의 핵심 요소로서 아세안의 내부적 통일성이 있다. 소다자주의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회원국 간의 경쟁과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보기도 한다(Naim 2009: 135).

내부적 통일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아세안 소다자주의의 목적과 작동원리가 아세안의 내부 통일성을 증진시켜 대외적으로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세안의 통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다자주의적 협력 분야는 아세안공동체의 추진 방향과도 일치하는 회원국 간 혹은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줄이는 개발협력 분야와 국가 간 상호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비전통안보 분야의 소다자 협력일 것이다. 비전통 안보 분야의 소다자주의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특히 환경문제, 재난, 범죄, 해양 안전 등 타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분야에서 이해 당사국 간의 소그룹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소다자주의 협력의 조직과 운영 원리도 아세안공동체의 기본적인 정신 하에서 상호 존중과 개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세안 소다자주의가 적은 수의 국가들 간의 더 깊은 협력을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통합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역, 투자, 연결성과 같은 분야에서 아세안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반면 소다자주의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의 포용성과 일관성을 약화시킬 경우 아세안 통합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소다자주의가 투명하고 기존 아세안 프레임워크를 보완하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소다자주의가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다자주의의 결과가 보다 넓은 범위의 다자주의 체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Anuar & Hussain 2021: 5).

Ⅲ. 아세안 소다자주의 협력 현황과 아세안중심성

아세안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탈냉전

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안보 중심의 지역주의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리적 인접성과 개발 현안을 공유하는 초국가적 영역을 중심으로 소다자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Dosch and Hensengerth 2005: 263). 이 시기 아세안은 아직 소위 CLMV로 불리는 구공산권 후발주자들이 가입하기 이전이었다. 따라서 당시 아세안의 다자적 범위는 5개 창립 회원국과 1984년에 가입한 브루나이 등 6개국에 한정되었다. 이들 아세안 회원국 간의 경제 구조적 보완관계를 이용한 소지역(subregion) 협력으로 소다자주의가 시작되었다. 아세안의 소지역주의가 경제개발 수준이 다른 국가로 이루어진 아세안의 통합을 위한 독특한 해결책이며, 중앙정부와 역외 국가들과의 강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보기도 한다(Wadley and Parasati 2000: 333).

아세안 지역에서 나타난 최초의 소지역주의는 1989년에 경제적 배후지를 만들려는 싱가포르의 제안으로 설립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성장지대(IMS-GT)였다. 이후 1993년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성장지대(IMT-GT), 1994년에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시아성장지역(BIMP-EAGA), 그리고 1995년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을 회원국으로 하는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iver Committee)가 발족하여 초국가적 소지역 개발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김동엽 2022). 아세안 전체가 아닌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일부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으로 시작된 소다자주의는 아세안 통일성을 증진시켜 아세안중심성의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아세안 소지역 경제협력 이니셔티브는 무역, 투자, 관광, 운송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기능적 차원에서 이는 특정 지역의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춰 향후 아세안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협력모델의 시험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아세안 메커니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소다자주의 협력이 아세안중심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대륙부의 메콩 소지역(GMS)과 해양부의 동아세안성장지역(BIMP-EAGA)을 들 수 있다. 이 두 사례는 아세안 회원국 내부의 협력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외부로부터 경쟁적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아세안의 개발 삼각지대(GT)와 구분된다.

메콩강은 아세안 대륙부 5개 회원국을 관통하고 있는 국제하천으로서 이의 보전과 개발에 대한 관심은 아세안이 창설되기 이전인 1957년에 유엔의 중재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을 회원으로 하는 하부메콩유역조사위원회(The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Investigations on the Lower Mekong River Basin)가 발족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냉전 시대와 베트남 전쟁, 그리고 캄보디아 내전 등으로 인해 본 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결국 탈냉전 시기가 되어 1995년 4월 5일에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태국의 치앙라이에서 메콩 협정(The Mekong Agreement)에 조인하고, 메콩강위원회(MRC)를 발족시킴으로써 소다자 기구가 출범하였다. 1996년에는 나머지 메콩 유역국인 중국과 미얀마가 대화상대(dialogue partner)로 MRC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MRC는 메콩강의 수자원 보호와 개발에 관한 정보교류와 개발협력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2010년부터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정상급 기구로 발전했다(MRC 홈페이지).

메콩강 소지역을 둘러싼 소다자 협력체제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동남아 지역의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확장과 위상 강화에도 기여했다. 국제하천의 공동 관리라는 기술적 목적 하에 당시 아세안 회원국이었던 태국이 포함된 소다자 협의체로서 출범한 MRC는 냉전시대 동남아 지역에

서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간주되었던 베트남을 아세안 다자주의 체제로 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5월 MRC의 출범과 그해 7월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 그리고 또 다른 메콩강 유역 국가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으로 이어졌다. MRC가 이해 당사국인 미얀마와 중국을 대화 상대국으로 포용하는 개방적 거버넌스를 통해 소다자주의의 폐쇄성을 지양하고 아세안의 분열적 요인을 제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메콩강의 평화적 관리와 개발을 목적으로 형성된 메콩 소지역은 다양한 역외 세력들의 관심과 투자를 유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메콩 소지역은 태국을 제외하고 아세안의 후발주자로서 경제적 개방과 함께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위해 외부의 지원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었다. 대부분의 외부 투자가 국경을 초월한 도로나 철도, 교량과 같은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었다. 이는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었지만, 아세안의 입장에서 회원국 간의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회원국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아세안의 통합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등 다양한 외부 세력이 경쟁적으로 메콩 소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재자로서의 아세안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아세안의 소다자 협력이 아세안 다자체제와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은 2008년 아세안 헌장을 제정하면서 ASEAN-X 규정을 명시하여 아세안 소다자주의를 제도적 차원에서 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아세안 전체의 차원에서 조율하기 어려운 역내 특정 사안인 메콩강 보전과 개발에 직접 이해 당사국과 관심 있는 역외 국가 간의 다양한 소다자협력을 통해 전체로서의 아

세안의 통일성을 증진하고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양부의 BIMP-EAGA의 경우 1992년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필리핀의 라모스(Fidel V. Ramos) 대통령이 해양 동남아시아 국가 간 해상연계성, 안보 강화와 낙후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리핀 남부와 인도네시아 동부, 말레이시아 동부를 연결한 성장삼각지대(GT) 구축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1993년 10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과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동 아세안성장지역(EAGA)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고, 11월 브루나이도 참여에 동의하면서 1994년에 BIMP-EAGA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여기에 포함된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동칼리만탄, 서칼리만탄, 북술라웨시, 말루쿠(Maluku)와 파푸아(Papua), 말레이시아의 사바, 사라왁, 라부안, 필리핀의 민다나오, 팔라완 그리고 브루나이 다루살람 전 지역이다. 이 지역은 회원국 영토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인구는 약 20% 미만이 거주하는 낙후된 주변부에 속한다. 국가 전체가 포함된 브루나이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지리적으로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비록 국가는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서로 간에 문화적 유사성도 크다(ADB 2013; 구보경 2022: 195).

BIMP-EAGA는 설립 초기 느슨한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와 곧이어 닥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각국의 내부적 혼란 등으로 인해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BIMP-EAGA의 개발 고문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2003년에는 말레이시아 코타 키나바루에 조정사무소(BIMP-EAGA Facilitation Center)가 개설되었고, 연례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 최초로 수립한 BIMP-EAGA 개발 로드맵(2006-2010)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전기

가 되었으며, 2007년에 ADB가 지원하여 개발 로드맵을 재조정하고 경제회랑 건설을 승인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비전 2025를 수립하여 지역 내 새로운 운송 경로와 항공 연결을 통해 무역·투자·관광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BIMP-EAGA 2017).

BIMP-EAGA 소다자 협력은 아세안의 다자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륙부 아세안의 MRC와 대비하여 해양부 아세안의 BIMP-EAGA는 아세안의 초기 회원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브루나이를 제외하고는 각국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동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아세안의 통일성을 증진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BIMP-EAGA는 그 운영 목표를 회원국의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과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지역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경을 넘어 사람,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상호 간 무역, 관광 및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 간의 경제적 보완관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인프라 시설과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BIMP-EAGA 홈페이지).

BIMP-EAGA 지역은 각 회원국의 주류 사회와 역사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낙후로 인해 차별의식이 강하며,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안보 불안이 존재하는 곳이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의 다약족(Dayak)과 마두르족(Madurese) 간에 1988년 종족 갈등이 발생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 사이 술라웨시의 포소(Poso), 말루쿠의 트르나테(Ternate), 바찬(Bacan), 암본(Ambon) 그리고 서파푸아는 분리주의와 같은 지역적 갈등을 경험하였다. 필리핀 민다나오섬은 모로(Moro) 이슬람 반군 단체와 필리핀 정부군 간의 무력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필리핀의 라모

스 대통령이 GT를 제안한 것도 오랜 분쟁으로 낙후된 민다나오 무슬림 지역의 경제발전과 평화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Bhakti 2010; 구보경 2022: 267-8). 또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국가 간 국경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된 곳이기도 하다. 보르네오(칼리만탄) 지역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분쟁과 사바 지역을 둘러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간의 영토 분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안보 위협이 공동 개발을 목표로 한 소다자 협력을 통해 감소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BIMP-EAGA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은 지방정부와 민간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토록 함으로써 중앙 엘리트 중심의 아세안 운영 체계에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견고한 아세안공동체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IMP-EAGA 연례 정상회담이 아세안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개최됨으로써 아세안 다자체제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다양한 역외 국가들의 관심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아세안에 대한 외부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Bing 2021; 구보경 2022: 186). 이처럼 BIMP-EAGA 소다자 협력은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또한 개발과 관련된 역외 세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아세안 소다자주의가 기능적 측면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안보적 측면에서의 소다자주의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ARF나 APT, EAS나 ADMM+ 등 아세안 주도 지역 다자체제는 참가국들의 합의를 중시하는 메커니즘으로 인해 지역안보에 관한 긴급한 현안이라고 할지라도 안건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다자체

제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갈등 해소보다는 갈등 회피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부분의 참여국이 민감한 군사안보 문제는 양자회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신화·이양호 2017: 129-30). 이는 안보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민감성 때문이기도 하다. 전통적 안보(traditional security) 문제의 특수성은 상대적이라는 데 있다. 즉 일국의 안보능력 강화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국 안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안보는 국가의 직접적인 생존과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세안 지역에서 여러 국가들이 관여된 전통적인 안보문제는 남중국해(SCS: South China Sea) 문제이며,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아세안중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SCS 문제는 아세안 회원국 내의 이해 당사국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4국가 간에도 소다자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역외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이들의 입장이 여타 회원국의 입장과 상이할 수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사례가 2012년 소위 ‘프놈펜 참사’라고 불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의 의장성명 합의 불발 사건이다. 비록 인도네시아의 셔틀외교를 통해 뒤늦게나마 아세안 공동성명을 채택할 수 있었지만 2008년 아세안헌장 발효와 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내부 분열과 불일치는 언론과 학계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체제의 신뢰도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이숙연 2020: 235).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일부 학자들은 아세안중심성이 단지 신화(myth)이며, 아세안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Acharya 2017).

최근 동아시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도 SCS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 중국 해군이 유럽 주변 해역까지 군사력을 투사할 능력

을 갖추고 아세안은 집단적 해군력으로도 중국에 대적할 수 없게 되면서 SCS 안보 문제의 근본적 속성은 중국과 아세안의 영유권 분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변모하였다(이숙연 2020: 229). 특히 근래 미·중 전략경쟁의 강화와 함께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이 아세안 주도 다자체제와 분리된 군사 및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아세안중심성이 약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반면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분야에서의 소다자주의 협력은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⁴⁾ 아세안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 하에서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소다자주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긴급한 도전에 대해 다자체제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ARF와 같은 전통적인 다자간 안보협의체는 지역 안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종종 다양한 국가 간의 합의 필요성과 느린 의사 결정 속도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반면에 소다자주의는 당면한 문제에 더 유연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대테러, 재해 구호, 해양 안전과 같은 특정 영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다자주의는 ARF와 같은 아세안 다자체제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아세안중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들로 아세안 내의 반테러정보협의체(Our Eyes)와 말라카해상순찰대(MSP: The Malacca Strait Patrol)를 들 수 있다. Our Eyes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Five Eyes)를 벤치마킹하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제안으로 슬루-슬라웨시 해역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간 3자 안보 협의체(Three Eyes)로 시작하여, 이후 브루나이와 싱가포르가 합류한

4) 안보(security)의 정의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포괄적 안보 개념에 따라, 경제안보, 인간안보, 식량안보 등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선 비전통 안보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안보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생략하였다.

아세안 6개국의 반테러정보협의체이다(Prashanth 2018). 2018년 10월 제12차 ADMM에서 아세안 10개국 국방장관은 Our Eyes에 합의하고, 기존에 구축됐던 ‘공해상의 우발적인 해상분쟁 대응기구’(CUES)와 더불어 추가로 ‘영공상의 군용기 충돌방지 대응네트워크’(GAME)에 서명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아세안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최수진 2018).

한편, 말라카해협은 전 세계 연간 총 해상 무역량의 거의 절반과 아시아 석유 수입량의 70%가 통과하는 전략적 의미가 큰 해협이다. 따라서 말라카해협의 안보는 연안 국가, 사용자 국가 및 국제사회 모두가 관여된 공동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말라카해협해상순찰대(MSP)를 출범하였다. 회원국 해군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작전 수행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의심스러운 접촉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해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MSP는 2008년 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개방적 특성을 드러내고,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을 통해 회원국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아세안 소다자 해상 안보협의체는 2010년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세안해상포럼(AMF: ASEAN Maritime Forum) 출범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출범한 확대아세안해상포럼(EAMF: Expanded ASEAN Maritime Forum)에는 EAS 10개 회원국 정부와 비정부 단체(NGO)들이 참여하는 아세안 주도 지역 안보협의체로 발전했다. AMF의 확장과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의 와중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입됨으로써 EAMF의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도 있다(Singh 2022). 비록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그 기능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EAMF는 해상 안보분야에서 아세안 소다자주의가 중심이 되어 아세안 전체와 주변 국가들을

포함하는 다자 안보협의체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아세안 소지역주의가 아세안중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의 소다자주의는 경제협력 분야와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전통적 안보분야는 그 상대성과 민감성으로 인해 소다자주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강대국과의 관계에 따라 아세안 내부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아세안중심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세안은 동아시아의 지역 안보와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그 중심성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의 소다자주의 협력은 아세안이 지역 문제에 있어서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입장과 생각을 가진 역외 국가들과의 건설적이고 유연한 소다자 협력 강화를 통해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IV. 한국의 대 아세안 소다자주의 협력과 아세안중심성

한국은 이미 아세안 소지역인 메콩국가 및 BIMP-EAGA와 소다자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메콩국가와의 관계는 2010년대에 들어 본격화했으며, 2011년 10월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상호 번영을 위한 한-메콩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선언’(The Han River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한강선언에서는 인프라, 정보통신, 녹색성장, 수자원개발, 농업 및 지역 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6개 분야를 협력 대상으로 선정했다(유현정 2020: 21). 2013년에 조성된 한-메콩

협력기금(Mekong-ROK Cooperation Fund)은 최초 100만 달러로 시작했으나, 2019년 200만 달러로 증액되었고, 2020년 300만 달러, 2021년 4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신남방정책 시기(2017년~2022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태국·라오스·미얀마를 방문하면서 ‘한-메콩 비전’(Mekong-ROK Vision)을 발표한 바 있다. 한-메콩 비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 번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요한 2022: 45).

메콩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아세안공동체의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개발 협력, 특히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The Mekong-Han River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서는 7대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 한강선언과 다른 점은 수자원 개발과 녹색 성장이 삭제되고, 문화관광, 환경, 비전통 안보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한-메콩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인 협력을 제도화하였다(이요한 2022: 46). 이처럼 한-메콩국가 협력은 한-아세안 다자간 협력의 큰 틀 하에서 소다자주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20년 11월에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해양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한-해양동남아 소지역 협력 구상 및 협력기금 조성’을 발표하였다. 아세안의 선발 국가들로 구성된 해양동남아 국가들 내에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BIMP-EAG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이 해양동남아의 균형적,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를 자임하는 한국 정부의 해양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10월 제1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OM)를 계기로 한-BIMP-EAGA 협력을 공식화하고, BIMP-EAGA와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해양동남아 4개국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녹색 성장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협력기금 기탁처로 선정하였다(구보경 2022: 186).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은 2021년에 100만 달러로 시작하여 2022년과 2023년에는 300만 달러, 그리고 2027년까지 600만 달러로 증가될 예정이다. 본 협력기금은 환경, 관광, 연계성, 그리고 농수산업 분야 등 4대 중점협력 분야의 협력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한-BIMP-EAGA 협력 포털).

한국의 대 아세안 소다자주의 협력을 대변하는 메콩국가와 BIMP-EAGA와의 협력은 주로 개발 협력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아세안 내에서도 두 소지역 협력의 주요 목적이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 건설과 발전을 통해 아세안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개발 격차를 줄임으로써 아세안 통합의 기초를 다진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향후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영역이 개발 협력 분야에만 머무를 수 없다. 2019년 한-메콩 정상회담에서 비전통 안보 분야의 도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아세안 소다자 협력이 소지역 내에서의 개발 협력을 통한 아세안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비전통적 안보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점차 아세안 중심의 다자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강대국의 전략적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통해 강대국에 대한 협상력(leverage)을 확보하려 한다면 아세안중심성의 유지 및 강화가 중요하다(이재현 2022: 2).

특히 다자협력 틀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아세안중심성 강화를 위해 한국과 아세안의 소다자 협력도 아세안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약화되는 아세안중심성은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고민 중 하나이다. 아세안중심성의 약화가 한국의 국익과 관련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아세안이 이러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한국은 아세안중심성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다자체제에 대한 지지를 보냄으로써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21: 92).

한국 정부는 2022년 11월 외교 전략의 중심틀로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탈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체제의 변화 움직임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전략적 선택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⁵⁾ 인태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며, 아시아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이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강조하며, 9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⁶⁾(인태전략 2022).

한국 정부는 인태전략의 세부 이행을 위한 ‘한-아세안 연대구상’

5)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국 전체 수출액의 78%, 수입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20대 교역 대상국 중 과반수가 위치하고,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66%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물류 통로가 다수 존재하며, 그중에서도 남중국해는 우리나라 원유 수송의 64%와 천연가스 수송의 46%를 차지하고 있다(인태전략 2022).

6) 9대 중점과제는 ①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구축, ②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③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④ 포괄안보 협력 확대, ⑤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⑥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⑦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⑧ 맞춤형 개발 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⑨ 상호이해와 교류 증진 등이다.

을 발표하면서 아세안을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가꾸기 위한 주요 파트너로 지칭했다. 향후 통상과 기능적 협력을 넘어 아세안에 특화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주요 목표로 ① 규칙기반 질서 증진 및 역내 평화 체고를 위한 협력 강화, ② 배터리, 전기차, 디지털 등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증진, ③ 기후변화·보건 협력에 대한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천 의지로 향후 5년에 걸쳐 한-아세안 협력기금, 한-메콩 협력기금,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을 두 배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인태전략 2022). 이러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한-아세안이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대국 간의 전략경쟁 속에서 서로의 안보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통적 안보 차원의 협력 강화는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나 환경문제, 보건과 자연재해 문제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부터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슈와 관심 영역에 따라 소다자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아세안 체제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동엽 2023).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외신들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가치외교로 선회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이는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입장(AOIP)에서 추구하고

7)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약 1,600만 달러(2022년 기준)에서 연 3,200만 달러로, 한-메콩 협력기금은 약 500만 달러(2022년 기준)에서 연 1,000만 달러로,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은 약 300만 달러(2022년 기준)에서 연 600만 달러로 증액할 예정이다.

있는 중립성과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우리 정부의 ‘아세안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 표명이 수사에 불과하다는 불신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아세안은 회원국 간의 상호 불간섭과 주권 존중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한다. 이는 이념과 체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아세안의 원칙에 기초한다. 한국 정부가 가치외교를 명분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한다면, 다양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아세안과의 원활한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아세안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지역 다자체제에서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려는 아세안의 전략과 대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따라 과거 기술과 노동 그리고 투자의 수직적 상호보완 경제 관계에서 벗어나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 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강대국 간의 기술 패권과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호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한-아세안 경제관계는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와 특정 국가 위주의 편향된 경제협력 관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 역량을 아세안이 지역 안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소지역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메콩국가와 BIMP-EAGA와 같은 소다자 기구들과의 협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호 협력 관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엽 2023).

셋째,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은 공공외교의 확대와 더불어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의 증가한 교류의 양에 비해서 상호 인식과 신뢰의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⁸⁾

인식의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상호 교류의 기회를 더욱 많이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김동엽 2023). 아세안 소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은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소지역 단위의 인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더불어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의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오늘날 국제사회는 소위 신냉전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국제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의지와 역량이 있는 강대국과는 달리 한국이나 아세안과 같은 약소국의 경우 제한된 선택지 가운데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유사한 입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은 상호 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

8) 2021년 한-아세안센터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청년 상호인식조사에 따르면(한-아세안센터 2022), 아세안 청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90.4%로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 청년의 아세안에 대한 관심은 5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에서 아세안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동남아조사보고서(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3 Survey)에 따르면(Seah, S. et al. 2023),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 또한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2023년 설문 중,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아세안이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제3국은 어느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3.2%)은 EU(42%), 일본(26.6%), 인도(11.3%), 호주(9.3%), 영국(6.8%) 다음으로 선택국가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아세안 여론 주도층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의 추이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021년 조사에서 한국은 3.2%를 얻어 7개 선택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으며, 2022년 조사에서는 6.8%를 획득하여 6개 선택국가 중 인도를 제치고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다시 2023년 조사에서 3.2%로 떨어져 최하위로 밀려났다(김동엽 2023).

아세안은 역사적으로 주변국에 위협적인 존재였던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신냉전 시대에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을 주도할 가장 유력하고 합리적인 전략적 동반자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공식 관계 수립 이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크게 증진해 왔다. 오늘날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처럼 양적으로 성장한 한-아세안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질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아세안이 형식적인 만남과 피상적인 선언을 넘어 보다 긴밀한 상호 협력이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전략으로서 소다자주의는 실질적 협력을 통한 상호 간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소다자주의는 교착상태에 빠진 다자주의와 다시 결합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그동안 아세안이 주도해 온 지역의 다자체제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전략은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아세안과의 소다자주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의 장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이라는 광의의 외교 현장에서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창·박나리·유현석·김형중·이동윤. 2011. 『ASEAN의 의사 결정 구조와 방식』. 대외경제연구원(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 구보경. 2022. “아세안 소지역협력의 제도화 과정과 함의: BIMP-EAGA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5(2): 185-208.
- 김동엽. 2022. “한국의 새로운 대 아세안(ASEAN) 협력 전략. 중견국 외교를 통한 소다자주의적 접근.” 『아시아연구』 25(1): 215-270.
- 김동엽. 2023. “신냉전 시대 전략 동반자로서 한국과 아세안 관계.” 아세안연구원 이슈페이퍼 No.15 (2023.05).
- 문화체육관광부. 2023.05.17. “외신이 본 윤석열 정부 1년.” 보도자료.
- 배기현. 2022. “아세안 2021: 흔들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가치회복의 노정.” 『동남아시아연구』 32(2): 1-33.
- 유현정. 2020. “아세안 메콩강 개발 협력체 분석과 우리 정부의 한-메콩 협력 방안.” 『INSS 전략보고』 60.
- 이숙연. 2020. “미·중 경쟁 시대 ‘아세안 중심성’ 확보를 위한 군사 협력 발전 현황과 원인 분석.” 『국제학논총』 32: 213-247.
- 이신화·이양호. 2017. “지역다자주의 틀에서의 미-중 경쟁과 한국의 다자안보전략구상: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의 교훈.” 『담론201』 20(2): 105-141.
- 이요한. 2022. “한국의 아세안 소지역(sub-region) 협력 거버넌스: 메콩 유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32(2): 31-58.
- 이재현. 2018. “아세안 2019: 어수선한 주변 환경, 꾸준한 통합 추진.” 『동남아시아연구』 30(1): 157-182.

- 이재현. 2022.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전략.” 『이슈브리프』 2022-26.
- 이지영. 2018. “일본의 대 ASEAN 전략의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28(4): 125-146.
- 인태전략. 2022. “인태전략 설명회 박진 장관 기조연설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https://www.kstudy.com/fbook/KCFR/145/15.pdf>.
- 최수진. 2018. “대테러연합 ‘아워아이즈’, 아세안 10개국 모두 뭉쳤다.” 『아시아경제』 10월 20일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2017145316844> (검색일: 2023.7.31.)
- 한-아세안 센터. 2022. 『2022 한-아세안 통계집』. 서울: 한-아세안 센터.
- Acharya, Amitav. 2013. “ASEAN 2030: challenges of building a mature 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y.” *Working Paper* 441.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Acharya, Amitav. 2017. “The myth of ASEAN central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39(2): 273-279.
- ADB, Asian Development Bank. 2013. *Regional and subregional program links*. Manila: ADB.
-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21. “Rebuilding ASEAN Centrality.” *ASAN International Security Outlook 2022*, 85-92.
- Anuar, Amalina and Nazia Hussain. 2021. “Minilateralism for Multilateralism in the Post-COVID Age.” *RSIS Policy Report*, January 2021.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Bhakti, Ikrat Nusa. 2010. “Indonesia-Philippines Bilateral Relations:

- Stable and Fully Cooperative.” Ramses Amer N. Ganesan (ed.),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east Asia: Between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BIMP-EAGA. 2017. *BIMP-EAGA VISION 2025*. Sabah: BIMP-EAGA FC.
- Bing, Ngeow Chow. 2021. “China’s growing cooperation with BIMP-EAGA.” <https://www.eastasiaforum.org/2021/09/23/chinas-growing-cooperation-with-bimp-eaga/> (검색일: 2023.07.10.)
- Caporaso, James A. 1992.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3): 599-632.
- Chalk, Peter. 2015. ASEAN Ascending: Achieving ‘centrality’ in the emerging Asian order. *STRATEGY*, Australia Strategic Policy Institute.
- Davies, Matthew. 2021. “Myanmar Exposes ASEAN’s Cheap Talk on Democracy.” *East Asia Forum*, February 4. <https://www.eastasiaforum.org/2021/02/04/myanmar-exposes-aseans-cheap-talk-on-democracy/> (검색일: 2023.07.10.)
- Dosch, Jorn and Oliver Hensengerth. 2005. “Sub-Regional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he Mekong Basin.”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4(2): 263-285.
- Goh, Evelyn. 2013. *The Struggle for Order: Hegemony, Hierarchy & Transition in Post-Cold War East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 Hoang Thi. 2022. “Understanding the institutional Challenge of

- Indo-Pacific Minilaterals to ASEA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44(1): 1-30.
- Hemmings, John. 2020. “The Evolution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the Indo-Pacific Since the Cold War’s End.” Alexander L. Vuving (ed.), *Hindsight, Insight, Foresight: Thinking About Security in the Indo-Pacific*. 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 Heydarian, Richard Javad. 2017. “Time for ASEAN Minilateralism.” RSIS Commentary. Singapor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Howe, Brendan and Joung Min Park. 2019. “South Korea’s (incomplete) middle-power diplomacy toward ASEAN.”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 Pacific Studies* 15(2): 117-142
- Jose, Hino Samuel and Sigit Aris Prasetyo. 2021. “A Strategic View of Minilateralism: Indonesia, Quad, ASEAN, South Korea, Japan, and Impediment to ASEAN Centrality?” *Jurnal Ilmiah Kajian Keimigrasian* 4(2). <https://journal.poltekim.ac.id/jikk/article/view/268/240> (검색일: 2023.07.10.)
- Kahler, Miles. 1992. “Multilateralism with Small and Large Numb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3): 681-708.
- Laksmiana, Evan. 2016. “Can there be ASEAN Centrality without Unity?” *The Jakarta Post*.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6/09/06/can-there-be-asean-centrality-without-unity.html>. (검색일: 2023.07.10.)
- Lee, S. and C. Y. Park. 2017.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for human security: A global and regional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4(1): 21-44.

- Lin Joanne and Laura Lee. 2023. "Minilateral Cooperation in ASEAN May Help it Overcome Challenges in Multilateralism." *PERSPECTIVE* 16. Singapore: ISEAS Yusof Ishak Institute.
- Naím, Moisés. 2009. "Minilateralism." *Foreign Policy* 173(July/August 2009): 135-136.
- Prashanth, Parameswarath. 2018. "The limits of minilateralism in Asean." *The Straite Times*. Feb. 15.
- Seah, S. et al. 2023.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3 Survey Report*. Singapore: SEAS-Yusof Ishak Institute.
- Singh, Gurjit. 2022. "The relevance of the Expanded ASEAN Maritime Forum."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the-relevance-of-the-expanded-asean-maritime-forum/> (검색일: 2023.07.31.)
- Tan, Seng. 2018. "Sending in the Cavalry: The Growing Militarization of Counterterrorism in Southeast Asia." *PRISM* 7(4): 138-147.
- Taylor, Michael. 1987.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itinan Pongsudhirak. 2021. "ASEAN's Myanmar Crisis out of Control." *Bangkok Post*. March 26. <https://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2089727/aseans-myanmar-crisis-out-of-control> (검색일: 2023.07.10.)
- Wadley, David and Hayu Parasati. 2000. "Inside South East Asia's Growth Triangles." *Geography* 85(4): 323-334.
- Weatherbee, Donald E. 2012. "Southeast Asia and ASEAN: Running in Place." *Southeast Asian Affairs* 2012: 3-22.

웹사이트

대한민국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index.do>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https://overseas.mofa.go.kr/asean-ko/index.do>

한-BIMP-EAGA 협력 포털. <https://www.bimp-korea.org:48260/>

ADB, Asian Development Bank. <https://www.adb.org/>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https://asean.org/>

BIMP-EAGA, Brunei-Indonesia-Malaysia-Philippine East ASEAN
Growth Area. <https://www.bimp-eaga.asia/>

MRC, Mekong River Commission. <https://www.mrcmekong.org/>

(2023.08.06. 투고, 2023.08.11. 심사, 2023.08.18. 게재확정)

<Abstract>

The Impact of Minilateralism on ASEAN Centrality: Strategic Implication on Korea's Approach to ASEAN

Dong–Yeob KIM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minilateralism on the ASEAN Centrality. ASEAN Centrality refers to the idea that ASEAN should remain at the center of regional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ASEAN minilateralism, on the other hand, refers to the emergence of sub-regional groupings within ASEAN that aim to deepen cooperation in specific areas. While ASEAN Centrality has been a fundamental principle of ASEAN's regional architecture, the rise of ASEAN minilateralism poses a challenge to this principle. This paper argues that ASEAN minilateralism can complement ASEAN Centrality in certain circumstances but can also undermine it in others. Applying it to the ASEAN-ROK relationship, which recently entered a new phase driven by the increas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Indo-Pacific region, this paper argues that Korea's approach to ASEAN should focus more on the minilateral cooperation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ASEAN centrality.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가 아세안중심성 (ASEAN Centrality)에 미치는 영향 37

Key Words: ASEAN, ASEAN-ROK relationship. Minilateralism,
ASEAN Centrality,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초국경 댐 개발에 관한 수자원 외교: 메콩강위원회(MRC)의 역할과 과제*

이 요 한**

국문초록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iver Commission)는 역내 유일의 하천유역 기구(RBO)로서 메콩강에 관한 정보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 협력의 중재와 원 활화의 역할을 맡고 있다. MRC는 1995년 메콩 유역국(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합의한 메콩 협약(Mekong Agreement)을 기초로 설립되었으며 현 재 4개 유역국은 정회원국(membership)으로, 중국과 미얀마는 대화상대국 (observer)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역내 유일의 초국가 기구인 MRC의 수자원 외교 측면에서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한계와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 을 둔다. MRC의 역할은 메콩강의 지정학적 환경, 관련국의 권력관계 등에 영 향을 받고 있다. 본고는 수자원 외교의 개념과 특성 등 이론적 논의를 개괄적으 로 정리하고 RBO로서의 MRC의 목표와 역할을 분석한 후, MRC의 수자원 외 교 프레임워크인 제도적, 법적, 전략적 접근을 통한 기능과 절차 및 수자원 외 교의 핵심 사례로서 메콩 수력 댐 사례를 통해 MRC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MRC 수자원 외교의 과제에 집중하여 현재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도전 극복, 수자원 외교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MRC의 RBO로서의 지속적인 유효성과 효과적 수자원 외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메콩강위원회, 수자원, 수력댐, 지역 거버넌스, 하천유역관리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1087076)

**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연구교수. yhlee@bufs.ac.kr

I. 서론

2030년 세계 인구의 절반은 담수(fresh water)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자원(water resource)은 국가 간 긴장과 충돌의 요인이 될 수 있다(Golovina 2018: 1; Pohl et al. 2014: 3). 148개국이 국제하천을 공유하고 있고, 세계 담수의 60%는 국경 유역을 통과하고 있기에, 국제하천의 약 40%가 유역 협정(basin agreement)으로 관리되고 있다(Feng et al. 2021: 58). 최근 물 부족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국경(transboundary) 하천, 즉 국제하천의 외교적 긴장과 환경 악화는 국가 간 수자원 외교(water diplomacy)¹⁾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Keskinen 2021: 1). 특히 주권에 관한 민감성, 법적·사회 정치적 시스템의 다양성은 국제하천을 둘러싼 분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Golovina 2018: 4; Zhao et al. 2021: 1). 국경을 넘는 국제하천은 분쟁 예방, 지역 안정, 환경 문제 및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정치화(highly politicized)’된 수자원 외교가 필요하다(Zareba 2020: 2).

메콩강(Mekong River)은 동남아 최대 하천으로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6개 유역국(riparian states: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농업용수와 풍부한 어족 자원의 공급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Pohl 외(2014)는 메콩강을 “나일강(Nile River), 아무 다리아강(Amu Darya River)과 더불어 3대 국제하천 분쟁지역의 하나”라고 언급할 만큼(Pohl et al. 2014: 8), 메콩강은 수자원 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국별 견해 차이가 큰 곳이다(Zhao et al. 2021: 1).

메콩 유역은 총 약 6,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유역민 농업과 어업의 기반이자 중국과 라오스 등 메콩 상류 국가의 수력 댐 건설의

1) water diplomacy는 hydro-diplomacy로 사용되기도 하며 국내학자 사이에서 ‘물 외교’ 또는 ‘수자원 외교’로 혼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수자원 외교로 통일하였음.

대상지이기도 하다(Kittikhoun 2020).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 총 잠재력은 28,543MW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의 댐을 제외하고라도 본류에 총 11개(라오스 7개, 라오스-태국 국경 2개, 캄보디아 2개)의 댐이 건설될 계획이다. 메콩강의 연쇄적인 댐 건설은 생태계 보전, 유수량과 침전물에 관한 논쟁을 일으키며 수자원 외교의 대상이 되었다(Pohl et al. 2014: 1). 메콩 각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수자원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양면적인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국제하천의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메콩강의 수자원도 어떻게, 누가,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Zeitoun & Warner 2006: 436).

수자원 외교에서 하천유역기구(RBO: River Basin Organization)는 국제하천의 이해관계자가 유역 내에서 국제 조약을 이행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한다(Pohl et al. 2014: 11).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iver Commission)는 역내 유일의 RBO로서 메콩강에 관한 정보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 협력의 중재와 원활화의 역할을 맡고 있다(Keskinen 2021: 1). MRC는 1995년 메콩 유역국(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합의한 메콩 협약(Mekong Agreement)을 기초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4개 유역국은 정회원국(membership)으로, 중국과 미얀마는 대화상대국(observer)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역내 유일의 초국가 기구인 MRC의 수자원 외교 측면에서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한계와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MRC의 역할은 메콩강의 지정학적 환경, 관련국의 권력관계 등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력발전댐의 건설에 어떻게 개입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우선 수자원 외교의 개념과 특성 등 이론적 논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RBO로서의 MRC의 목표와 역할을 정리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MRC의 수자원 외교 프레임워크인 제도적, 법적, 전략적 접근을 통한 기능과 절차를

분석하고, 수자원 외교의 핵심 사례로서 메콩 본류 및 지류에 건설한 수자원 댐 사례를 통해 MRC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MRC 수자원 외교의 과제에 집중하여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도전 극복, 수자원 외교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MRC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RBO로서의 지속적인 유효성과 효과적 수자원 외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메콩강과 수자원 외교

1. 수자원 외교의 이론적 논의

세계 대부분 국제하천에서 수자원 공급의 감소와 수요의 증가 이슈가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수자원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농업 생산 및 식수, 위생, 전력 생산은 물론 보건 및 안보까지 위협을 발생시킨다(Pohl et al. 2014: 3). 수자원의 부족은 하천 유역민의 생존 문제는 물론 국가 차원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으며, 특히 댐 건설 이슈와 같은 수자원 이슈는 국가간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Bajorinas 2021: 5). 수자원은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협력의 발단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수자원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승호 2021: 2).

수자원 외교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지만 Genderen과 Rood(2011)는 유역국 입장에서 수자원 외교를 “초국경(transboundary) 수자원에 관해 주권 국가가 최소 1개 이상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접촉(contact)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Genderen & Rood 2011: 10). 즉 수자원 외교는 ‘주로 유역국 정부 및 정부간 조직이 주체가 되어 다수의 외교 수단을 동원하여 국제 이슈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Keskinen 2021: 2). 그러나 수자원 외교는 제3자에 해당하는 역외국 정부나 역외 국제기구의 참여도 포함되며(Leb et al. 2018: 110), 최근 수자원 외교는 지역안보(regional security), 평화-구축(peace-building),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 등 단순한 ‘물(water)’ 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 특성을 갖는다(Mirumachi 2020: 86).

수자원 외교의 목적은 국별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경쟁과 긴장을 완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 Li는 수자원 외교의 구체적 목적으로 ▲ 협상, 협력을 통해 초국경 수자원 문제를 다루는 것 ▲ 수자원 협력, 수자원 원조 등을 통해 국가의 전반적 외교를 지원하는 것 ▲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물을 통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Li 2021: 44). 그러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협력의 범위에 비해 현실적으로 수자원 외교는 대부분 기술 협력 및 개발 협력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Pohl et al. 2014: 2; Huntjens 2016: 14; Mirumach 2020: 87). 이는 국제하천 유역을 둘러싼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힘의 비대칭(power asymmetry)’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Zeitoun & Warner 2006: 450). 즉 국제하천 유역 내 강대국이 자국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여타 유역국이 이를 제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Pohl et al. 2014: 2).

2. RBO로서의 MRC

오랫동안 평화롭게 단일한 생태체계를 유지하던 메콩강은 1950년대 이후 베트남전, 캄보디아 내전 등 많은 분쟁을 겪게 되었다. UN과

미국의 주도로 1952년 메콩강의 홍수 통제와 수자원 개발에 대한 첫 보고서가 발간되었지만, 지속된 역내의 불안정성과 유역국간 반목(反目)으로 인해 메콩강의 공동 관리나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다(Kittikhoun & Staubli 2018: 656). 1990년대 초 냉전시대가 종식되어 서야 메콩강에 대한 초국가거버넌스가 실제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1995년 비로소 MRC가 출범하게 되었다(이요한 2015: 290).

현재 메콩강을 둘러싼 최대 이슈는 수력발전 개발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협력 및 투자에 관한 것이다. 베트남·캄보디아를 비롯한 메콩 유역국 대부분은 전력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라오스는 수력 댐 개발을 통해 전력 수출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수력 댐 이슈에는 관련국 정부와 투자 기업, NGO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MRC는 유일한 RBO로 참여하고 있다(Kang 2019: 360). 메콩강의 수자원 외교 이슈는 주로 수력 댐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 공동 개발 계획, 환경적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상류 댐 건설 논쟁, 라오스 본류 댐 건설 논쟁, 캄보디아의 최대 담수호인 톤레삽(Tonle Sap) 호수의 수심 저하, 메콩 델타(삼각주)의 염분화(salinisation)와 관련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eskinen 2021: 5).

2023년 4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한 제4차 MRC 정상회의(MRC Summit)에서 베트남 팜밍썩(Pham Minh Chinh) 총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메콩의 총 유수량이 4~8% 감소한 반면 역내 수요량은 5~12% 증가했다고 밝혔다(Pham Minh Chinh 2023). 팜밍썩 총리는 또한 염분화 현상이 예측치보다 가속화되고 있으며, 2040년 메콩 델타의 퇴적층은 2023년 현재에 비해 9배 이상, 2008년에 비해서는 무려 30배나 감소하여 유역민 2천만 명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였다(Pham Minh Chinh 2023).

수자원 외교에 있어 RBO는 국제하천의 주요 이해관계자 간 상호

영향과 관계 형성을 위해 조직된다(Huntjens 2016: 32). 또한 RBO는 정보의 수집과 공유, 개발 과정에 대한 감시를 통해 국제하천 이슈를 조율하고(Pohl et al. 2014: 21), 국제하천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지역 합의, 가이드라인, 정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이나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Keskinen 2021: 2). 통상적으로 RBO는 국가 또는 국경을 넘는 수자원 관리에 관한 다양한 목표와 책임을 갖고 있으며, 공정한 분배(equitable sharing),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갈등 해결(resolution)의 역할을 맡는다(Bajorinas 2021: 10).

<표 1> 국별 및 RBO 수자원 외교의 비교

	개별 국가	RBO
제도적 및 법적	- 국내 및 국가 수자원 제도 강화	- 유역국 합의의 강화 또는 개정
역량 강화	- 국가 수자원 사용 개선	- 외교 수단을 통한 수자원 역량 개발
정치적 조정	- 수자원 연관 분야 일관성 유지	- 분쟁의 사전 방지와 완화

자료: Pohl et al. 2014의 내용을 저자 재구성

RBO는 <표 1>과 같이 국제하천의 수자원 외교의 특성에 있어서 개별국가와 차별점을 갖는다. ‘제도적(institutional) 및 법적(legal)’ 측면을 보면 개별국가는 국내 및 국가 수자원 제도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RBO는 유역국 간 합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 국제하천의 공유이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에 관해 개별 국가는 자국 내 수자원 사용 개선에 국한되지만, RBO는 관련국의 외교 수단을 동원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정치적 조정(political coordination)’은 개별국가는 자국 내 이해관계 조정에 맞추지만, RBO는 관련국간 분쟁의 사전 방지와 완화

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메콩 유역국 간 물리적 충돌과 이념적 대립은 사라졌지만, 국경으로 분할된 메콩강 수자원에 관한 국별 상이한 관점은 새로운 경쟁과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메콩강 유일의 RBO인 MRC는 수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MRC 2021: 6). MRC의 임무(mandate)는 유역국의 상호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물과 관련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개발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것이다(Freeman 2018: 4). 구체적으로 MRC는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건설, 하천 유수량, 환경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국제하천에 관한 공동 관리(joint management), 정보 공유(data sharing) 및 환경 보존(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초점을 맞추어왔다(Bajorinas 2021: 11; Feng et al. 2019: 62-63).

Ⅲ. MRC의 수자원 외교(water diplomacy)

1. 제도적 측면

현 MRC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인 Kittikhoun (2018)은 자신의 논문에서 “MRC의 수자원 외교는 자료 및 정보 공유와 같은 기술적(technical) 역할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기술적 역할은 메콩강의 분쟁 이슈나 이견이 발생하면 법적(legal), 제도적(institutional), 전략적(strategic)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찾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Kittikhoun & Staubli 2018: 654). 법적(legal)인 측면에서 1995년 메콩 협약(Mekong Agreement)에서 유수량과 수질의 유지를 위한 감시와 대응, 물 소비 감시, 자료와 정보 공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Mekong River

Commission 1995). 메콩 협약은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을 채택한 최초의 초국가적 물 관리 협약으로 평가받는다(이준표 2015: 192). MRC는 2003년 PNPCA(the Procedure for Notification, Prior Consultation and Agreement)라는 절차를 채택하였다. 이 절차는 대규모 관개(irrigation), 수력발전, 홍수 등 유수량이나 수질에 크게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PN(Procedure for Notification)은 우기(wet season)의 지류와 국내(intra-state)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한다(Kittikhoun 2020). PC(Prior Consultation)는 건기(dry season)의 국내에서 수행하거나 우기에 국제 유역(inter-basin State)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며, 국가 간 영향을 평가하고 논의하여 이를 최소화 또는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PC는 프로젝트 당사국의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독립적인 전문가의 과학적 평가, 이해관계자의 토론과 토론을 포함한다. 이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해결하는 합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Kittikhoun 2020). A(Agreement)는 건기에 국제 유역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국가 간 효과적인 협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Hatda 2020: 1; Huntjens 2016: 10).

MRC는 이외에도 평가지표(evaluation indicators), 평가기준(evaluation standard), 완화 수단(mitigation measure)을 포함한 TbEAI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DG(Preliminary Design Guidance), MRC Hydropower Mitigation 가이드라인 절차 등을 수립했다(Zhao 2021: 3).

TbEAI 가이드라인은 평가지표 측면에서 수력발전 개발의 국경을 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에 대한 표시 목록(indicative list)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표시 목록에는 수문학, 생태계, 이주, 경제, 관광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TbEAI 가이드라인은 평가 기준과 완화 수단에 관해서는 가능성(possibility)과 정도(degree)라는 두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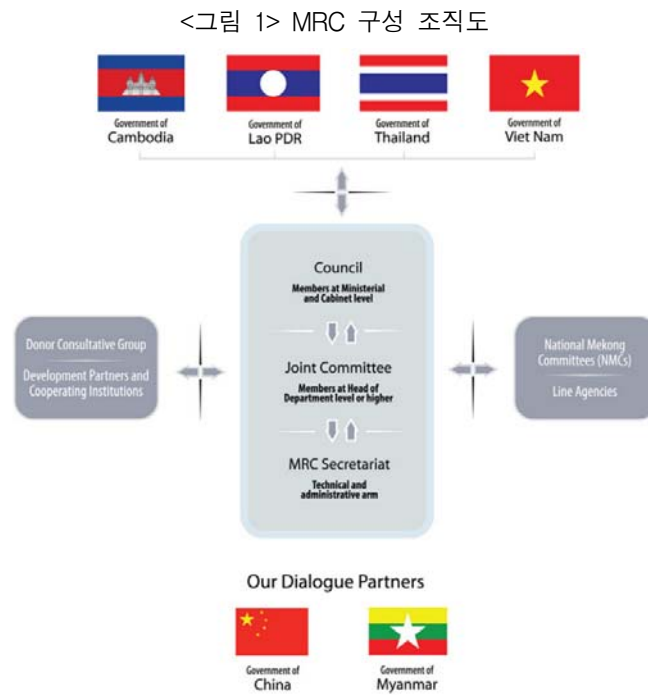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유역 영향을 ‘낮음(low)’, ‘보통(medium)’, ‘중요함(significant)’, ‘매우 중요함(very significant)’으로 나누었으며 전적으로 회원국과의 협의를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Zhao 2021: 3-4).

PDG는 MRC가 2009년부터 하천개발로 인한 영향 완화를 위한 설계 및 운영 원칙을 제시한 예비지침을 말한다. PDG는 하천수문학, 퇴적물, 수질, 어업과 같은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발표한 MRC Hydropower Mitigation 가이드라인은 메콩강 수력발전 영향 완화를 위한 지역적(regional) 및 세계적 우수사례를 적용하고 있다(Zhao 2021: 3-4).

MRC의 제도적(institutional)인 측면은 사무국(Secretariat)을 비롯해 메콩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상설 기구와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MRC는 사무국(Secretariat), 장관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의회(Council)로 구성되어 있다. 장관위원회는 매년 1회 각국 장관이 참여하며,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의제를 조율하여 MRC 의회에 상정한다. 4개 회원국은 메콩 국가위원회(NMCs: National Mekong Committees)가 있으며, 이외에도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후원자문그룹(Donor Consultative Group)이 있다(<그림 1> 참조).

MRC는 메콩 역사상 처음으로 2017년부터 유역 계획(basin planning), 환경 관리, 자료 모델링과 예측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지역 및 국별 연계를 강화했다. MRC는 또한 NGO, 시민 사회 단체, 민간 부문 등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가 지역 이해관계자 포럼(the Regional Stakeholders Forum)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MRC는 특정 국가의 관점이 아닌 메콩 유역 전체의 관점에서 전략과 문제 해결에 방향성을 두고 있으며 이는 1995년

메콩 협약에 기반을 둔 것이다(Khittikhoun 2020).



자료: MRC 2021.

전략적(strategic)인 측면은 정기적으로 메콩 유역개발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MRC는 통합 수자원 관리(IWRM: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를 바탕으로 유역개발 전략(BDS: Basin Development Strategy)을 2011년 처음 발표했고, 2016년 합의하여 개정했다. 이 전략은 개발 기회,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개발 및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MRC는 기후 변화, 홍수 및 가뭄 관리, 수력 발전 및 어업과 같은 개별 문제에 대한 중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Khittikhoun 2020).

2. 수자원 외교 사례: 수력발전 댐을 중심으로

메콩강의 수력발전 댐 건설의 증가는 메콩 유역의 지정학적 변화와 국가간 권력 불균형을 노출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개별국가간 이해관계의 영역이 아닌 통합된 공간으로의 영역으로 재구성으로 변화되었다(Bajorinas 2021: 14). 메콩 본류와 지류의 수력발전 댐 건설은 통합된 메콩 유역에서의 ‘경쟁적 주권(competitive sovereignty)’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로서 본 절에서는 연쇄적인 메콩 댐 건설에 MRC의 수자원 외교를 정리하고자 한다.

얄리(Yali) 댐

얄리(폭포) 댐은 메콩강 지류에 건설된 최초의 댐으로 1993년 베트남 중부에 건설된 수력발전 댐(720MW)이다. 캄보디아 국경에서 약 70 km 거리에 있는 얄리 댐은 강변 거주민의 재산 및 환경 피해가 발생하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Thim 2010: 69). 캄보디아 메콩위원회(The Cambodia National Mekong Committee)는 베트남 메콩위원회(The Viet Nam National Mekong Committee)에 우려를 전달했고, MRC는 캄보디아에 발생하는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분석팀을 파견했다. MRC는 2000년 3월 11차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회의를 개최했고, 같은 해 4월 공동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MRC는 얄리 댐과 관련해 ① 베트남의 방류량에 대한 정보 공유 ② 베트남 저수량의 점진적 방출 ③ 방류 15일전 MRC 등에 사전 통보 ④ 홍수 등 긴급상황의 사전 경보 ⑤ 환경 보존 연구 실시 등 5개 사항에 합의했다(Thim 2010: 142). 캄보디아-베트남 공동위원회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연례회의

를 가졌다. MRC는 알리 댐 이해관계자가 지역 이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며, 이는 향후 MRC 역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Kittikhoun & Staubli 2018: 661).

중국 상류 댐

중국은 1986년 만완(Manwan)댐을 비롯해 메콩 상류에 연쇄적으로 수력발전 댐을 건설해왔다. 중국의 상류 댐 건설은 유수량 및 침전물의 변화,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Li et al. 2011: 329). 특히 메콩 하류 국가(Mekong lower countries)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황금삼각지대(Golden Triangle Area)²⁾의 수위 저하가 중국 댐 건설로 초래된 결과라고 보았다(Yeophantong 2014: 711-712). 2004년과 2019년 발생한 메콩강의 극심한 수위 저하와 2008년 발생한 홍수 역시 중국의 메콩 상류 댐을 원인으로 보았다. 중국은 메콩 하류국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NGO는 메콩 상류 댐에 대한 중국 측의 투명성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i & Hongzhou 2021: 41).

MRC는 중국과 메콩 하류 국가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강화했다. 2004년 메콩강 가뭄 문제가 발생했을 때 MRC CEO는 태국을 방문하여 중국 댐 건설로 인한 태국의 이익과 피해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2010년 MRC와 메콩 하류 국가가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자 중국은 MRC와 메콩 하류 국가의 정부 관계자를 상류 댐 현장에 방문하게 하였다(MRC 2010). 2016년 건기에 가뭄이 심해지자 중국은 진홍(Jinhong)댐을 방류하였으며, MRC와 중국은 방류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공동 조사를 처음으로 수행하였다(MRC & Ministry of Water Resou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2018년 제3차 MRC 정상회의에서 중국 수자원장관(Minister

2) 메콩 본류 중 태국, 미얀마, 라오스 국경이 만나는 지점

of Water Resource)은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GMS(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그램과 란창-메콩 협력(LMC: Lancang-Mekong Cooperation)을 활용해 MRC와 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Kittikhoun 2018: 662).

싸야부리(Xayaburi) 댐

라오스 싸야부리 댐은 메콩 하류 지역 최초의 본류 댐으로 MRC 회원국 뿐 아니라 국제기구 및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싸야부리 댐은 총 39억 달러의 건설비용이 투입되었으며, 2019년 12월 1,285MW(충주댐의 3배) 규모로 완공되었다. 태국 전력청(the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은 싸야부리 댐 건설 주관기관인 싸야부리 전력회사(Xayaburi Power Company)와 생산 전력의 95%를 태국이 수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Thomas 2019).

MRC는 2010년 유역개발 시나리오(Basin-Wide Development Scenarios)에서 싸야부리 댐 건설 프로젝트를 평가한 바 있다. 이 평가에서는 싸야부리 댐 위치를 포함한 여러 요소가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같은 하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표명했다. 라오스 정부는 싸야부리 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010년 9월 PC 절차를 밟았으나 2011년 12월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라오스 정부는 현장조사를 위해 싸야부리 지역을 개방했고, 미 육군 공병대(The US Army Corps)와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The Australian Center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를 고용했고, 스위스의 Poyry와 프랑스의 CNR 등의 조언을 받기도 했다. 이후 댐 재설계에 수백만 달러가 투자되었고, MRC 전문가 그룹은 재설계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력과 개선을 인정했다.

첫 번째 사전 협의는 MRC 위원회 연구(MRC Council Study)를

통해 메콩강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개발 연구의 수행으로 이어져 메콩강 연구의 자료, 접근법 등 MRC의 기술 지식 기반을 강화했다. 그룹에도 이해관계자의 참여, 국가간 의사 결정 과정, 협의 후 과정의 조직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 MRC는 사전 협의 중 JC(Joint Committee)를 보완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사전 협의 로드맵, 평가 분야, 현장 방문, 국가 협의 방식, 조정 문제 및 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이후 6개월간의 JC 모임과 각료회의를 연쇄적으로 가졌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메콩 하류 유역 국인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국가 간 영향 연구 및 협의에 더 많은 시간을 요청했지만, 라오스는 6개월간 PC 필수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협의 연장을 반대했다. 라오스는 다만 MRC 기술 검토에서 제기된 문제와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받아들였다.

MRC 유역 개발 계획, 전략적 환경평가(SEA: the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등은 메콩 본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이 되었다. 싸야부리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는 MRC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호 작용, 자료 및 정보 교환이 제한적이었다.

MRC는 지속가능한 수력개발 이니셔티브(Initiative on Sustainable Hydropower)를 설립하여 본류 댐에 대한 논의를 조정했다. MRC는 댐 건설 이후 시나리오 평가,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와 지원 등 기술적인 역할에 주력했다. MRC 실무 그룹은 퇴적물 및 어업 전문가 그룹과 협의하여 싸야부리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 2011년 발간한 MRC 기술검토(technical review)는 회유성 어종(migratory fish species)과 퇴적물 관리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라오스가 싸야부리 댐의 설계를 수정하여 제출했을 때 MRC 기술검토의 권고사항과 개선 조치를 기준으로 평가했고, 수질

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돈사홍(Don Sahong) 댐

돈사홍 수력 댐은 메콩 본류의 두 번째 댐으로 싸야부리 댐과 유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Zhao 2021: 4). 돈사홍 댐은 캄보디아 국경과 마주하는 라오스 최남단 지역의 호우사옹(Hou Sahong)에 260MW 발전규모로 2019년 완공되었다. 돈사홍 댐 프로젝트는 2013년 9월 PN 사업으로 제출했으나, 캄보디아·태국·베트남은 PC 절차를 요구했다(Vietnam National Mekong Committee 2015). 특히 돈사홍 댐에서 2km 거리에 국경이 있는 캄보디아는 라오스에게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Cambodia National Mekong Committee 2015). 라오스는 돈사홍 댐이 여러 수로(channel) 중 한 지류에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최소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2014년 6월 장관 위원회(The Council of Ministers)에서 라오스는 PC를 받아들였고, 본 사업의 PC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수행되어 싸야부리 댐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Cambodia National Mekong Committee 2015).

MRC는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돈사홍 댐에 인접한 콘(Khone) 폭포에 대한 환경 감시프로그램 수행을 동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MRC는 독립적인 외국인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기술평가서(Technical Review)를 제출했고, 공동위원회(JC)는 총 4회에 걸쳐 진행 과정과 평가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Kittikhoun & Staubli 2018: 664). 돈사홍 댐에서 MRC는 기술적 전문성과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본 기술 검토에서 MRC는 돈사홍 댐이 수질, 침전물, 유수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MRC 2015: 17). 다만 MRC는 어종(魚種)의 회류를 위한 대체 수로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고, 메콩강의 상징적인

보호 동물인 이라와디(Irrawady) 돌고래 서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MRC 2015: 45). 싸야부리 댐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돈사흥 댐에서 MRC의 역할은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었고, 국가 간 이견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다시 한 번 노출했다. MRC JC 위원회에서 돈사흥 댐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2> MRC 초국경 환경평가 추이

관련 규정	시작 년도	적용 사례
Mekong Agreement	1995년	싸야부리 댐 돈사흥 댐
PNPCA Regulation	2003년	
PDG	2009년	팍땡 댐 팍라이 댐 루앙프라방 댐
TbEIA	2018년	
MRC Hydropower Mitigation Guideline	2019년	

자료: Zhang(2021: 4)의 내용 재구성

팍땡(Pak Beng) 댐

팍땡 댐은 912MW 규모로 지어지는 라오스 북부에 위치한 메콩 본류 댐으로 전력의 90%는 태국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팍땡 댐은 이전 본류 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대가 많지 않았지만, 일부 태국 거주민과 NGO가 환경 문제를 제기하였다. MRC 기술평가서는 침전물, 어종의 회류, 어선 항행의 어려움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태국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Mekong River Commission 2017: 71-79). 태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은 본 평가서에 대한 피드백에서 국경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층 연구를 요구했다(Kittikhoun & Staubli 2018: 664).

MRC는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PC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전 사례에 비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MRC 공동위원회(JC)와

해외 전문가는 이 시기에 3회에 걸친 회의를 가졌고, 현지 전문가는 각국의 입장을 표명했다(Mekong River Commission 2017: 11-12). 라오스의 팍땡 댐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때, MRC는 팍땡 댐의 최종 디자인,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MRC는 또한 기술적 전문성을 공유하고 역내국간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연계 역할을 수행했다.

MRC의 팍땡 댐 PC 과정은 시기적절한 공지, 정보의 완결성, 평가 기간, 평가 준비와 사후 평가 과정의 개선, 이해관계자의 참여하는 제도적 측면을 개선했다. PC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컨설팅으로 바뀌었고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방안도 협업 방식으로 바뀌었다(Kittikhoun 2020). MRC CEO인 Kittikhoun은 팍땡 댐이 6개월 전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정과 공동연구(Joint Study), 공동행동계획(Joint Action Plan)을 수행함으로써 이전 방식에 비해 개선된 절차를 수행했다고 평가했다³⁾. Kittikhoun은 또한 팍라이(Pak Lai) 댐, 루앙프라방(Luangprabang) 댐에도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MRC 회원국은 팍땡과 팍라이 댐에 대한 공동행동계획에 동의했으며, 베트남은 루앙프라방 댐에 관한 PC가 개선되었다고 인정했다(Zhao 2021: 5).

IV. MRC 수자원 외교의 과제

1. MRC의 제도적 개선

MRC는 메콩 유역 내 유일한 RBO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력

3) 2023년 2월 6일 MRC CEO 인터뷰

댐에 관한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MRC 접근 방식은 과거 사전 평가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진행 과정에서 관련 회원국의 동의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MRC는 중국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수력 발전시설의 건설과 협력이 부족한 운영은 메콩강의 일부 구간에서 흐름 환경을 변화시키고 수질 및 수생 생물의 적합한 서식지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전에 비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다(Bajorinas 2021: 30).

MRC 시스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초국경 수력댐 발전에 관련한 MRC 수자원 외교는 여전히 다양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MRC는 수자원 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법적 기반을 강조했다지만, 메콩 협력 체계의 모호한 법적 지위가 근본적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이준표 2015: 186). 메콩 협약은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본류 댐의 연쇄적인 건설을 막지 못했다(이승호 2021: 2).

MRC가 메콩강이라는 국제하천을 관리하는 유일한 RBO로서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부여받았지만, 메콩 내 댐 건설 이슈로 큰 도전을 맞이했다. 메콩 본류 및 지류(tributary)에 댐 건설을 추진하는 중국, 라오스와 같은 국가들은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의 생산 및 수출, 홍수 조절, 저수량 확보라는 이익을 보았지만,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하류 국가들은 유수량 유입의 감소와 어업 생산량의 감소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Pohl et al. 2014: 4).

라오스의 연쇄적인 수력발전댐 건설로 인해 PNPCA 원칙이 크게 훼손된 상황도 MRC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Zareba 2020: 2). MRC가 평가시스템을 개선한 TbEIA도 양적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Zhao 2021: 6). TbEIA의 평가 범위는 여전히 기술적인 수준에 치우쳐 있어 초국경 이슈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제공하지 못한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공개참여(public participation) 역시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TbEIA에 시민단체와 같은 NGO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특정 이해관계자 의견에 의존한 논의는 균형 있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Save the Mekong과 같은 시민단체(NGO)는 MRC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Pak Lay 수력발전댐 협상을 보이콧하기도 했다(Middleton 2018: 4). 또한 NGO는 MRC의 제공 자료가 불충분하고 댐 개발로 피해를 받는 대상을 위한 고지 시스템의 부재(不在)를 비판하고 있다(Kittikhoun & Staubli 2018: 661).

MRC는 회원국 간의 협상 기회를 제공하고 주장하지만,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특정국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략하기도 한다(Mirumachi 2021: 90). 앞에 살펴본 알리 댐의 경우 베트남의 입장만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논의를 제공하지 못했다(Wyatt & Baird 2007), 싸야부리 댐과 돈사홍 댐에 대해서는 라오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쳤다. 중국이 MRC와의 상류 댐 공동 조사 역시 역내외국의 불만과 비판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MRC가 유일한 RBO로서의 협상력이 부족하고,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가 MRC의 방식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Bajorinas 2021: 29).

2. 중국의 LMC 설립과 MRC 주변화

중국은 메콩 상류 국가라는 지리적 우위는 물론 압도적인 외교력과 경제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압도적 영향력은 MRC의 역할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기존에는 중국이 MRC의 정회원국이 아닌 대화 상대국(dialogue partner)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원 문제를 주권과 불간섭(non-intervention) 원칙을 강조하는 방

어적 수자원 외교(defensive water diplomacy)로 MRC의 역할을 제한해왔다(Pohl et al. 2014: 25).

중국의 외교 정책이 쉰우주취(走出去: Go Out)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메콩 국가와의 관계도 변화를 시도했다(Freeman 2018: 13). 중국은 메콩 국가와의 다자주의 즉 LMC 체제 설립을 주도하면서 적극적 수자원 외교(offensive water diplomacy)로 메콩 이슈에 참여하기 시작했다(Li & Hongzhou 2021: 44). LMC는 2012년 태국의 ‘란창-메콩 소지역(Lancang-Mekong Sub-region)’이라는 아이디어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2016년 3월 첫 정상회담을 시작하였다. 중국은 LMC를 통해 전력 개발을 비롯해 보건, 교육, 빈곤 감소 등 4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Li & Hongzhou 2021: 52).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인프라 개발과 경제성장의 과제를 안고 있는 메콩 유역국은 LMC를 통한 중국의 프로젝트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다(이승호 2021: 3). 특히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전력 인프라 개발을 비롯해 무역과 투자를 비롯해 경제 분야의 대부분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MRC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Zareba 2020: 4; Freeman 2018: 13).

중국이 MRC에 가입하지 않은 채 LMC를 중심으로 메콩 유역 이슈를 주도하는 것은 MRC의 주변화(marginalization)를 초래할 수 있다. MRC는 중국과 미얀마가 비회원국이지만, LMC는 메콩 6개국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두 거버넌스의 명백한 차이를 나타낸다(Freeman 2018: 6). 중국은 LMC 주요 의제 안에 수자원 관리(water resource management)를 포함시켰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2017년 3월 수자원협력센터(Water Resource Cooperation Center), 11월 란창-메콩 환경협력센터(Lancang-Mekong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를 각각 설립했다(Middleton 2018: 3-4).

중국의 막강한 외교력과 재정적 능력은 MRC 개별국가에게 포괄

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메콩 수자원 협상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창출해 왔다(Zareba 2020, 2). 중국의 수자원 이슈 개입이 강화함에 따라 MRC의 주변화 위험이 증대되고 EU와 미국과 같은 참여국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을 MRC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도 MRC의 역할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Pohl et al. 2014: 13).

3. MRC 수자원 외교 역량 강화

전술한 메콩 수자원 외교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수자원 관리(water resource management)에 관한 MRC의 외교적 역량과 정치적 조정 능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메콩강의 핵심 이슈인 수력 발전 댐 개발은 단순한 경제적·기술적 영역이 아닌 정치적인 수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Bajorinas 2021: 13). MRC는 수자원 관리에 관해 회원국의 환경 부처와 협력해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환경 관련 부처는 경제부처보다 정치적으로 미약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환경 보존이라는 이슈가 충돌될 때 MRC 회원국은 대부분 경제적 이익 추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Freeman 2018: 6). 이는 MRC의 수자원 관리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분쟁의 사전 방지와 완화를 RBO로서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MRC는 수력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해관계자인 지역 농민과 어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메콩 유역에는 수천만 명의 거주민이 메콩강을 의존하면서 생존했지만, 수력댐의 건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양산했다. 국가 및 기업과 같은 이해관계자와는 달리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은 NGO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MRC가 국가 권리(states' rights)와 인권(human rights) 사이의 균형이라는 본질적 역할을 위해서 또한 메콩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민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이를 국가(정부) 및 투자 기업과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MRC는 유역화(riparianization) 개념으로 2030년까지 재정적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MRC의 운영 자금을 회원국 외부에 의존하고 그 기대와 이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은 MRC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된다(Bajorinas 2021: 28). MRC는 SRF(Stakeholder Regional Forums)를 운영하면서 미국, 일본, 호주, EU와 더불어 세계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3년부터 MRC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2014-2020년 기간 MRC에 약 17억 유로 상당의 재정을 지원했고, 2021-2025년 전략계획의 시행을 위해 892만 유로를 독일과 함께 추가적으로 지원했다(Soulito 2019: 14).

메콩 수자원 외교의 핵심이 되는 MRC 정상회의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MRC 정상회의는 4년 주기로 총 4회(2010, 2014, 2018, 2023) 개최하였으며, 각 정상회의에서 메콩 개발과 관리에 관한 MRC의 역할을 지지해왔다. 2010년 MRC 첫 정상회의에서 MRC가 역내 ‘중요하고 유일한(primary and unique)’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Khittikhoun 2020). 제도적 측면에서 정기적인 정상회의와 장관회의는 MRC의 외교적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국제하천의 복잡한 문제의 해법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가 아닌 최고 수준의 정책 결정권자(국별 정상 또는 장관)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술 전문가 또는 개발 기관과는 달리 외교정책 입안자는 수자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여할 권리와 책임을 보유하고 있다(Pohl et al. 2014: 11).

V. 결론

MRC는 1995년 출범 이래 지난 30년간 역내 유일한 RBO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MRC는 PNPCA 원칙을 통해 역내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메콩 수자원 외교의 핵심 기관이다. 메콩 본류와 지류에 건설된 각 국가의 수력발전댐 건설은 MRC 수자원 외교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RC는 초국경 수력 댐 개발에 관한 영향과 평가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보완해왔으며, 프로젝트 주체의 기본 데이터 제출과 영향평가의 엄격성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RC의 역할과 절차는 오히려 특정 국가의 역할을 대변하거나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본류 댐의 연쇄적인 건설과 유역국의 과도한 수자원 이용을 방지하는 데 실패해왔다.

MRC가 유역내의 모든 현안을 다룰 능력이나 권한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메콩 유역 내 유일한 공식적 RBO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MRC는 내부적 제도 개선과 LMC와의 차별화, 정치적 외교역량의 강화, 재정적 독립 등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MRC의 유용성을 증명해 나가야 한다. 세계 국제하천 분쟁 지역 중 단일한 RBO에게 분쟁 예방 및 해결, 위기관리와 같은 역내 이슈를 해결할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MRC는 메콩 수자원 이슈 중 어느 영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분쟁을 완화하고 균형적 해결책을 찾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MRC는 특정 이슈에 대한 역내·역외국 간의 다양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역할을 통해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LMC에 대한 MRC의 주변화 부분이 우려되지만, 메콩 국가의 중

국의 일방적인 힘의 우위에 불안함을 갖고 있는 메콩 국가 및 대외 국가와의 연대감을 통해 MRC가 이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통해 여전히 유효한 RBO임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초국경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국의 영향과 이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능력을 향상시켜 MRC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이승호. 2021. “메콩 유역 국제협력의 전환: 중국의 란창·메콩협력 체제의 출범과 의의.” 『Emerics 전문가오피니언』.
- 이요한. 2015. “메콩 유역의 국별 개발전략과 협력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동남아연구』 25(2): 275-310.
- 이준표. 2015. “메콩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공간과 사회』 25(4): 184-220.
- Bajorinas, Kipras. 2021. *Power Relations in the Mekong River Basin: A look into the discourse of the Mekong River Commission*. LUNDS Universitet. Department of Human Geography.
- Cambodia National Mekong Committee. 2015. *Mekong River Commission Procedures for Notification, Prior Consultation and Agreement Form for Reply to Prior Consultation of the Don Sahong Hydropower Project*. Vientiane: Mekong River Commission.
- FENG Yan, WANG Wenling, SUMAN Daniel, Yu Shiwei & HE Daming. 2019. “Water Cooperation Priorities in the Lancang-Mekong River Basin Based on Cooperative Events Since the Mekong River Commission Establishment.” *Chinese Geography* 29(1): 58-69.
- Freeman, Carla et al. 2018. *Challenges to Transboundary Water Governance in the Mekong River Basin*. FEST Report.
- Genderen, R. V. & Rood J. 2011. *Water Diplomacy: A Niche for the Netherlands*, The Hague: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 Golovina, E. I. 2018. "Problems of Groundwater Extraction from Transboundary Aquifers and Complexes."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151: 1-8.
- Hatda, An Pich. 2020. "From Transparent to Transparency: The Evolution of the Mekong River Commission's Prior Consultation Process." *Asia Pacific Bulletin* 527: 1-2.
- Huntjens, P. and Yasuda, Y. & Swan, A. & Man, R. & Magsig, B. O. & Islam, S. 2016. *The Multi-Track Water Diplomacy Framework: A Legal and Political Economy Analysis for Advancing Cooperation over Shared Waters*. Hague: The Hague Institute for Global Justice.
- Kang, Kenneth. 2019. "Reformulating 'Holism' in hydropower decision-making." *Systems Research & Behavioral Science* 37(2): 360-368.
- Keskinen, M. and Salmine, E. & Haapala. 2021. "Water Diplomacy Paths: An Approach to Recognize Water Diplomacy Actions in Shared Waters." *Journal of Hydrology* 602: 1-13.
- Kittikhoun, Anoulak & Staubli, Denise Michele. 2018. "Water Diplomacy and Conflict Management in the Mekong: From Rivalries to Cooperation." *Journal of Hydrology* 567: 654-667.
- Kittikhoun, Anoulak. 2020. "The Mekong River Commission as a Water Diplomat." Kittikhoun, Anoulak. and Schemeyer, Susann (eds.), *River Basin Organizations in Water Diplomacy*. Routledge.
- Leb C. and Henshaw, T. & Igbal N. & Rehberger B. I. 2018. *Promoting Development in Shared River Basins: Tool for*

- Enhancing Transboundary Basin Management*. Washing DC: World Bank.
- Li, Zhang and Hongzhou, Zhang. 2021. "Water Diplomacy and China's Bid for Soft Power in the Mekong." *China Review* 21(4): 39-75.
- Li, Zhiguo, Damming He & Yan Feng. 2011. "Regional Hydropolitics of the Transboundary Impacts of the Lancang Cascade Dams." *Water International* 36(3): 328-339.
- Mekong River Commission(MRC). 1995.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April 5.
- _____. 2010. *Mekong Commission visits dams and will discuss future cooperation*. Vientiane.
- _____. 2015. *Technical Review on the Prior Consultation for the Proposed Don Sahong Hydropower Project*. Vientiane.
- _____. 2017. *Statement on Prior Consultation Process for the Pak Beng Hydropower Project in Lao PDR*. Vientiane.
- _____. 2021. *Basin Development Strategy 2021-2020 and MRC Strategic Plan 2021-2025*.
- Mekong River Commission(MRC) & Ministry of Water Resourc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Technical Report: Joint Observation and Evaluation of the Emergency Water Supplement from China to the Mekong River*. Vientiane.
- Middleton, Carl. 2018. "Reciprocal Transboundary Cooperation on the Lancang-Mekong River: Towards an Inclusive and Ecological Relationship." <https://www.csds-chula.org/policy-brief> (검색일: 2023.03.15.)

- Mirumachi, Naho. 2020. "Informal water diplomacy and power: A case of seeking water security in the Mekong River basin."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114: 86~95.
- Pham Minh Chinh. 2023. *Remarks at the 4th Mekong River Commission Summit*. Vientiane. April 5.
- Pohl, B., Alexander C., Ken C., Geoffrey D., Annika, K. David C., Sussane S., Ashok S., and Aaron W. 2014. "The Rise of Hydro-diplomacy: Strengthening Foreign Policy for Transboundary Waters." *Climate Diplomacy*. Berlin: adelphi.
- Soulito, J. 2019. "The Mekong River: geopolitics over development, hydropower and the environment." *European Parliament Study: Policy Department for External Relations*: 1-55.
- Thim LY. 2010. *Dynamic of Planning Process in the Lower Mekong Basin: A Management Analysis for the Se San Sub-Basin*. Bonn: Rheinische Friedrich- Wilhelms-Universitat.
- Thomas, Jason. 2019. "Does Lao's Xayaburi dam benefit its people?" *The ASEAN Post*. October 31.
- Wyatt, Andrew B. & Baird Ian G. 2007. "Transboundary Impact Assessment in the Sesan River Basin: The Case of the Yali Falls Dam." *International Journal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23(3): 427-442.
- Yeophantong, P. 2014. "China's Lancang dam Cascade and Transnational Activism in the Mekong Region." *Asian Survey* 54(4): 700-724.
- Zareba, Michal. 2020. "The Role of the Mekong River Commission in Regional Transboundary Water Governance: Prospects and Challenges." *European Policy Brief* 2020-11-17.

Zeitoun, M. & Jeroen, W. 2006. "Hydro-Hegemony-A Framework for Analysis of Trans-boundary Water Conflicts." *Water Policy* 8(5): 435-461.

Zhao Jin, Guo Lidan, Lin Jinghan, Dou Rui, Huang Yujia & Bao Yunxiang. 2021. "Analysis on the Transboundary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Practice of Hydropower Development on the Main Mekong River."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768: 1-8

(2023.08.11. 투고, 2023.08.14. 심사, 2023.08.20. 게재확정)

<Abstract>

Water Diplomacy on Transboundary Dam Development: Role and Challenges of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Yo-Han LE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as the sole transboundary river basin organization (RBO) in the region, plays a role in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 Mekong River, building networks, mediating cooperation, and facilitating dialogue. Founded on the basis of the 1995 Mekong Agreement, which was agreed upon by the Mekong riparian countries (Cambodia, Laos, Thailand, Vietnam), while China and Myanmar participate as dialogue partners (observe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ol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the MRC in the context of water diplomacy, as the only supranational institution in the region. The role of the MRC is influenced by geographical aspects of the Mekong River and power dynamics among the relevant countries. To begin with, the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water diplomacy, then clarifies the objectives and expected functions of the MRC as a RBO. The study further explores the functional aspects and procedures of MRC's water diplomacy through its institutional, legal, and strategic approaches within

the framework. The pivotal case of the Mekong hydropower dam is examined to understand the MRC's role. The study also focuses on the challenges of MRC's water diplomacy, emphasizing institutional aspects for overcoming present limitations, addressing challenges posed by China's rise, and highlighting the need to enhance water diplomacy capacities. Despite the limitations of MRC in conclusion, the aim is to propose a continuous validity as RBO and an effective strategy for water diplomacy.

Key Words: Mekong River Commission(MRC), Water Diplomacy, Hydropower Dam, Regional Governance, River Basin Organization

동남아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고 영 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세안의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3개국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혁신성장 동력을 키워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고찰하고 그 효과를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3개국 스타트업 정책은 세제혜택과 규제샌드박스, 창업센터와 보육프로그램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주도의 펀딩이나 대출 등 재정적 지원책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스타트업 성장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금융 조달이므로 정부가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시키는 역할에서 적극적인 투자자로서의 역할까지 확장하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와 혁신 지수, 유니콘 탄생 그리고 투자측면에서 정부정책의 영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생태계가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14개의 유니콘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규제 측면에서 외국인의 스타트업 설립과 투자장벽으로 인도네시아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1개의 유니콘이 탄생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내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혁신지수와 생태계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태국은 4개의 유니콘이 탄생했지만 글로벌 순위가 더 낮아졌다. 3개국 스타트업 정책은 창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스케일업 정책으로 전환과 인재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 질적 성장을 위한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 연구위원. youngkyung.ko@gmail.com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주제어: 스타트업, 디지털 경제, 스타트업 지원정책, 스타트업 생태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아세안 디지털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동남아 6개국을 기반으로 조사한 구글, 테마섹, 베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디지털 경제 규모는 3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2년 1,940억 달러로 추산했다(Google & Temasek & Bain 2015, 2022). 2025년 동남아 디지털 경제규모는 3,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2015년에 전망한 2,400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된 규모이다. 과거 예상보다 성장률이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이는 팬데믹의 영향과 더불어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아세안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상징하는 기업들은 그랩(Grab), 고투그룹(GoTo Gojek Tokopedia Group Tbk.), SEA 등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장한 슈퍼앱들이다. 2017년 이래 주식시장에 상장했지만 시작은 세 기업 모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에서 출발했으며 혁신 디지털 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해 현재 동남아 지역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세안 디지털 경제 규모 확대가 가속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지목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간추려볼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 FAANG¹⁾으로 대표되는 기술 및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기업들이 보여준 성과와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의 플랫폼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스타트업의 붐을 일으켰고 창업의 열기는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 민간 부분에서 디지털 기반 비즈

1) 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니스 모델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대거 등장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동남아인들이 겪는 생활 속 불편함(Pain point)를 해결하면서 이용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선진 시장에서의 디지털 플랫폼과 테크기업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경험했던 글로벌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대상지역으로 동남아를 지목했고 아세안 스타트업들의 펀딩이 증가했다. 두번째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지원이 디지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각국 정부는 캐쉬리스(cashless) 사회를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전자결제와 핀테크 업체의 활동을 장려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전자상거래 진출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 기업과 서비스 사용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소득증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당면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 혁명 관련 분야를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목했다. 신규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산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샌드박스²⁾를 도입하고, 스타트업의 설립과 상장요건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혁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 활성화를 추진했다. 세 번째는 팬데믹 영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 각국은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했고 그 기간 동안 디지털 소비자가 증가했으며 각종 디지털 기반 서비스 이용자의 수와 이용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중요성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고 기술 기반 혁신 기업이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 대기업들의 축적된 역량을 이용해 자발적인 혁신 활동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기업의 변화를

2) 규제정부포털의 정의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임.

거부하려는 조직문화, 조직의 복잡성과 간접비로 인한 연구개발 노력을 포함 운영의 낮은 효율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따른 큰 위험부담 때문이다(Cohen & Klepper 1996; Hitt, Hoskisson & Ireland, 1990; Nootboom 1994; Rogers 2004; Scherer & Ross 1990; Mahoney 2004). 특히 아세안 신흥국가들의 기업들의 경우 자본과 경험, 연구개발 투입 등 여러 제약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각국 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축으로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각국 정부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신흥경제 3개 국가가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어떻게 경제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디지털 경제 정의와 범위의 차이가 있으므로 데이터 이용의 한계를 제시하고 2장에서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기존연구 및 아세안 3개국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3장에서 아세안 3개국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정책효과를 반영한 글로벌 지표와 투자 변화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스타트업 정책지원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로 결론을 맺는다.

I.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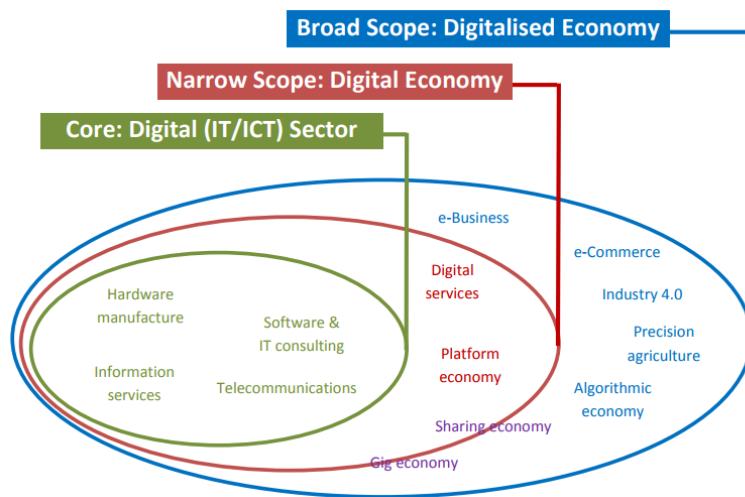
아세안 디지털 경제 규모를 이야기할 때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측정방법의 문제이다. 디지털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영역과 동일한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 경제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여러 보고서와 통계자료 속에서 디지털 경제

정의와 범위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개념이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등장한 만큼 역사가 짧은 반면 범위는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라는 용어는 Tapscott(1996)가 “네트워크화된 인텔리전스의 시대”를 지칭하는 일종의 시대적 구분을 뜻하는 용어로 처음으로 사용하였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새로운 비즈니스 및 새로운 기술 간의 관계와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려는 시도였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디지털 경제의 근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Lane(1999)은 인터넷에서 컴퓨팅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전자상거래와 광대한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보와 기술의 흐름 등을 묶어 디지털 경제로 정의하였다. Brynjolfsson & Kahin(2000), Kling & Lamb(2000)은 디지털 기술에 주로 의존해 개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디지털 경제로 규정했다. Mesenbourg(2001)는 디지털 경제를 e-비즈니스 인프라와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e-commerce) 세 요소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 디지털 경제라는 용어가 널리 확산되면서 국제기구나 기관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등장한다. OECD(2013)는 디지털 경제가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실행하도록 만든다는 개념을 제시했으며, European Commission(2013)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경제를 디지털 경제(혹은 종종 인터넷 경제라고 지칭)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의로 규정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 범위도 확장되면서 G20(2016)는 보다 광범위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G20는 디지털화된 정보와 지식을 생산의 주요 요소로 사용하거나 정보 네트워크상에서 경제 구조 효율화와 생산성 증가

의 중요 요인으로서 ICT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넓은 범위의 디지털 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CT 영역을 어떤 범위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하위 산업 분야의 포함 여부가 달라지고 통계 수치도 달라질 수 있다. 과거 OECD가 정한 ICT 영역의 기준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OECD는 ICT 영역을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캡처하고 전송하고 표시하는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조합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경제활동이나 비즈니스에서 일반 오프라인 경제와 디지털 경제가 상호 연결되고 복잡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제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고려해 Heeks(2008)는 디지털 경제를 ICT 상품과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와 통신 인프라, 서비스, 리테일 그리고 콘텐츠로 구성된 넓은 범위의 정의를 사용하였다. 글로벌 컨설팅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인터넷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터넷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Manyika & Roxburgh 2011)

그림 1. 디지털 경제의 범위



출처: Bukht & Heeks(2017)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더욱 진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모델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정의는 모호해졌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 정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Bukht & Heeks(2017)는 IT영역과 확장된 디지털 활동을 담으면서도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디지털화된 경제(digitalized economy)를 제시하였다.

과거에는 IC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후 디지털화된 서비스와 플랫폼, 신규 사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를 반영해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 2021)는 사람과 비즈니스, 기기(device), 데이터와 프로세스 사이 수십억의 매일 온라인 연결로 인해 생성되는 경제활동이 디지털 경제이며, 그 중추 요소는 초연결성이라고 지적했다. 초연결성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사물 인터넷에서 초래되는 사람과 조직, 기계 사이의 상호연결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용만 외(2000)는 공간개념 소멸, 예측의 불가능, 선점의 중요성을 디지털 경제의 특징으로 꼽으며 황성주·박선주(2022)는 주요 경제활동이 디지털 전환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또 데이터의 부가가치 창출 등의 디지털 기술 자체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활동이 생기는 두 가지 양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과 초지능화(hyper-intelligence)를 지적했다.

디지털 경제는 ICT 기술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통신을 넘어 금융, 교육, 보건, 의료 등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으면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UNCTAD(2015)에 따르면 2013년 전세계 GDP의 21%를 디지털화된 경제(digitalized economy)가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에는 22.5%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세계은행과 Oxford Economics & Huawei(2017)는 전 세계 GDP의 15% 이상을 디지털 경제가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해 좁은 의미를 적용할 수도 있고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국제기구나 연구소마다 동일한 정의와 범위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측정된 통계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국가는 부가가치, 고용, 임금, 소득, 가격, 디지털 부문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의 영향을 받는 더 넓은 부문 및 산업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변수 측면에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디지털 경제 규모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는 거의 없으며 ICT 부분과 달리 통계 데이터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UN 2022). 아세안의 경우 각종 언론과 보고서에서 사용된 구글, 테마섹, 배인의 보고서³⁾의 동남아 디지털 경제 규모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와 여행, 음식배달과 교통, 온라인 미디어 등 4개 주요 영역의 총 거래금액으로 추정된 총액이다. 이 추정치에는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4개 국가는 제외되었고 디지털 금융과 초기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디지털 경제 개념은 넓은 의미의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일부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만을 다루고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된 보고서 수치만을 연도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자료와 통계 수치를 활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한계가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글로벌 경제에서 디지털 기술의 진화가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ICT 기술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 혹은 ICT 기술의 확산은 아세안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

3) Google, Temasek, Bain & Company는 매년 'e-Conomy SEA Report'를 발간하고 있음.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의 디지털 경제 개념을 적용한다. 아세안 ICT 영역은 텔레콤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자리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들과 스타트업들이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주요한 행위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디지털 경제 성장에서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원정책의 역할은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교통체증이나 일자리 등 사회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II. 스타트업 지원정책

1. 스타트업과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아세안 디지털 경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주요 행위자는 스타트업이다. 전자상거래와 음식배달, 라이드헤일링, 여행부문 등 플랫폼 주요 사업자들은 현지 스타트업에서 출발하였다. 다만 온라인 미디어나 소셜미디어 등은 예외적으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제작능력과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 영향(network effect)이 현지 지역기반 서비스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아세안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타트업의 특성이 새로운 혁신 모델을 실행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란 극도로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영세한 창업초기 기업을 지칭한다(Ries 2011).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라도 스타트업이 될 수 있으며, 창업가가 될 수 있다. 위험을 감수하

더라도 실행하려는 창업가에게 동기부여는 개인적 유인으로 작용하지만,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스타트업의 설립과 성장은 국가경제와 사회적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수가 많아지면 고용이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Aulet & Myrray 2013) 기존의 대기업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뛰어들기 어려운 분야에서도 스타트업들은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전략으로 시장에 과감한 도전을 감행할 수 있다(Autio & Fu 2015; Webb & Ireland 2015) 스타트업이 혁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우호적인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스타트업이 활동,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스타트업 생태계 혹은 창업 생태계(entrepreneur ecosystem)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해당사자 집합의 생성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 집합(Cohen 2006)은 혹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역 창업 환경 내 성과를 연결시키고, 중재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연합되어 있는, 상호 연결된 창업 행위자들과 창업자 조직 그리고 창업과정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Mason & Brown 2014). Isenberg(2011)는 창업 생태계(entrepreneurship ecosystem)는 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적자본, 시장이라는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유기적 체계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는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며 고성장 스타트업의 수를 증가시키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Mason & Brown 2014).

정부의 지원정책은 지원수단과 대상, 방식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의 정책이 창업기업의 성과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부 실증 연구는 청년과 시니어, 재창업 지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주지만(Kuratko 2016; Pontikes & Hannan 2014; 곽태규 외 2018) 반면에 청년창업 지원이 실패자를 더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자금조달 측면에 있어서 이탈리아의 초기 혁신기업(young innovation company)은 벤처캐피탈의 지분투자를 받은 경우 정부보증은행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Giraud et al. 2019). 즉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이 스타트업을 키워 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럽 13개 국가들의 연구개발지원과 창업교육에 대한 투자는 창업 성과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Castaño et al. 2016), 정부의 정책적 창업 투자가 혁신역량 및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실증결과도 제시되었다(박선영·서민호·최희운 2013). 곽태규·천영준·최세경(2018)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 창업교육, 창업자금융자는 창업기업의 역량을 높여 성과증진에 기여하며, 단독지원보다 창업패키지 지원방식을 사용할 경우 매출과 고용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고용과 성장은 스타트업이 늘어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통해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김선우 외 2021; Jorge & Scott 2016; Isenberg & Onyemah 2016). 스케일업을 이룬 고성장 스타트업이 더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기여한다는 증거에 따르면, 스타트업 활성화보다는 스케일업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미국과 EU,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스타트업과 기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스타트업 중심에서 스케일업 중심

으로 전환 중이다(홍대웅·전병훈 2020).

2. 아세안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

디지털 경제의 비중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기는 선진국가들 뿐만 아니라 아세안도 마찬가지이다. 아세안 10개 국가들은 지난 10여년 이상 전 세계 신흥국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6천억 달러에서 2021년 3.3조 달러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고,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1,195달러에서 5,024달러, 구매력 기준으로는 13,594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의 아세안 10개국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4.7%를 기록했다. 빈곤계층의 비율도 2000년 38%에서 2015년 14%, 2020년 8.3%로 크게 감소했다(The ASEAN Secretariat 2019b).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제조업의 수출 호조, 내수시장의 확대, 각국의 정치적 안정세 그리고 글로벌 경기호조 등이 더해져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중국을 대체할 생산거점과 인프라 확대, 경제통합으로 선진시장의 우회 수출기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표 1. 아세안, 중국, 인도의 실질 GDP 성장률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브루나이	1.3	0.1	3.9	1.1	-1.6	-0.5	2.5	2.8
캄보디아	7.0	7.5	7.1	-3.1	3.0	5.2	5.5	6.0
인도네시아	5.1	5.2	5.0	-2.1	3.7	5.3	4.8	5.0
라오스	6.9	6.3	5.5	3.3	2.3	2.5	4.0	4.0
말레이시아	5.8	4.8	4.4	-5.6	3.1	8.7	4.7	4.9
미얀마	6.8	6.8	6.2	3.2	-5.9	2.0	2.8	3.2
필리핀	6.9	6.3	6.1	-9.6	5.7	7.6	6.0	6.2

싱가포르	4.7	3.7	1.1	-4.1	8.9	3.6	2.0	3.0
태국	4.2	4.2	2.2	-6.2	1.5	2.6	3.3	3.7
베트남	6.8	7.1	7.0	2.9	2.6	8.0	6.5	6.8
중국	7.0	6.8	6.1	2.3	8.45	2.99	5.0	4.5
인도	6.8	6.45	3.87	-5.83	9.1	6.8	6.4	6.7

출처: ASEAN Stat, World Bank(검색일: 2023/04/16), Asian Development outlook April 2023.

비록 아세안이 팬데믹의 침체를 딛고 강하게 성장률의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는 팬데믹 기간의 기저효과와 외부 공급망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아세안 회원국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개 국가들 모두가 팬데믹 이전 고도성장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향후 성장률을 높이 유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팬데믹 이전 2019년 싱가포르와 태국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말레이시아 성장률은 5% 미만이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2023년과 2024년의 성장률 전망은 2022년에 비해 낮아진 상태이다. 팬데믹 이전 아세안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성장률보다 낮았고, 2021년 이후 인도의 성장률은 아세안을 능가하였으며 향후에도 더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의 안정적인 성장세는 중국의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고 인도의 부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표 2. 아세안 국가별 1인당 GDP

국가	2000	2012	2019	2021
브루나이	17971.5	47647.8	29403.7	32383.1
캄보디아	301.5	950.4	1685.7	1603.0
인도네시아	770.9	3563.8	4200.4	4348.6
라오스	318.8	1564.6	2621.4	2693.3
말레이시아	4087.6	10670.8	11207.9	11399.7
미얀마	150.4	1189.8	1223.8	1314.4

필리핀	1073.3	2717.7	3512.0	3552.5
싱가포르	23852.3	55546.2	66034.5	72399.7
태국	2004.1	5982.2	8001.8	7645.3
베트남	394.6	1746.8	2713.2	3674.4
아세안	2,882.0	3,975.1	4,841.5	5,024.2

출처: ASEAN Stat 2022, World Bank database.

아세안의 성장세 둔화는 1인당 GDP에서도 나타난다. 2000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아세안 평균은 증가했으나, 브루나이는 증가했다 다시 감소하였고, 말레이시아는 2012년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21년까지 증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태국도 8천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1인당 GDP가 2012년까지 약 5배 증가했으나 그 이후 여전히 4천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국가들을 1인당 국민소득이 중간소득에서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 즉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져있다고 말하기도 한다(Gill and Kharas 2007; Felipe et al 2012; Kharas and Kohli 2011; Lin and Treichel 2012; Woo 2009). 세계은행(2018)은 세계 중간소득국가(Middle Income Countries; MIC)을 1인당 국민소득(GNI)이 2016년 기준 1,006달러에서 12,235 달러 사이의 국가로 정의하는데, 함정에 빠졌다는 의미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가 중간소득 수준에 이르면 정체되어 고소득 경제로 전환하지 못하는 현상을 지칭한다(Garret 2004; Gill and Kharas 2007; Im & Rosenblatt 2013).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중간 소득 국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로 박변순(2019)은 제조업의 생산비중과 고용이 빠르게 감소하는 미성숙 단계의 탈공업화의 영향 그리고 수출경쟁력의 약화, 다국적 기업 중심의 생산구조에서 기술이전 실패 등을 그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로 이전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중간 순위의 국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의 최첨단 기술이나 빈곤국가의 최고 가격과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Garrett(2004)의 의견과 일치한다. 중간소득 국가들은 글로벌화된 시장에서는 더 부유하거나 더 가난하더라도 가난한 국가들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고, 성숙단계 산업을 지배하는 저임금의 빈곤국 경쟁자들과 빠른 기술변화의 산업을 지배하는 부유한 국가 혁신가들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다(Gill & Kharas 2007).

경제학에서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동남아시아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소득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이나 가격에서 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은행의 분류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은 하위 중간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 country)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는 상위 중간소득국가로 분류된다. 하위 중간소득국가는 외국인직접투자와 진출에 따른 단순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축이며, 상위 중진국은 부품이나 부가가치가 높아진 상품 생산 제조업, 서비스업이 주축이 된다. 하위 중진국은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원자재 수출에만 기대서는 한 단계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담보할 수 없다. 상위 중진국이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 수출을 계속 증대시키면서 고도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업그레이드된 프로세스와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집중적인 산업육성정책이 요구된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중산층의 소비증가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이들의 구매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다 질 좋은 상품, 혁신적인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어야 한다. 중진국의 벽을 넘어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NIEs)으로 올라 고소득 국가로의 전환에 성공한 동남아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팬데믹 이전까지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상승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미중갈등과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의 변화와 재편은 동남아 국가들의 입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아세안 상위 중진국들은 2022년 하반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중진국 탈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요구된다. 특히 현단계의 생산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혁신(Innovation) 성장 그리고 탈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다. ICT 영역을 키우고 4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술개발이다. 대기업은 자체 역량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며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으나 아세안 경제의 7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간소득 국가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생태계 구축과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금융과 일상생활의 여러 디지털 서비스와 연구개발에 집중된 고도화된 독자기술 혁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행위자로 스타트업을 간주하고 정책지원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타트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Ⅲ. 아세안 스타트업 지원 정책: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아세안의 상위 중진국 3개국이 혁신 성장을 위해 내세운 중점 전략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 성장이며 이를 주도하는 혁신 세력은 스타트업이므로, 디지털 경제 성장정책은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요 행위자이며 혁신성장을 이끄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아세안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모든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앞선

기술과 연구중심 대학, 풍부한 벤처캐피털이 모여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에 신흥시장의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인프라와 자금,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중간소득 국가에서 도약이 절실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태국 3개국 스타트업 정책은 설립절차의 간소화, 세제 혜택, 규제샌드박스⁴⁾를 모두 실행하고 있지만, 분야별 규제완화의 정도, 외국인투자자와 정부주도 펀딩 지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1.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정책

2억 8천만 명의 가장 많은 인구와 최대시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역시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2013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술 기반 기업 스타트업 프로그램 (Perusahaan Pemula Berbasis Teknologi, Technology-based Startup Company)을 통해 최대 2년간 1억5억 루피아 펀딩 지원을 시작했고, 2014년에는 Hub.ID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과 파트너사, 투자자 연결을 추진했고, 2016년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Gerakan Nasional 1,000 Start-Up'(1000개 스타트업 국가적 부흥운동)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대통령령(PP No. 74)으로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e-Commerce Roadmap)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무엇보다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⁵⁾를 개정했다. 전자상거래 시

4)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뜻함.

5) 대통령령 제44호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Daftar Negatif Investasi). 개정된 네거티브리스트에 따르면 45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전면 개방되었고, 특수 인허가의 취득 또는 인도네시아 조합 또는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 일정한 조건이 수반되는

장을 외국자본에 개방해 해당 분야 스타트업들이 대규모 펀딩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면서 디지털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다 포괄적인 정책지원의 밑그림은 ‘2020 Go Digital Vision’ 과 ‘Making Indonesia 4.0’ 계획에서 마련되었고, 그 기초 아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0 Go Digital Vision’은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최대 디지털 경제로 부상하겠다는 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2018년 ‘Making Indonesia 4.0 Roadmap’ 그리고 ‘2021~2024 Indonesia Digital Roadmap’이다. ‘Making Indonesia 4.0’은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10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제조업과 디지털 전환을 결합해 사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 차세대 산업을 키우려는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단순히 디지털 경제 부흥 전략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식음료, 섬유 및 의류, 자동차, 전자, 그리고 화학 등 5개 영역을 주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체적인 자원조달이 가능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자국내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경제와 관련 펀딩을 제공한 벤처캐피탈은 소득 공제 및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후 5년에서 최대 15년간 10%에서 100%까지 세금감면이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투자요건을 완화하고 등록,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외국인 주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납입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로 상당히 높은 편이나, 업종이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가 100% 허용되었다. 또한 83개의 업종은 행정 부처로부터의 추천서 취득 요건이 면제되었으며 65개의 업종에 걸쳐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비율이 변경되는 등 투자 제한이 크게 완화되었다(법무법인 지평 2016).

서비스별로 외국인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진다.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들은 정보통신부에 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이 권장되고 있지만, 서비스에 따라 투자조정청과 교육부, 금융감독청 등 여러 정부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모나 협업 범위에 따라 준수해야 할 법규도 상이하다.⁶⁾ 핀테크의 경우에는 조건이 더욱 까다롭고, 외국 기업의 활동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집계되는 경우나 국외 기업으로 기준치를 넘는 경우 해당 사업주체는 인도네시아에 반드시 주재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핀테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공유경제, 라이드헤일링, 전자지갑, 데이터 관리 분야에 관심을 두고 ‘Startup 4 Industry Program’, ‘Next Indonesian Unicorn’ 그리고 ‘Startup Studio Indonesia’ 등 여러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했다. 재선에 성공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스타트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지정했으며 인도네시아의 테카콘인 고젝 창업자 나디엄 마카림(Nadiem Makarim)을 교육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교육분야에서의 혁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보통신부의 전략 개발 계획 2020-2024 (Medium-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 2020-2024)은 디지털 인프라로 인터넷 네트워크 확충과 3개의 신규 유니콘 탄생을 목표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면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및 멘토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Government of Indonesia 2020). 인도네시아 디지털 로드맵 2021~2024 (Indonesia Digital Roadmap)은 10개의 우선순위 분야⁷⁾를 선정하고 100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민관협력

6) 인도네시아 투자 조정 위원회(BKPM)가 작성한 투자제한목록은 외국인 투자에 개방된 분야와 허용된 소유권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7) 10개 분야: 디지털 교통과 관광, 디지털 통상 및 금융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농수산업, 디지털 부동산과 도시, 디지털 교육, 디지털 헬스, 산업 디지털화, 정부 디지털화

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 로드맵은 해당 분야의 기술 기업들이 성장 뿐만 아니라 초기 스타트업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비즈니스 단계로 돌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생태계 조성 노력과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 덕분에 반둥 디지털 밸리, 메라 뿌티 인큐베이터가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했고,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9개 대도시와 휴양지로 유명한 발리도 ‘실리콘 발리(Silicon Bali)’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창업중심지로 떠올랐다.

2. 말레이시아 스타트업 정책

말레이시아는 경제정책에서 디지털시대의 성장축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Vision 2020’, ‘국가전환 2050’ 그리고 ‘국가산업 포워드(National Industry 4WARD)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국가경제를 살릴 중요한 축으로 보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 기술 및 혁신 샌드 박스를 포함한 규제혁신과 더불어 담당 기관이 협력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실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DEC: 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 크래들 기금(Cradle Fund), 말레이시아 기술 및 혁신 연구 엑셀러레이터(MRANTI: Malaysia Research Accelerator for Technology & Innovation), 벤처캐피털 매니지먼트 (MAVAP: Malaysia Venture Capital Management), 비즈니스 엔젤 네트워크(MBAN: Malaysia Business Angel Network) 등 정부 기관들이 설립되어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펀딩, 운영 등을 지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예산에도 스타트업을 배려했다. 2019년 정부예산으로 4.9억 달러의 스타트업 펀딩을 편성했으며, 2.4억 달러를 주요 벤처캐피탈과 기관투자자, 증권위

원회가 채택한 분야에 집중 투자에 배정했다. 2020년에는 MDEC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제작기업 육성에 4백만 달러, 크래들 기금을 통해 창업교육 및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투자위원회를 설치해 5G, 디지털경제, 4.0 산업전환 관련 투자에 대해 5년에서 최대 10년간 투자세 공제나 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스타트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춘 말레이시아 스타트업 생태계 로드맵 2021-2030(SUPER: Malaysia Startup Ecosystem Roadmap)이 2021년 발표되면서 한층 더 포괄적이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등장했다. SUPER는 과학기술혁신부가 주도한 계획이어서 과학기술 정책(National Policy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과 기업가 정책 2030(National Entrepreneurship Policy 2030), 그리고 4차산업 정책(National 4IR)과 결합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여러 갈래로 나뉜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상위 20위까지 발전시키고 딥테크⁸⁾ 분야 육성과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예산안에서 스타트업 지원 예산이 증가했다. 2022년 예산에서 여성 기업가 지원을 위해 2억 3천만 링깃(5,400만 달러)이 할당되었고, 1억 5천만 링깃(3,500만 달러)은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따로 책정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안와르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새로운 비전으로 “Malaysia MADANI”를 제시했다. 영어로는 말레이시아 문명사회(civil Malaysia)를 뜻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keMampanan,

8) 딥테크(DeepTech)는 공학·과학 기술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첨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인공지능(AI), 기계 학습, 로봇공학, 자율주행, 생명 과학 등 고도로 복잡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

Sustainability), 번영(Kesejahteraan, Prosperity), 혁신(Daya Cipta, Innovation), 존중(hormat, Respect), 신뢰(keyakinan, Trust), 자비(Ihsan, Compassion) 등 여섯 개의 가치를 뜻하는 말의 약자이며 영어로는 SCRIPT로 표현하고 있다. “Malaysia MADANI” 비전은 안와르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담고 있으며, 여기 사용된 6개 가치 아래 12개의 이니셔티브가 있고, 각각의 이니셔티브 수행을 목적으로 2023년 예산안이 배정되었다. MADANI 6개 가치 중 ‘혁신’은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이 있다. 안와르 총리는 고부가가치 현지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단계까지 정부가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The Straits Times 2023/03/08).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과 소규모 공급업체의 디지털 전환에 보조금을 지급 항목에 1억 링깃이 책정되었고,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17억 링깃 규모의 기금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로 중소기업 프로세스 자동화와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10억 링깃 자금 지원책도 제시되었다. 국부기금인 카자나(Khazanah)와 고용연금 ETF는 혁신 신생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주식시장 ACE나 LEAP⁹⁾에 상장할 경우 최대 150만 링깃의 세금공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인프라 건설 젠델라(Jendela)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47개 산업단지와 3,700개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7억2,500만 링깃을 배정했다.

말레이시아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은 과거 규제 샌드박스 등 스타트업의 활동 영역을 보장해주는 소극적 지원에서 자금 투입의 적극

9)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은 Main, ACE, LEAP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ACE 시장은 고성장 기업이나 이익을 기록하지 못해 Main 시장으로 갈 수 없는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시장이고, LEAP 시장은 ACE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중소기업의 자금동원 플랫폼으로 사용된다. Main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 실적에서 최소 2천만 링깃의 이익과 최근 실적이 6백만 링깃 이상 이익을 거두어야만 한다. ACE 시장은 이러한 과거 수익 실적 요건이 없다.

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기업 공개를 통한 자금 동원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금 부족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World Bank Group 2023). 직접적인 투자는 정부 재정의 한계가 있으므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유치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테크기업들이 상장을 장려하기 위해 안와르 총리는 정부가 차등의결권(dual-class share)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혁신 기업 성장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은 제도적인 생태계 형성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활성화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태국 스타트업 정책

디지털 노마드의 부트캠프라 불리는 태국의 디지털 경제 육성은 1990년대 정보통신 정책으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ICT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ICT Master Plan이 마련되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태국 4.0’이라는 경제구조가 제12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7~2021년)과 연계되어 본격적인 디지털경제 정책과 스타트업 육성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태국 4.0은 중진국 함정에서 탈피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와 중진국 함정탈피를 위한 신성장 동력 마련을 목표로 제시된 전략이다. 제12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은 10대 추진 전략 유망분야에 스타트업 육성을 포함하고, 태국 GDP의 5%를 스타트업을 통하여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뒤이어 나온 디지털경제 육성 종합계획(Digital Economy Promotion Master Plan 2018~2021)은 디지털 시대 인재육성과 기금 조성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도입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경

제 전환, 공동체 디지털 역량 강화와 혁신 생태계 구축 등 4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서 육성 대상이라는 점이 로드맵에 드러나 있다. 태국의 디지털경제 정책은 2016년 설립된 디지털경제사회부(MDES: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이하 MDES) 그리고 국가혁신기구(NIA: The National Innovation Agency)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육성과 지원정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국가 스타트업 위원회(NSC: National Startup Committee)가 구성되었다. 태국 NSC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내 주변국과 겨룰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자와 유능한 창업자투자자 유치, 성공한 스타트업의 인수합병과 엑시트를 위한 관련 자본시장 활성화 등 스타트업 생태계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태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 국가예산의 1%까지 투입하겠다는 계획 하에 2018년에만 3.1억 달러를 스타트업에 배정했고, 2019년 청년 창업가 기금 런칭을 발표했다. 외국인의 창업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태국투자청(BOI)은 2018년 2월 ‘스마트 비자’ 제도를 도입했으며, 5년간 소득세 면제, 엔젤 투자자들에게 세금 인센티브 등 투자활성화 제도를 도입했다. 태국 중앙은행은 핀테크 사업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런칭했으며, 정부 주도로 디지털 경제 진흥원(DEPA: Digital Economy Promotion Agency)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Accelerator Program), 스타트업 태국 리그(Startup Thailand League) 등 스타트업 보육과 육성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태국이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경제기여도를 끌어올리는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다. 디지털 스타트업 기금을 조성했고 디벤처(dVenture)가 2021년에 출범하면서 스타트업 초기 투자를 현지 민간 벤처 캐피탈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3월 태국 투자청은 1천만 바트 펀딩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바이오와

순환경제, 그린 부문 기업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태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정부의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지만, 여러 기관들이 각기 별도의 펀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금 규모는 작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계부처 별로 내용이 중첩되는 창업 교육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특정한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Sukpanich and Juasrikul 2019).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 세 국가의 스타트업 정책을 살펴 보면 국가 디지털 경제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이행의 하위부문에 스타트업을 두고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직접 재정투입을 제외한 제도적 지원책은 비슷한 항목을 담고 있다. 각국의 정책이나 로드맵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거의 유사하다.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향후 혁신 기술에 대한 전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인공지능분야는 이미 기업의 고객응대 및 업무에 깊이 파고 들었고 Chat GPT 등장으로 실생활에도 깊이 파고 들고 있다. 기술의 진화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조직적 대응력이 느린 대기업 보다는 스타트업에서 이러한 기술을 빠르게 발전, 적용시킬 수 있고 정부는 이러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운다.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혁신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기술의 상품화 및 기술기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아세안 3개 국가의 경우 정부의 예산배정의 제약과 같은 재정적 지원의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프라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지원정책도 스타트업허브, 연구개발 센터건립이나 연구비 제공 등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보다 절차 간소화나 일부 규제완

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아세안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잘 조성되어 있는 싱가포르와 비교해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표 3. 아세안 4개국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국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특징	동남아 스타트업의 허브	최대 유니콘 보유, 실리콘 발리	오픈 이노베이션	디지털 노마드의 부트캠프
	딥테크 (Deep Tech)*	핀테크	정부주도	페이먼트, 크립토
정책 비전	스마트 국가 (Smart Nation)	2020 Go Digital Vision 'Making Indonesia 4.0'	Vision 2020, 국가전환 2050	'스타트업태국' 'Thailand 4.0'
Funding	스타트업 SG (싱가포르) 창업자 펀딩 스타트업 SG 대출		정부예산 스타트업펀딩, 주요 벤처캐피탈 기관투자자와 증권위원회(SC) 채택된 분야에 투자	국가예산의 1% 지원계획, 2018년 정부 예산 스타트업에 지출
제도적 지원	스타트업육성단지, 원스톱서비스, 규제샌드박스, VC 세금면제 정부동공투자, 해외진출지원, 전문직 입국패스 (EntrePass),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세제혜택, 외국인투자 확대허용,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정책, 인큐베이팅과 플랫폼 기능을 원스톱에 해결, 세제혜택, 아세안 창업가센터 및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전문직 방문패스비자	스마트 비자제도 도입,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스타트업법, 규제 샌드박스법, 태국 베이들법
육성 분야	핀테크, 크립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사이버보안, 디지털 헬스케어, 자동화, 농수산업 테크			

* 딥테크(DeepTech)는 공학·과학 기술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첨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인공지능(AI), 기계 학습, 로봇공학, 자율주행, 생명 과학 등 고도로 복잡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

출처: 저자정리

세 국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또다른 부분은 규제이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요건에 있어서 태국과 말레이시아보다 제한적이다. 세 국가 모두 상위 중진국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신성장 동력으로 스타트업 지원이 보다 절실한 상황이지만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 시장 규모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필리핀보다 적기 때문에 정부의 외국인 스타트업 설립과 투자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세안 내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한 보호막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IV. 스타트업 투자 그리고 성장가능성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서 세부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국가경제개발 계획이나 여러 로드맵을 통해 제시된 지원 정책들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정책 효과의 측정은 보다 엄밀한 자료에 근거해 측정해야 마땅하나 스타트업 및 디지털 전환에 관련한 국가별 자료는 일정한 기준의 통계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이지만 인터넷 경제규모의 변화, 국가별 경쟁력과 ICT 관련 지표와 투자의 증가를 비교함으로써 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디지털 경제의 규모 증가는 정부의 정책효과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디지털 경제 규모 증가율을 보면 세 국가 모두 20% 이상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6개국의 평균 성장률 30%보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5년 대비 2022년까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다.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이 더 높은 이유는 정부의

다양한 디지털 경제 드라이브 정책 효과에 더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와 라이드 헤일링 등 이용자가 더 크게 증가했고, 서비스 커버리지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상위중간소득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 2015년 이전에 이용자의 수와 지출금액이 이미 인도네시아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4. 3개국 인터넷 경제규모와 연평균 성장률(GMV, 억 달러)

	2015년	2022년	CAGR
인도네시아	80	770	38%
말레이시아	50	210	23%
태국	60	230	21%
아세안-6	320	2000	30%

자료: Google, Temasek, Bain & Company 2018, 2022.

3개국의 정책지원 효과는 스타트업 설립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고 실제로 스타트업 개수가 확연히 증가했다. 양적증가와 함께 투자건수도 증가해 2016년에 비해 2021년까지 투자 건수와 투자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펀딩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우나 매년 발행되는 구글, 테마섹, 베인앤컴퍼니의 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를 비교하면 인도네시아의 성장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투자건수는 290%, 투자 금액은 무려 620% 증가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역시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투자 건수는 각각 216%, 178% 증가했고 투자금액은 230%, 592% 늘어났다. 3개국 모두 투자금액 증가율이 투자건수 증가율보다 크며, 이는 펀딩 될 한 개 당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1년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팬데믹 효과에 기인한다. 팬데믹으로 테크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상승한데다 2020년 팬데믹으로 연기된 투자가 2021년 집중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투자 대상 영역인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슈퍼앱들의 스케일업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으로 투자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 유니콘이 많이 탄생한 것도 이러한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2022년 테크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투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표 5. 3개국 스타트업 투자 건수와 투자금액

	스타트업 투자 건수				스타트업 투자금액 (백만 달러)				최다 투자 영역
	2016	2019	2021	2022	2016	2019	2021	2022	
인도네시아**	166	355	649	260	1,200	3,000	9,000	4,200***	핀테크 전자상 거래, 슈퍼앱
말레이시아**	85	202	236	n.a	130	400	900	290***	
태국*	30	46	57	40	94.4	120	311	568.2	
태국**	55	110	174	n.a.	100	200	600	n.a.	

* Techsauce Startup Directory. <https://startupdirectory.techsauce.co/> (검색일: 2023/07/15.)

** Temasek, Google, Bain & Company

*** Security Commission Malaysia “Annual Report 2022”, Indonesia “Startup Report 2022: Toward More Sustainable Startup Ecosystem in Indonesia.”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유니콘 탄생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고, 투자활성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 규모의 증가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전적으로 정책효과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의 효과는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보다 엄밀하게 드러난다. 규제완화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 정부 정책이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스타트업블링크(StartupBlink)의 생태계 평가는 스타트업 및 지원 조직의 수와 같은 양적 평가와 혁신 능력 등 질적 평가를 모두 고려하고, 사업 환경을 고려한 비즈니스 점수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순위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루는 하나의 축인 정부의 지원정책도 기여했다는 평

가가 가능하다. 스타트업블링크가 수행한 10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의 점수는 2017년 대비 2022년 모두 상승했지만, 상대적 평가를 고려해 순위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대비 2022년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이며, 태국은 오히려 5단계 하락했다.

표 6. 스타트업블링크의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2017년 순위	41	43	48
2019년 순위	41	47	33
2020년 순위	54	48	50
2021년 순위	45	40	56
2022년 순위	38	42	53
2022년 점수	5.586	5.416	3.752
1000위 이내 도시수	5	3	4
양적 점수*	0.46	5.42	3.75
질적 점수**	3.4	1	0.45
비즈니스 점수***	1.72	1.7	1.26
2017-22년 순위 변동	+3	+1	-5

100개 국가, 1000개 도시의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함.

* 양적 점수(Quantity Score): 코워킹 스페이스와 밋업 등 스타트업 행사 수를 평가한 점수

** 질적 점수(Quality Score): 데이터베이스에 속한 스타트업이 혁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여러 요인들을 평가를 종합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적 평가한 점수.

***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공과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 자유로운 운용능력 등과 관련된 일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

출처: StartupBlink, "Startup Ecosystem Report 2022."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에서 발표하는 생태계 평가를 보면 세 국가의 차이는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스타트업지놈은 성과, 펀딩, 시장 접근, 인력과 경험, 연결성, 지식 등 6개 요소를 측정해 도시

의 생태계를 평가한다. 스타트업블링크가 국가와 도시를 모두 평가하는 반면 스타트업지놈은 도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과 측정 평가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스타트업지놈 평가에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의 어느 도시도 모두 글로벌 상위 30위 이내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위 100위 신흥 생태계(Top 100 Emerging Ecosystems)에 이름을 올렸지만 쿠알라룸푸르, 방콕, 자카르타의 순위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인도네시아는 신흥 생태계 상위 15위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21-30위권에 속하고, 태국은 91-100위권으로 한참 뒤쳐져 있다.

표 7. 스타트업지놈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방콕
2022년 신흥 생태계* 순위	12 (-9)	21-30	91-100
성과	10	9	4
펀딩	10	9	2
시장 접근성	2	4	1
인력 & 경험	2	4	1
생태계가치	620억 달러	720억 달러	
초기 펀딩	12.84억 달러	1.98억 달러	

* 신흥 생태계 평가는 성과, 펀딩, 시장 접근성, 인력 & 경험 등 4가지 요소에서 이루어짐. 4개 요소 평가 점수는 1점이 가장 낮고 10점이 만점임.

출처: StartupGenome. 2022.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2."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 따르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인도네시아이며, 그 뒤를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따르고 있다. 비록 스타트업지놈의 평가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순위가 9계단 하락했지만 성과와 펀딩 부문에서 10점을 받았으며, 스타트업블링크 평가에서도 질적 평가와 비즈니스 측면에서 다른 2개 국가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성장 환경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2억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규모가 크고 향후 성장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창업자들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프레킨(Preqin 2022)과 구글, 테마섹, 베인(2022)의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 스타트업 투자 및 건수는 2019년까지 매년 크게 증가했다. 싱가포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2위를 기록해왔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매년 그 증가율은 달라졌다. 2020년 팬데믹으로 크게 위축된 투자는 2021년 증가했다 2022년 다시 펀딩 추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동남아시아 투자를 이끄는 요인은 이 지역의 인구규모와 성장가능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전체 디지털 경제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핀테크를 비롯해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지원이 민간부문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비록 인구와 시장규모에서 인도네시아가 각각 3,200만 명과 7천만 명 인구를 가진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압도하고 있으나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펀딩이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조치는 벤처캐피털과 사모기금 등 투자자들의 스타트업 펀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투자규모의 증가는 스타트업 증가와 유니콘¹⁰⁾의 탄생과 연결된다. 정부 정책이 유니콘을 직접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사업 기회를 열어줄 수 있고 투자 제한 완화와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케일업 정책이 고용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와 해외선진국의

10)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는 스타트업

사례를 엿두해보면 빠르게 고성장을 이룩한 유니콘 기업의 탄생은 정부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목표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 정부 모두가 유니콘 기업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 역시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면서 스케일업 효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 덕택에 스타트업 수는 매년 각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 국가 간 비교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으로는 그랩(Grab)과 고젝(Gojek)이 꼽힌다. 이 두 기업은 라이드-헤일링 부문을 정부가 적극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성장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랩과 고젝은 그들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소프트뱅크나 구글, 텐센트 등 외국투자자들 대규모 펀딩을 받으면서 동남아 전체의 투자 증가를 이끌었으며 유니콘을 넘어 이제는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평가를 받는 데카콘의 자리에 올랐다. 그랩과 고젝의 경우 플랫폼에 참여하는 운전자나 배달기사(파트너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고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국가 GDP, 사회적 부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므로 각국 정부는 유니콘 탄생을 원한다. CB Insight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아세안-6 유니콘은 모두 8개이다. 싱가포르의 그랩과 트렉스(Trax), 인도네시아의 토크페디아(Tokopedia), 오보(OVO) 부칼라팍(Bukalapak), 트래블로카(Traveloka), 태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아직 하나의 유니콘도 탄생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기준 각국 유니콘 수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14개로 증가했고, 태국 4개의 유니콘이 등장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유니콘이 탄생했지만, 아직 1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스타트업 정책이 더 나은 환경, 생태계를 만들고 혁신 증진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세안-6의 혁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측정 가능한 직접적인 지표는 찾기 어려운 관계로

지난 12년간 글로벌 혁신지수의 각국 순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 변동이 반드시 정부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정책이 생태계의 구성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다.

표 8. 국가별 배출된 유니콘 수* (2023년 3월 기준)

	기업수	비중
인도네시아	14	26%
말레이시아	1	2%
싱가포르	28	53%
태국	4	8%
필리핀	1	2%
베트남	5	9%
전체	53	

주식시장 상장으로 유니콘에서 제외된 기업까지 포함한 전체 유니콘 등급 기업 수
출처: CB Insight, Deal Street Asia, 저자 정리.

표 9.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

연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2022	75	36	43
2019	85	35	43
2015	97	32	55
2009-2010	72	28	60
제도*	71	34	78
정치적 환경	58	24	56
규제환경	131	62	113
비즈니스환경**	5	29	65
doing business 정책	26	33	82
기업가정신 정책과 문화	2	20	31

글로벌 혁신 지수는 규제, 인적자본 및 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지식 및 기술성과, 창의적 성과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도는 정치적 환경과 규제환경, 비즈니스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음

** 비즈니스 환경은 Doing Business 정책, 기업가정신 정책과 문화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Global Innovation Index Report 2022."

글로벌 혁신 지수의 종합순위를 보면 태국이 2009-2010년 60위에서 2022년 43위로 태국이 17단계 상승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72위에서 75위로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28위에서 36위로 8단계 하락했다. 혁신 지수 평가 항목은 규제, 인적자본 및 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지식 및 기술성과, 창의적 성과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정책과 밀접히 연관된 부문은 제도이다. 제도는 다시 정치적 환경과 규제환경, 비즈니스 환경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제도 부문에서 34위로 태국과 인도네시아보다 월등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정치적 안정성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종합 순위 하락은 글로벌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인 태국과 베트남(2022년 48위) 사이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면서 아세안 내에서의 경쟁우위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규제환경에서 131위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정부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비즈니스 환경 부문에서 기업가정신 정책과 문화 요소에서는 2위로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나 금융 및 산업의 부문별 규제가 남아 있지만 스타트업 창업 환경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사업 영역 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태국 역시 규제환경에서 113위 그리고 doing business에서 82위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스타트업 육성에 우호적이지만 실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정책 지원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은 다양하게 정의되는 디지털 경제의 범위 가운데 넓은 의미의 디지털 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성장이 국가 경제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혁신 성장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며 아세안 각국 역시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활성화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지점에서 연구의 출발점을 삼았다. 아세안의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 3개국의 경우 디지털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주체가 기존의 현지 대기업보다는 혁신 스타트업이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혁신성장동력을 키워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바라볼 것을 제시하였다. 스타트업 지원정책은 세제혜택과 규제샌드박스, 창업센터와 보육프로그램 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펀딩이나 대출 등 재정적 지원책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다. 말레이시아는 자국내 스타트업 성장에서 가장 부족한 부문이 금융 조달이므로 정부가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시키는 역할에서 적극적인 투자자로서의 역할까지 확장하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와 혁신 지수, 유니콘 탄생 그리고 투자측면에서 정부정책의 영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많은 수의 유니콘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과 창업환경에서 향상된 측면이 있으나 규제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인의 스타트업 설립과 투자 요건에서 인도네시아 규제 장벽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아세안 내에서 혁신지수와 생태계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베트남 부상으로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혁신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지원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지식과 기술의 축적 및 자본 투자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신흥국가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복잡한 절차와 일관성이 없는 규제는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바꿔야 한다. 즉 스타트업 활성화에서 스케일업 지원정책으로 전환 준비를 해야 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 기술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자국 내 인재 육성 및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초기 창업 지원에만 집중되면 초기 스타트업 수는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이 낮아지고 데스밸리를 통과할 단계까지 다다르지 못한다. 한국 모태기금과 같은 정부 주도적 펀딩이 부족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순수 민간부문의 투자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초기 단계에서 엔젤캐피탈 투자가 뒷받침될 때 성장단계로 이행이 가능하고 민간 투자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이 활성화되어야 스케일업 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비록 인도네시아에서 데카콘과 유니콘이 여럿 등장했지만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투자가 이끌었고 펀딩 역시 인구수에 기반한 시장규모에 따른 성장기회에 기댄 플랫폼 기반 B2C(Business to Consumer), 핀테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무엇보다 향후 스타트업 및 디지털 경제 성장에서 맞이할 또 다른 한계는 인재와 연구개발 역량이다. 신흥개발도상국가의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역량 부족은 지속적 성장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스타트업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의 딥테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대상 3개국의 정책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여러 기술 지원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분야의 기술 수준이

글로벌 선두기업과 격차가 크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빈약해 정책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의 자체 연구역량이 높음에도 외국인들의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모범 사례로 삼아 싱가포르의 모델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ICT 관련 대학졸업생의 수가 많지만 안정적인 연구기반이 취약하다. 장기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집중지원분야와 대상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등장하는 많은 분야를 나열하고 구색 맞추기를 한다면 제한된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세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지만 비교 가능한 국가별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간접적인 지수 변화를 증거로 사용하였으므로 해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데이터 수집과 계량화된 변수를 이용하는 실증 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곽태규 · 천영준 · 최세경. 2018. “정부 정책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의 수단, 대상 그리고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3(2): 83-103.
- 김선우, 홍정임, 김승현, 오승환. 2021. “영국의 스케일업 모니터링 체계와 한국에의 시사점.” 『STEPI Insight』 Vol. 270.
- 박번순. 2019. 『아세안의 시간: 동남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지식의 날개.
- 박선영 · 서민호 · 최희윤. 2013. “아이디어 창업 · 사업화를 위한 공공/민간의 지원정보 제공 체제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 법무법인 지평. 2016. “지평 뉴스레터 Legal Update.”
- 이용만 · 이근태 · 전종규. 2000.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LG경제연구원.
- 홍대용 · 전병훈. 2020. “글로벌 창업기업 스케일업(Scale-up) 지원 정책 분석: 스케일업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6): 11-27.
- 황성수 · 박선주. 2022.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역할 재정립: 플랫폼산업과 Governing the Commons의 가능성.” 『한국행정논집』 34(2): 175~198.
- 현대경제연구원. 2017.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 (VIP리포트 17-15).
- Aulet, W. & F. Murray. 2013. “A Tale of Two Entrepreneurs: Understanding Differences in the Types of Entrepreneurships in the Economy.” The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 Autio, E. & K. Fu. 2015.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and Entry into Formal and Informal Entrepreneurship." *Asian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32(1): 37-94.
- Brynjolfsson, E. & Kahin, B. 2000. "Introduction." Brynjolfsson, E. & Kahin, B. (eds.), *Understanding the Digital Economy: Data, Tools, and Research*. The MIT Press.
- Bukht, R. & Heeks, R. 2017. "Defining, Conceptualising and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sations Research Journal* 13: 143-172.
- Castaño, M.S. & Méndez, M.T. & Galindo, M.Á. 2016. "Innov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business-growth expectations among entrepreneurs in the services sect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5): 1690-1695.
- Cohen, B. 2006. "Sustainable Valley Entrepreneurial Ecosystems."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5(1): 1-14.
- Cohen, W. M. & Klepper, S. 1996. "Firm size and the nature of innovation within industries: The case of process and product R&D."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8(2): 232-243
- Deloitte. 2015. *What is Digital Economy?* New York: Deloitte.
- European Commission. 2013. "Expert Group on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gen_info/good_governance_matters/digital/general_issues.pdf
- Felipe, J. & Abdon, A. & Kumar, U. 2012. "Tracking the Middle-income Trap: What is it, who is in it, and why?" *Levy*

Economics Insitutue Working paper No.715.

- G20 DETF. 2016. “G20 Digital Economy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itiative.” G20 Digital Economy Task Force. <http://www.g20.utoronto.ca/2016/g20-digital-economy-development-and-cooperation.pdf>
- Garret G. 2004. “Globalization’s Missing Middle.” *Foreign Affairs* 83: 84-96.
- Gill, I. & Kharas, H. 2007. *An East Asian Renaissance: Ideas for Economic Growth*. Washington D.C.: World Bank.
- Giraud, E. & Giudici, G. & Grilli, L. 2019. “Entrepreneurship Policy and the Financing of Young Innovative Companies: Evidence from the Italian Startup Act.” *Research Policy* 48(103801): 1-18.
- Google, Temasek, Bain & Company. 2019. *e-Conomy SEA 2019*.
_____. 2022. *e-Conomy SEA 2022*.
- Government of Indonesia. 2020 “Medium-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 2020-2024”
- Heeks, R. 2008. “Researching ICT-Based Enterprise in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Informatics Working Paper 30, IDPM, University of Manchester, UK.
- Hitt, M. A. and R. E. Hoskisson & R. D. Ireland. 1990.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managerial commitment to innovation in M-form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4): 29-48.
- Im, F.G. and D. Rosenblatt. 2013. “Middle-income Traps: Conceptual and Empirical Survey.”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594.
- Isenberg, D. 2011.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rategy as a

- New Paradigm for Economy Policy: Principles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1-13.
- Isenberg, D. and V. Onyemah. 2016. “Fostering scale-up ecosystems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Global Entrepreneurship Congress.
- Jorge, G. and S. Scott. 2016. “The State of American Entrepreneurship: New Estimate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ntrepreneurship for 15 US States, 1988-2014.”
- Kharas, H. & H. Kohli. 2011. “What is the Middle-Income Trap, Why do Countries Fall into It, and How Can It be Avoided?” *Global Journal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3(3): 281-289.
- Kling, R. & R. Lamb. 2000. “IT and Organizational Change in Digital Economies.” E. Brynjolfsson & B. Kahin eds. *Understanding the Digital Economy*. Cambridge: MIT Press. pp. 295-324.
- Kuratko, D. F. 2016. “Different Entrepreneurial Ventures for Greater Societal Value: A portfolio approach to assist public policy.” *The Antitrust Bulletin* 614: 546-560.
- Lane, N. 1999. “Advancing the Digital Economy into the 21st Century.”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13: 317-320.
- Lin, J. Y. & V. Treichel. 2012. “Learning from China’s Rise to Escape the Middle-income Trap: A new structural economics approach to Latin Americ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6165.
- Mahoney, J. T. 2004.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J. T. Mahoney (ed.), *Economic foundations of strate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pp. 12-85

- Manyika, J. & C. Roxburgh. 2011. "The great transformer: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McKinsey Global Institute* 1(0360-8581).
- Mason, C. & Brown, R. 2014.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Growth Oriented Entrepreneurship." OECD.
- Mesenbourg, T. L. 2001.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US Bureau of the Census, Suitland, MD.
- Nooteboom, B. 1994. "Innovation and diffusion in small firms: Theory and evidence." *Small Business Economics* 6(5): 327-347.
- OECD. 2013. *The Digital Economy*. Paris: OECD.
- Oxford Economics. 2017. "Digital spillover: Measuring the true impact of the digital economy." Huawei and Oxford Economics. <https://www.oxfordeconomics.com/recentreleases/digital-spillover>.
- Pontikes, E.G. & M.T. Hannan. 2014. "An Ecology of Social Categories." *Sociological Science* 1: 311-343.
- Preqin. 2022. "Preqin Territory Guide: ASEAN 2022"
- Ries, E. 2011. *The Lean Startup: How Today's Entrepreneurs Use Continuous Innovation to Create Radically Successful Businesses*. Random House LLC.
- Rogers, M. 2004. Networks, firm size, and innov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22(2), 141-153
- Scherer, F. M., & Ross, D. 1990.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3rd ed.). Boston, MA: Houghton-Mifflin

- Singapore Venture and Private Capital Association. 2019. "SVCA 2019 Factsheet."
- StartupBlink. 2019. "Ecosystem Ranking Report."
- Tapscott, D. 1996. *The Digital Economy: Promise and Peril in the Age of Networked Intelligence*. New York: McGraw-Hill.
- The ASEAN Secretariat. 2018. "ASEAN Key Figures 2018."
- The ASEAN Secretariat. 2019. "ASEAN Key Figures 2019."
- The ASEAN Secretariat. 2022. "ASEAN Key Figures 2022."
- The Strait Times. 2023. "Malaysia to Continue Supporting High Growth Start-ups: Anwar." March 3. (검색일: 2023.6.17.)
- UN. 2022. "Digital Economy Report Pacific Edition 2022."
- UNCTAD, U. (2015, March).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Reforming international investment governance. I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Webb, J. W. & R.D. Ireland 2015. "Laying the Foundation for a Theory of Informal Adjustments." P.C. Godfrey ed. *Management, Society, and the Informal Economy*. London: Routledge. pp. 21-41.
- Woo, W. T. 2009. "Getting Malaysia Out of the Middle-Income Trap." SSRN. <http://dx.doi.org/10.2139/ssrn.1534454>
- World Bank. 2018. *World Bank Annual Report 2018* (English). Washington, D.C. : World Bank Group.
- World Bank. 2023.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3. <http://hdl.handle.net/10986/39846>
- World Economic Forum and Asia Development Bank. 2017. "ASEAN 4.0: What do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ean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동남아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115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19. “Global Innovation Index 2019: Creating healthy lives-The future of medical innovation.”

(2023.07.15. 투고, 2023.07.17. 심사, 2023.08.01. 게재확정)

<Abstract>

Startup Support Policies in ASEAN: A Comparative Analysis of Malaysia, Thailand, and Indonesia

Young Kyung KO
(Korea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startup support policies implemented in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and with a focus on their alignment with national objectives of fostering innovative growth engines and escaping the middle-income trap. The study investigates various policy measures adopted by these countries, which share tax incentives, regulatory sandboxes, incubators, and incubation programs. However, it also highlights the relative weakness of financial support measures, such as government-led funding and loans, in Indonesia and Thailand compared to Malaysia. In Malaysia, th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critical role of financing in promoting domestic startup growth and is expanding its involvement by actively connecting investors with startups and assuming the role of an investor itself. This shift in strategy aims to address the significant gap in funding opportunities. Conversely, Indonesia's startup ecosystem has witnessed remarkable progress, as evidenced by the creation of 14 unicorns. However, the country still struggles with regulatory barriers that hinder foreign startups and

investment. Malaysia, ranked second in ASEAN after Singapore, demonstrates a strong innovation index and favorable ecosystem evaluation, boasting one unicorn. Thailand, with four unicorns, lags behind Malaysia and faces lower global rankings. While the startup policies implemented by these three countries have shown positive outcomes in stimulating entrepreneurship, there is a need to shift focus towards scale-up policies and strategies to facilitate qualitative growth. This entails emphasizing the cultivation of talent and suppor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s. By aligning their policies with these objectives, Malaysia, Thailand, and Indonesia can further enhance their startup ecosystems and bolster long-term economic growth.

Key Words: startup, startup support policy, startup ecosystem, digital economy, Malaysia, Thailand, Indonesia

이슬람식 경제의 현실 적용: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종교적 인식과 실천*

김 형 준**

국문초록

198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고, 이슬람을 삶의 원칙으로 적용하려는 흐름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경제적 영역에서 진행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화 움직임은 금융, 할랄, 자캇 등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1992년 이슬람 은행의 운영이 시작된 후 보험, 채권, 주식, 전당으로 확장되었으며, 2011년 자캇 위원회 설치가 입법화되었고, 2014년 할랄제품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도적 차원의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이슬람 금융, 할랄, 자캇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일반인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슬람 경제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않은 무슬림 소비자의 인식과 실천 양상을 밝혀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할랄, 금융, 자캇 등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제도적으로 구축된 상황에서, 이것이 무슬림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활용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슬람화 과정에서 가시화된 제도적 차원의 움직임이 무슬림의 삶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문제를 보다 균형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영역에서 전개된 이슬람화가 과거의 것을 새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4531). 인도네시아 욕자카르타(Yogyakarta)에서 수행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현지인에게 감사하며, 이 글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에게도 감사를 포함.

**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hjunkim@kangwon.ac.kr

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급진적인 방식이 아닌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것이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 할랄, 자캣, 샤리아 은행

I. 들어가는 말

무슬림은 종교적 가르침에 맞추어 일상을 살아가도록 요구된다. 5가지 의무(five pillars)라 일컬어지는 신앙고백(sahadat), 매일 5차례의 예배, 한 달의 금식, 종교적 기부(zakat), 메카로의 순례(hajj) 등은 종교적 실천의 중요성을 예시한다. 5가지 핵심 의무에 더해 무슬림의 일상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적 의무가 존재하며, 이 중 일부는 샤리아(syariah)라 불리는 이슬람법의 적용을 받는다. 살인이나 절도와 같은 형법의 문제, 결혼이나 이혼, 상속과 같은 가족법의 문제가 샤리아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 대상인데, 그 적용 범위는 개별 무슬림 사회의 전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98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화(Islamization) 움직임이 가시화되었고, 이슬람을 삶의 원칙으로 적용하려는 흐름이 강하게 대두되었다(김형준 2013). 예배나 금식 같은 사적 영역에서 시작한 이슬람화 움직임은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에 접어들면 지방 정부 조례에 이슬람 교리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Bush 2008). 이런 식의 움직임은 복고주의적(revivalistic) 경향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슬람이 가장 이상적으로 적용된 시기를 선지자 무함마드(Muhammad)의 통치기로 설정한 후, 과거의 이상향으로 돌아가 이를 재건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Ali 2012; Azra 1996;

Esposito & Voll 2001). 하지만 이를 복고주의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들이 지향하는 이슬람화의 목표가 현재적 상황에 맞추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슬람 교리의 지방 조례화 시도를 예로 들면, 이는 관습적 종교 공동체가 아닌 현대적 행정 체계를 통해 이슬람식 가치를 강제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경제적 영역에서 나타난 샤리아 금융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자 금지라는 교리의 적용은 서구식 금융 산업과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 놓여서, 신용카드나 모기지(mortgage) 같은 거래 방식을 거부하기보다는 이를 이슬람식 교리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Rudnyckyj 2019) 이슬람 금융이 발전했다.

경제적 영역에서 진행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화 움직임은 금융, 할랄, 자캣(zakat: 종교적 기부) 등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1992년 이슬람 은행의 운영이 시작된 후 보험, 채권, 주식, 전당으로 확장되었으며, 2011년 자캣 위원회(Badan Amil Zakat Nasional) 설치가 입법화되었고, 2014년 할랄제품보장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국회를 통과했다(Choiruzzad 2013; Lubis 2004; Silitonga 2016; Wibisono 2015). 제도적 차원의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이슬람 금융, 할랄, 자캣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일반인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었다.

이슬람식 경제 활동의 가시성으로 인해, 그에 대한 학계의 논의 역시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동남아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내 논의를 살펴보면, 그 발전 배경(오명석 2022), 운영 원리와 제도적 적용 방식(김선정 2011; 손태우 외 2000) 그리고 현실에서의 발전 양상(이선호 2014; 이선호 외 2019; 전제성 외 2014) 등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일부 연구는(김형준 2020; 이지혁 2021) 이슬람 금융이 무슬림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는지의 문제를 검토하지만, 국외

학자들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즉,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소비자에 관해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무슬림을 주요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할랄 관련 연구 경향 역시 이슬람 금융과 유사해서, 할랄의 적용 원리(오명석 2012), 할랄 관련 제도의 구축(박정훈 2016; 박지현 2016; 이해리 외 2019; 현재훈 2016), 그리고 현실에서의 적용 양상(김형준 2017; 손승표 2021)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다. 할랄 관련 연구에서도 일부 응용적 차원의 연구를 제외하고는(박수진 2017; 박하영 2021) 무슬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캣은 국내 연구자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주제로서(cf. 최경희 2021), 그에 관한 관심이 최근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는 국외 연구 경향(Irfan 2011; Ismail et al. 2022; Salim 2008)과 차이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슬람 경제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않은 무슬림 소비자의 인식과 실천 양상을 밝혀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할랄, 금융, 자캣 등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제도적으로 구축된 상황에서, 이것이 무슬림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활용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슬람화 과정에서 가시화된 제도적 차원의 움직임이 무슬림의 삶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문제를 보다 균형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영역에서 전개된 이슬람화가 과거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급진적인 방식이 아닌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것이다.

연구를 위한 일차 자료는 2023년 2월 인도네시아 자바 중부의 도시 족자까르따(Yogyakarta: 이하 족자)에서 2주 동안 수집되었다. 연구자는 알고 지내던 지인과 이들의 소개로 만난 1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도시거주자인 연구대상자 모두와 1시간 내

외의 인터뷰를 식당이나 카페 등지에서 행했으며, 이들 중 일부와는 두 차례 이상 만나 관련 자료를 모았다. 연구대상자 모두 하루 5차례의 예배와 1달간의 금식을 행한다고 이야기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슬람 관련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연구대상자 중 60대가 3명, 50대가 3명, 40대가 6명, 30대가 3명이었다. 이들의 직업은 대학교수 6명, 화이트칼라 직업인 6명, 자영업자 2명, 화이트칼라 은퇴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 수준을 가졌다.¹⁾

II. 할랄 인식과 실천

할랄 음식, 특히 돼지고기 금지는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실천해온 금기였다(Raffles 2010). 1980년대 후반, 할랄이 아닌 식자재가 혼합된 음식 유통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자 무슬림 단체의 강력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자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를 통해 할랄 인증에 개입하게 되었다(김형준 2017). 할랄 문제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개입 필요성이 시민 사회에 의해 제기되자 할랄 관련 규정이 꾸준히 제정되었고, 이를 통괄하는 법안인 할랄제품보장법(Jaminan Produk Halal)이 2014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1) 조사 기관과 기준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범위는 차이를 보인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인도네시아 중산층을 하루에 미화 2달러에서 15달러(3만-22만 루피아)의 소비 수준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한 반면, 세계은행은 소비 수준 기준으로 일 인당 한 달 백이십만 루피어를 중산층 기준으로 설정했다(World Bank 2019). 연구 지역인 족자 은행이 제시한 최소 기준인 월 구십만 루피(하루 미화 2달러)와 세계은행 기준인 백이십만 루피아 사이가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개략적인 소득 규모를 물었을 때 제시된 가장 낮은 금액이 5백만 루피어였기에 이들을 중산층으로 규정하기에 큰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 여부를 표기할 것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발효 시점이 계속 연기되어 현재까지도 실제 시행되고 있지 않다.²⁾

연구대상자 모두는 할랄 식자재를 검증해야 할 정부의 의무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자재 모두가 할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확신은 관습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거래해 온 구매처에서 판매하는 재료이기에 당연히 할랄이라는 것이다. 외식에 대해서도 이들은 동일한 태도를 취했다. 지역에 있는 음식점 중 자신들이 방문하는 곳은 할랄 음식을 파는 곳으로서, 할랄 인증 여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들에게서 식자재나 음식점의 할랄 인증 여부를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명확하게 찾아볼 수 없었다.

음식을 포함한 상품 구매 시 할랄 인증 로고를 확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들은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할랄 로고를 반드시 확인하며 구매한다는 연구대상자는 없었던 반면, 할랄 로고를 때때로 확인한다는 의견, 물건 사용 중 할랄 로고를 보기도 한다는 의견, 할랄 로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되었다. 이런 다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구매 상품이 할랄이라는 데 확신을 보였다. 판매자가 제품의 할랄 여부를 당연히 고민할 것이기에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식이었다. 출판

2) 2014년 인도네시아에서 범제화된 할랄제품보장법 1조 1항에 제시된 제품의 정의는 “음식,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 제품, 유전공학 제품 등과 관련된 물건이나 서비스 그리고 일반인에 의해 착용되고 이용되며 효용이 있는 물건이다.” 제품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규정됨으로써 이 법안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 모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안은 할랄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경우 할랄이 아님을 보여주는 표식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할랄 개념을 확장하여,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 등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서 그 할랄성을 검증하도록 요구한다.

사에서 일하는 30대 밤방씨는³⁾ 자신의 상품 구매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평소 구매하는 상품이 할랄인지 확인하지 않는다. 이미 오랫동안 써 왔기 때문에 ... 새로운 상품을 살 때는 때로 할랄 표시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보통이다. 족자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할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할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밤방씨는 상품 구매 과정에서 제품의 할랄성(halal-ness)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태도는 할랄과 관련된 또 다른 주요 대상인 음식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에 할랄 인증 표시가 붙어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점, 예를 들어 한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 전문점을 방문할 때도 할랄 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지인에게 묻는 정도의 행동을 취했다. 음식점 이용에 대해 30대 대학교수는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음식에서 돼지고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가끔 접한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 자주 다니는 음식점에 할랄 인증 표시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방문한 곳이고, 또한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에 당연히 할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연구대상자들은 자신들이 방문했던 음식점에 할랄 인증 표시가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할랄 인증 표시는 관료제적인 것으로서, 굳이 그렇게 하지

3) 연구대상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않아도 할랄 음식 판매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무관심은 할랄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접하는 상품이나 음식점의 할랄성에 대한 확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었다. 할랄을 반드시 지키려 하지만 주변에서 접하는 물품의 할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 태도를 설명하면서, 연구대상자 중 일부는 자신들의 해외여행 경험을 제시했다. 한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일본 방문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일본에 도착하고 편의점에 갔는데, 할랄 표시된 먹거리를 찾을 수 없었다. 컵라면을 선택하려 했지만, 라면 성분에 돼지기름이 함유될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고, 과자를 사려 했지만, 기름에 튀긴 과자 역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 결국 바나나와 사과를 샀고, 그날 저녁 약속이 있을 때까지 그것만 먹고 버텼다.

외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연구대상자들은 식품의 할랄성에 대해 자신들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부각하고자 했다. 외국과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할랄 음식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족자에서 할랄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생활하는 모습은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대상자들은 할랄제품보장법이 입법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무슬림이 종교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인지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할랄제품보장법과 일정한 차이를 보여서, 이들은 이 법의 대상을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으로 제한시켜 이해했다. 그 결과 이 법안이 구매 가능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연구자가 알려주었을 때 이들은 놀라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50대 자영업자인 무푸티씨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할랄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리라는

연구자의 말을 듣고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가전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은] 쓸데없는 일이다. 할랄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이런 말을 들어 본 적 없으며, 별 필요 없다. [할랄 인증을 받은] 어떤 제품이 할랄이라면, 다른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가? ... 예전에 질밥(jilbab: 히잡)을 할랄로 선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 할랄 인증 없는 질밥을 쓰면 이슬람적인 게 아니라는 말인가?

무프티씨는 할랄 준수를 위해 회피해야 할 핵심 요소로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지적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모든 제품에 할랄 표기를 요구하는 할랄제품보장법은 편의주의적이고 상업주의적이라 규정될 수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이처럼 부정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무프티씨는 법안의 필요성 그리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 모두에 대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견해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일반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으로서, 할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묻는 서베이 결과를 보면 매우 높은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는 천명을 연구대상자로 설정하여 인도네시아 종교성에서 진행한 서베이 결과이다(Karim 2013).

<표 1> 할랄에 대한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태도(%)

질문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상당히 동의	동의	매우 동의
할랄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식음료를 구매/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0	2	9	38	51
식음료 구매 전 할랄 라벨의 유무를 확인한다.	3	10	24	29	34
할랄이 아닌 제품에는 이를 표시할 라벨이나 코드가 있어야 한다.	0	1	4	33	62

<출처> Karim(2013)

서베이 자료를 보면, 절대다수의 무슬림 응답자가 할랄 제품만을 소비할 의지를 피력하고, 이를 위해 할랄 라벨 유무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할랄 제품임을 알 수 있는 라벨이나 코드의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할랄제품보장법과 같은 정부의 제도적 규제를 지지했다. 연구대상자들의 인식은 무슬림 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 실천 과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상품 구매 시 명확하게 할랄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음식점을 방문할 때도 할랄 표시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할랄 음식 판매에 대해서는 확신을 뒀다. 이러한 모습은 전통 사회에서 무슬림이 취한 소비방식과 커다란 차이를 갖지 않는다. 이들의 태도와 행동을 고려해보면, 정부에 의해 추진된 할랄 정책이 무슬림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비교문화적 자료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무슬림이 소수이거나 일정수의 비무슬림이 무슬림과 공존하는 지역과 달리⁴⁾ 족자와 같이 무슬림이 절대다수를 구성하는 지역에서는 제도화된 할랄 인증 도입으로 인해 기존 관행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비교할 때 할랄 소비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인식은 고양됐지만, 이들은 이전의 생활양식을 전환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4) 상당수의 화교 인구가 존재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국가의 할랄 인증 제도가 식자재 성분의 확실성을 보장함으로써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보고되었다. 무슬림 소비자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중국 음식점이 할랄 인증을 통해 종교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장소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은 제도화된 할랄 인증이 일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동함을 시사한다(Abdullah & Ireland 2012; Fischer 2012).

Ⅲ. 이슬람 금융 인식과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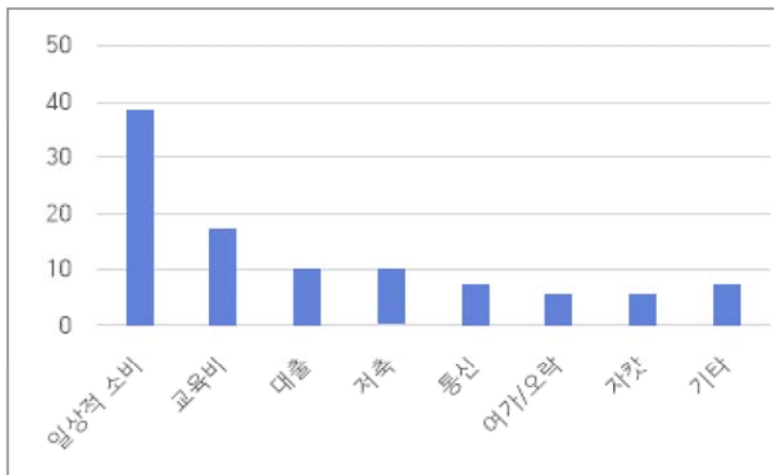
이슬람 교리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 중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영역은 이슬람 금융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샤리아 은행이 1990년대 초부터 이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은행에서 시작한 샤리아 금융은 이후 보험, 채권, 전당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1990년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대와 달리 이슬람 금융, 특히 은행의 시장 확대는 큰 폭의 변화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샤리아 은행이 전체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40%대에 도달한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꾸준한 성장이 있었음에도 2020년대 6-7%대에 머물고 있다(Antara 2022; 오명석 외 2022). 이러한 더딘 성장에 대해 관련 연구에서는 접근성과 편의, 낮은 인지도라는 측면에 초점 맞추어 설명하는 경향을 보이지만(Ascarya, Rahmawati & Hendri 2015; Nurrohmah & Radia 2020), 접근성의 문제는 도시 지역의 경우 일정 정도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자료를 보면, 일반 은행 중 샤리아 은행을 운영하는 경우는 13곳이었고, 샤리아 금융을 전담하는 지방은행과 상업은행이 19곳에 이르러서, 전체적으로 32곳의 샤리아 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 은행이 운영하는 지점 수는 782개였으며, 지점보다 낮은 단위인 사업소(kantor cabang pembantu)는 1,803개에 이르렀다. 연구대상 지역인 족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점이 7개, 사업소가 28개 소재했다(Otoritas Jasa Keuangan 2022). 일반 은행보다는 적지만, 이러한 규모는 샤리아 금융의 대중화를 접근성의 문제로만 환원시켜 바라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자들의 이슬람 금융기관 이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들의 월별 소비를 보여줄 자료를 수집했다. 정확한 수치에

기반을 둔 자료가 아니라 추산치이지만, 이들 가정의 경제생활에 대한 윤곽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연구대상자의 소비 비중을 평균하여 정리한 결과이다.⁵⁾

<그림 1> 연구대상자들의 월 지출 비중(%)



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영역은 일상적 소비였는데, 식비, 의복비, 교통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높은 소비 영역은 교육비였으며, 저축과 대출 상환 역시 각기 10% 내외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통신, 여가/오락, 자캣으로 5% 전후를 차지했다. 일상적 소비가 할랄과 관련되었다면, 저축과 대출, 자캣은 이슬람 금융과 연결되었다.

저축과 대출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이 이용한 금융기관을 살펴보

5) 연구대상자에게 소비 항목을 하나씩 먼저 언급한 후, 자신의 소비 비중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일상적 소비에 대해 이들이 “1/3 정도”, “40퍼센트”와 같은 식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개략적 추산치로 간주될 수 있다.

면, 샤리아 은행은 주요 대상이 아니어서, 15명 중 3명만이 샤리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고 있었다. 3명 중 한 명은 모든 금융 거래를 샤리아 금융기관과 했던 반면, 다른 두 명은 샤리아 금융기관과 관행(conventional) 금융기관을 같이 이용했다.

샤리아 은행의 출범 이유는 이자 때문이었다. 이슬람 교리상 이자가 금지되어 있기에 이자에 기반을 둔 관행 은행 이용은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⁶⁾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관행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로 연구대상자들은 관성과 습관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오랫동안 이용해 왔기에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이들의 은행 이용 방식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관행 은행과의 거래가 이자와 연결된다고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연구대상자의 지출 중 10% 정도가 저축에 할당되었는데, 은행 예금은 이들이 저축하는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이들은 작은 규모의 돈을 일시적으로 맡겨 놓고 종잣돈을 모으는 장소로 은행을 활용했는데, 어느 정도 예금이 모이면 이를 금이나 토지,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실물 자산으로 전환했다. 도매업을 하는 이승아디씨는 자신의 전략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은행에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면, 귀금속, 특히 금을 산다. 내 집 사람 같은 경우는 가능할 때마다 금을 사서 보관해 두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금을 팔아 자금을 마련한다. ... 이것 외에 투자 방식은 소이다. 알고 지내는 농부와 함께 소를 사서 키우는데, 이룰 아다(Idul Adha: 이슬람 희생제)를 앞두고 소 가격이 오르면 이때 팔아서 이익을 나눈다.

6) 은행 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졌지만, 서구식 은행에 대한 대한 부재로 인해 1990년대까지 타협적인 행보가 이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야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위원회(MUI)와 무함마디아(Muhammadiyah)가 이자에 기반을 둔 은행을 하람(haram), 즉 비이슬람적 관행으로 규정했다(전제성·김형준 2014).

금에 대한 이승아디씨의 관심은 인터뷰 도중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농촌 사람은 장식품 형태를, 도시 사람은 금괴를 선호한다고 말한 후, 스마트폰에서 금괴 가격을 찾아 보여주었다. 0.5그램과 1그램부터 25그램, 50그램까지 제시되어 있는 사진에는 그날의 금 판매 및 구매 시세가 제시되어 있었다. 판매와 구매 가격에서 나타나는 10% 정도의 격차가 너무 크지 않은지를 묻자 그는 금 시세가 계속 올라가기에 금을 판매하는 가격이 구매 가격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실물 자산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그는 연구대상자 중 유일하게 소를 투자 수단으로 활용했다. 도시 주변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에 더해, 유통업에 종사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공동 소 사육을 투자의 한 방식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연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거론한 투자 대상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였다. 소비재로서 투자 수단이라고 규정할 수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지적하며 그 장점을 거론했다. 과거 미화 대비 루피아 환율 약세가 몇 차례 나타났을 때, 중고라 하더라도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격에 더해 쉽게 구매자를 구할 수 있다는 높은 환금성 역시 그 장점으로 지목되었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있어 은행 이용의 주된 목적은 월급을 받고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공과금을 내는 것이었다. 일정 정도의 여유 돈을 예금한 경우에도 그것은 또 다른 투자를 위한 잠정적인 예치일 뿐, 예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들에게는 은행 이용을 이자를 취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식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 은행 이용을 이자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수료였다.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예금과 현금 카드 이용을 위해서 매달 내야 하는 수수료를 연구대상자들은 돈을 맡아주는 관리비라고 여겼다. 예금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예금에 대해 받

는 이자보다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은행 이용을 하면서도 이들은 이자를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인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이자를 받기 위해 여윳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방식을 연구대상자들이 활용하지 않았기에, 관행 은행 이용을 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행동과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결과할 수 있었다.

이들의 전체 소득 중 10% 정도가 대출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의 은행 대출 대다수는 집,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하면서 받은 것이었다. 새로운 차나 오토바이를 살 때 일반적으로 딜러가 대출을 제공해 주는데, 연구대상자가 받은 대출 모두는 관행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이었다. 중고차나 중고오토바이를 구매할 때는 상황이 다른데, 보통 지인을 통해 대출을 알아봤다. 영업력의 차이 때문인지, 이들이 중고차나 중고오토바이 구매 시 이용한 금융기관 중 샤리아 금융기관은 없었다. 대학교수인 60대 부디씨는 최근 구매한 중고차 대출 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중고차를 먼저 선택한 후, 대출받을 곳을 알아봤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낮은 대출 비용이었는데, 내가 다니는 학교의 협동조합에서 가장 간단한 절차와 낮은 이율을 제시했다. 샤리아 은행과 협동조합도 알아보았지만, 이자율이 훨씬 높았기에 포기했다. ... 샤리아 금융기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만, 중요한 건 낮은 이자율이었다.

부디씨는 대출 과정에서 고려한 핵심 요소가 낮은 금리임을 명확하게 했다. 그가 샤리아 금융기관을 고려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데에는 높은 이자에 대한 개인적 견해가 일조했다. 그는 대출에 대해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샤리아 금융기관이 제대로 된 샤리아 금융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관행 금융기관보다 샤리아 금융기

관이 더 낮은 비용을 요구해야 종교적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서, 이용자의 처지에서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샤리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비합리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은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를 매개로 한 거래에 개입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이자를 취하는 쪽이 아닌 이자를 내야 하는 쪽으로서, 이슬람 교리에서 지적하는 이자 금지의 취지를 위반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쪽이 아닌 약자로서 이자를 지불하는 쪽이기에 이자 금지 교리를 직접 위반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대상자 중 두 명은 하지를 위한 적금을 샤리아 금융기관에 들고 있었다. 샤리아 금융기관을 선택한 이유로 공무원인 40대 울릉씨는 종교적 이유를 들었다.

대다수 금융기관에 하지 비용을 모으기 위한 예금상품이 있지만, 그래도 돈을 모으는 목적이 하지이기에 샤리아 신용협동조합(baitul maal wa tamwil)을 선택했다. 주변에서 추천하기도 했고, ... 하지가 자신을 정화(suci)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이자를 통해 하지 비용을 모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울릉씨가 언급한 추천인을 묻자 그는 자기가 사는 곳의 종교지도자를 거론했다. 모스크에서 만나 이야기하던 중 그가 하지에 관해 관심을 보이자 샤리아 협동조합 상품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은행에서도 하지 관련 적금을 판매하고 있지만, 종교지도자가 추천한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적금에 대한 이익 분배금이 높았을 뿐 아니라, 그가 가깝게 느끼는 이슬람 단체와도 연결되어 있어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매달 50만 루피아를 납입해서 천오백만 루피아 정도를 예치하고 있었다. 납입금이 2천 5백만 루피아에 달하면, 하지 신청을

종교부에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순서를 기다리며 적금을 4-5년 더 부으면 목표한 6천만 루피아를 모을 수 있어 하지 순례가 가능해진다. 일반 은행이나 샤리아 은행과 비교하여 샤리아 협동조합의 이익 분배금이 훨씬 높기에 더욱 빨리 목표 금액을 모을 수 있으리라고 그는 기대했다.

샤리아 협동조합에 대해 말하면서, 울룽씨는 이자라는 표현 대신 이익 분배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현지어로 이는 'bagi hasil'이라 표현되었는데, 'hasil'은 '생산물', '소득', '이익'을 'bagi'는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합쳐져서 'bagi hasil'은 이익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샤리아 금융기관과 관행 금융기관을 구분하는 근거가 이익공유 형식이었다. 그가 이자 대신 이익 분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샤리아 금융기관과 관행적 금융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상적 금융 거래를 관행 은행을 통해서 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앞에서 지적한 관행이나 편리함 그리고 이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했다.

연구대상자 중 유일하게 모든 금융 거래를 샤리아 은행을 통해 행하는 사람은 빠리안또씨였다. 60대 초반으로 고등학교 선생으로 일한 후 퇴직한 그가 샤리아 은행과 거래한 계기는 그가 일했던 학교의 성격 때문이었다. 그는 이슬람 단체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일했는데, 10여 년 전쯤 학교의 금융 거래 모두를 샤리아 금융기관과 맺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규정은 학교의 일상적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월급에도 적용되어서, 그 역시 주거대 은행을 샤리아 은행으로 전환해야 했다.

샤리아 은행 이용 동기가 외부에서 주어졌지만, 그는 샤리아 은행 이용 결정에 찬성했고, 이후 자기 가정의 모든 금융 거래를 샤리아 은행으로 전환했다. 이 결정에 대해 빠리안또씨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무슬림으로서 우리는 이슬람 신앙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 샤리아 은행은 이런 의무를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샤리아 은행이 만들어진 후 일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 현재의 조건으로 인해 일반 은행 이용을 하람(haram: 금지된 행동)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듯하며, 이는 마크루(makruh)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마크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이슬람 교리상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하는 행동을 일컫는다고 대답했다. 자신의 의도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그는 담배를 거론했다. 담배는 모든 이슬람 학자에 의해 금지된 물품으로 규정되지 않지만, 일부 이슬람 학자들이 이를 금지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런 식으로 합의된 결정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 해로움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회피해야 하는 행동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샤리아 은행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라면, 관행 금융기관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마크루로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가능한 회피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이용해도 되는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샤리아 은행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에 대해 빠리안 또씨는 지점 수가 많지 않아 은행 이용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ATM 역시 그 수가 제한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불편함은 감수할 만한 것이었다. 은행 이용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 역시 무슬림은 종교적 가르침에 맞추어 살도록 투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배를 예로 들었다.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는 일은 귀찮은 일이지만, 이를 일상화하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처럼, 샤리아 금융기관 역시 불편함이 있지만, 이용하다 보면 종교적 가르침을 따른다는 즐거움에 의해 그 불편함이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빠리안또씨는 관행 금융기관 이용을 금지된 행동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마크루라는 회피의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관행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무슬림을 ‘죄인’으로 낙인찍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관행 은행을 마크루로 규정 하면서 거론한 사례는 농촌 거주 무슬림이었다. 즉, 샤리아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힘든 농촌 지역의 무슬림은 자신들이 원하더라도 거래하기 힘든 조건에 놓여 있기에, 샤리아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기 전까지 관행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관행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무슬림에 대한 빠리안또씨의 관용적 태도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었다. 샤리아 금융기관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샤리아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각으로서, 그는 주변의 도시 거주 무슬림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

IV. 자카트에 대한 인식과 실천

무슬림의 5가지 의무에 속하는 자카트(zakat)은 때로 종교세로 번역되기도 한다. 기부라는 표현이 내포한 자발성과 달리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사회에는 금식월 후 쌀을 걷어 가난한 가정에 나누어주는 관행이 존재했다. 이때 각출한 쌀은 ‘자카트 피트라’(zakat fitrah)라 불리는데, ‘정화’라는 의미의 피트라가 사용됨으로써 죄를 정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되었다. 자카트 피트라에 추가하여 일상적 기부 역시 이루어졌는데 힘든 상황에 있는 무슬림을 돕기 위한 ‘소다코’(sodaqoh), 종교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팍’(infak)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종교적 기부는 자카트, 소다코, 인

팍 등 세 용어의 첫 문자를 따서 'ZIS'라 불린다.

무슬림에게는 재산에 비례하여 기부해야 하는 '자캣 마알'(maal) 역시 부과된다. 이슬람 학파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금은과 같은 보석류, 판매용 물품, 가축, 농어업 생산물 등에 비례하여 자캣 지불이 요구되는데, 현실에서는 보통 정확한 계산이 아닌 무슬림의 자체 판단으로 그 규모가 결정되었다. 최근에는 자캣 마알을 소득에 비례하여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소득에 대한 자캣(zakat penghasilan)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고, 자캣 지불의 기준(nisab)이 되는 85그램 금 이상의 소득에 대해 2.5%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Salim 2008).

개인의 판단에 맞추어 지출, 활용되던 자캣은 2000년대 접어들어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정부가 자캣 전담 기관을 만들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월급에서 자캣을 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슬람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정부는 소득세 대신 자캣을 지불하는 방식을 허용했다(Kurniawan 2013).⁷⁾ 새로운 시스템은 월급을 받는 연구대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12명의 월급 수급자 중 두 명을 제외하고는 월급에서 자캣을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새로운 방식에 대해 이들은 만족감을 표현했는데, 한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7) 2011년에 제정된 자캣 관련 법안(Undang-undang[UU] Nomor 23 Tahun 2011 tentang Pengelolaan Zakat) 22조는 “정부의 자캣기관(BAZNAS)과 민간의 공인된 자캣기관(LAZ)에 지불된 자캣은 소득세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한다. 자캣 관련 정부 정책이 제 궤도에 오르자, 자캣을 걷어 운용하는 이슬람 단체가 생겨났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전통 사회에서와 달리, 매달 일정 금액을 자캣으로 기부하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한 기부금 규모 역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캣 사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서 ‘자캣노믹스’(zakatnomics)와 같은 신조어를 출현시켰다. ‘자캣’과 ‘이코노믹스’를 결합하여 만든 이 개념은 경제 개발을 위해 자캣을 활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자캣을 새로운 개발 자금의 원천으로써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했다(최경희 2021).

소득세 대신 자카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바뀌었다. 회사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서, 그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았다. ... 소득에 대한 자카트를 지지한다. 자카트 관련 교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걷기도 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었다. 내가 번 돈의 일부를 약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자카트 전환을 지지한다.

연구대상자는 소득에 대한 자카트가 임금노동자가 많아진 현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이슬람 교리의 재해석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에 기반을 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이전까지 자카트 마알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었다면, 현대적 방식을 통해 종교적 의무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월급을 받는 연구대상자 중 60대 교수인 부디씨와 40대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소프리씨는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와 같이 모스크에 자카트 마알을 지불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들은 자카트 활용 문제를 거론했다. 거주지 모스크의 경우, 자신이 낸 자카트가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월급에서 자카트를 공제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소프리씨는 견해는 아래와 같았다.

[정부 기관이] 자카트를 모아서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지 않다. 찾아보면, 물론 [인터넷] 어디선가 찾을 수 있겠지만, 자카트를 어떻게 썼는지 쉽게 알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하면, 일 처리가 비효율적으로 되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자카트가 전달될 수 있으리라 확신할 수 없다.

소프리씨와 부디씨 모두 정부 기관을 통한 자카트 수집과 배분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새로 만들어진 기관에서

자카트를 운용하면 그것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가능성이 작아지기에 기존 방식이 낫다는 것이다. 이들의 선택에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 역시 고려되었다. 경제적으로 보면, 월급에서 자카트를 지불해도 거주지 모스크에 내던 기존 자카트를 줄일 수 없다고 이들은 말했다. 자신들이 자카트를 줄이면, 이를 통해 도움을 받던 마을 주민이 더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위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대상자 중 2명의 자영업자는 소득에 대한 자카트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해 오던 방식으로 자카트 마알을 지불했다. 도매업을 하는 이승아디씨는 자신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소득에 대해 자카트를 낼 수도 있지만, 매일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다른데 이를 계산해서 매월 자카트 금액을 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식월이 끝난 후 자카트 마알을 지불한다. ... 매년 자카트 마알로 지출하는 금액은 다른데, 상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소득을 얻게 해 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를 자카트 마알이 가지고 있기에, [매년 그 금액이 차이가 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다.

자카트의 규모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관행이 자영업을 하는 연구대상자에게서는 유지된 반면, 월급 생활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교리에 맞추어 85그램 금 이상의 소득에 대해 2.5%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표현했다. 이는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체계가 이슬람교리 실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연구대상자들은 소득의 5% 정도를 자카트, 소다코, 인콰를 포함한 종교적 기부에 사용했다. 연구대상자 중

가장 많이 지출한 경우는 소득의 10%, 가장 적은 경우는 2%였으며, 가장 많은 연구대상자가 5% 내외를 지출했다. 종교적 기부인 자캇에 대해 말하면서 이들은 자캇 피트라와 자캇 마알에 더해 소다코와 인콰를 거론했는데,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 대학교수인 아딧씨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인콰는 이슬람공동체를 발전시킬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인콰를 통해 모스크나 학교, 병원을 짓는 일을 돕는 것과 같이 이슬람공동체의 필요와 연관된 활동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반면, 소다코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 맞추는데,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등이 그 수혜 대상이다.

연구대상자들이 지출하는 인콰는 종교 관련 시설을 짓거나 보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회적인 성격을 지녔다. 종교 시설 신축에 기부하는 것이 대표적이 사례인데,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50대 아낭씨는 몇 년 전 종교 학교(pesantren) 건립에 2백만 루피아를 기부했다. 자신이 활동하는 종교 단체에서 계획한 사업이었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고 지적한 후 그는 이 단체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고 말했다. 인콰과 달리 소다코는 지역 모스크에서 벌이는 빈민 구제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대학교수인 30대 헨드라씨는 자신이 개입한 빈민 구제 사업과 관련된 소다코를 설명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모스크 위원회 모임에서 이웃의 집을 공동으로 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폭우로 집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이를 고칠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체적으로 천만 루피아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자신이 위원회 위원이었기에 오십만 루피아를 기부했다. 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오백만 루피아 정도를 모

왔고, 나머지는 두 달에 걸쳐 모스크에 온 주민을 대상으로 모았다. 삼백만 루피아 정도가 추가되어서 원래 계획보다 적었지만, 일단 수리를 시작했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일을 완결지었다.

연구대상자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소다코를 지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직접 돕기보다는 모스크와 같이 자기가 속한 종교 조직에서 기부금을 모을 때 참여하는 방식을 주로 취했다. 이는 이들 모두가 거주 지역에서 지도급 인사로 간주되었기 때문으로서, 교수나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진 연구대상자들은 공동체적 의무를 이행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소다코 기부는 일회적이 아닌 정기적인 성격을 지녔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캇, 인콰, 소다코 지출 방식은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모델과 차이를 보였다. 자캇 관련 정책이 입법화된 후, 몇몇 이슬람 조직은 서구의 시민 단체를 모델로 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시스템을 출범시켰다. 은행 계좌를 통한 자캇 모금이 그 첫 단계였다면, 이후 IT 기술과 결합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자캇을 지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단체가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서구 시민 단체처럼 자캇의 모금뿐만 아니라 지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간편 기부 방식을 연구대상자 중 일부는 인지하고 있었고, 온라인 자캇 모집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 활동을 확인해본 경우도 있었다.⁸⁾ 이러한 관심에도, 이들은 관행적 방식

8) 1,200명의 20대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를 보면(Hasanuddin & Lilik 2017: 20-21), 비대면 방식을 통한 자캇 모금, 투명한 모금 및 지출 공개 등 새로운 운영 방식에 기반을 둔 민간 기관에 관한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Dompot Duafa, Rumah Zakat, Rumah Yatim 등 새로운 자캇 단체의 이용률은 각기 31%, 23%, 12%에 이르렀다. 새로운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 이슬람 단체인 엔우(Nahdlatul Ulama)와 무함마디아(Muhammadiyah)에서도 자캇 전담 부서를 만들었지만, 엔우 소속 자캇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3.8%, 무함마디아 소속 자캇 기관에 대한

을 선호했는데, 한 연구대상자는 이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어디에다 자카트를 지불해도 문제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자카트를 올바르게 지불하는 것이다. ... 새로운 방식이 젊은 세대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은 좋은 변화이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해오던 방식을 선호한다. 자카트 사용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카트를 모으고 분배하는 과정을 직접 보고 참여하는 경험은 연구대상자들이 관행적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였다. 이러한 설명에서는 모순적인 모습, 즉, 월급에서 자카트를 공제할 때 그 배분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지만, 이들은 이러한 비밀관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자신의 기부가 활용되는 방식을 볼 수 있는 경험이 가진 장점을 부각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월급에서 자카트를 공제하는 방식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자카트 지불 방식은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회에 최근 도입된 혁신이었다. 할랄이나 샤리아 은행과 비교할 때, 연구대상자들은 소득세의 자카트로의 전환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적극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새로운 방식이 이전의 관행을 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세를 자카트로 바꾼 연구대상자 모두는 자카트 피트라, 자카트 마알, 소다코와 인팍을 지불하는 이전 관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자카트와 관련된 이들의 실천은 제도적 차원의 새로운 변화가 미친 영향이 즉각적이지 않음을,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관행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인지도는 2.7%로, 매우 낮은 정도에 머물렀다. 이러한 자료는 분파적 성향을 띠지 않고,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적극 수용한 점이 젊은 세대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간 요인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V. 맺음말

20세기 후반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이슬람화는 경제적 영역으로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자 대신 손익 공유 원칙에 기반을 둔 이슬람 은행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샤리아 금융 상품이 만들어졌고, 할랄 인증 제도가 꾸준히 확대되어 할랄제품보장법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자캣 수집과 분배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조직이 정부에 의해 구축되었다. 현대 사회의 종교적 변화로 개인화(privatization)를 강조하는 종교사회학적 관점(Asad 2003; Luckman 1996)에서 본다면,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변화는 현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논의되었듯이 경제적 영역의 이슬람화는 현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교리를 변형하면서 진행되었다.

국가적 수준에서 진행된 이슬람 경제의 제도화가 무슬림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실천되는지를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했다. 연구대상자들은 샤리아 금융, 할랄, 자캣 영역에서의 새로운 제도와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무슬림 이익을 증진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이러한 제도화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긍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을 방문할 때 이들은 할랄인증 로고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접근 가능한 이슬람 은행이 있음에도 관행 은행을 계속 이용했고, 이전부터 해 오던 자캣 기부 방식을 유지하려 했다.

이전의 종교적 실천 방식을 고수하고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구대상자의 모습은 이슬람 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할랄인증제의 실행이 계속 연기되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는 구축되었지만, 그것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그 확산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연구대상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용된 제도적 변화는 소득세의 자캇으로의 전환이었는데, 여기에는 절차적 편의성이 중요하게 작동했다.

관행을 중시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수용이 더디게 이루어졌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새로운 제도, 특히 할랄과 자캇이 기존 방식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할랄을 예로 들면, 과거 할랄 제품과 식자재만을 소비하는 환경에 놓여 있던 연구대상자에게 있어 할랄인증제는 새로운 소비 영역이나 환경에서만 중요성을 가질 뿐 기존 소비방식을 변화할 유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영역에서 전개된 이슬람화가 과거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는 급진적인 방식이 아닌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일부 받아들이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것이 새로운 변화와 대비되어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둘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이나 선택적 수용이 용인될 수 있음을 연구대상자들의 사례는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특히 연구의 대상자가 가진 한계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30대 이상의 중산층 남성만을 대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여성과 젊은 세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할랄인증제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인 화장품의 주요 소비자가 여성이며, 디지털로의 변화를 젊은 세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여성과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샤리아 금융, 할랄, 자캇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이 글의 연구대상자와 차이 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점진적인 이슬람화 과정이라는 주장의 적절성이 균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정. 2011.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슬람금융법의 전개.” 『무역금융보험연구』 12(3): 187-212.
- 김형준. 2013. “이슬람 부흥의 전개와 영향: 인도네시아의 사례.” 『동남아시아연구』 23(3): 181-215.
- _____. 2017. “이슬람과 할랄 소비: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법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36(1): 253-294.
- _____. 2020. “이슬람 금융을 이슬람식으로 만드는 요소: 인도네시아의 샤리아 마이크로 파이낸스기관의 사례.” 『동남아시아연구』 30(3): 99-140.
- 박수진. 2017. “인도네시아 할랄식품 소비자의 인삼홍삼제품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이용 실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7(11): 1-15.
- 박정훈. 2016.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제 비교연구: 제도운영 주체 결정의 정치적 요인.” 『아태연구』 23(3): 221-161.
- 박지현. 2016. “할랄인증의 WTO합치성: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6(2): 223-259.
- 박하영. 2021. “할랄화 이후 음식 공간의 변형: 다종족 융합의 가능성과 한계.” 『동남아시아연구』 31(3): 1-29.
- 손승표. 2021. “아세안 할랄산업 현황과 한국의 해외 진출방안연구: 말레이시아 진출을 중심으로.” 『무역금융보험연구』 22(5): 201-212.
- 손태우 · 김분태 · 이재승. 2020.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법제도의 최근 동향.” 『법학연구』 61(2): 235-255.
- 오명석. 2012. “이슬람적 소비의 현대적 변용과 말레이시아의 할랄

- 인증제: 음식, 이슬람법, 과학, 시장의 관계.” 『한국문화인류학』 45(3): 3-62.
- _____. 2022. “이슬람금융의 쟁점들: 경합하는 이슬람적 대안성의 의미.” 『아시아연구』 25(2): 165-184.
- 이선호. 2014.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의 대두: 금융과 소비 영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4(1): 89-132.
- 이선호 · 이충열. 2019. “전통 및 이슬람 주식시장 간의 관계 분석: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9(4): 53-91.
- 이지혁. 2021. “이슬람 주택금융의 이상과 현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사례.” 『동아연구』 40(1): 483-530.
- 이혜리 · 서명교 · 류용규. 2019. “할랄 산업과 말레이시아 할랄 식품 시장 탐색: 복수 사례연구.” 『창조와 혁신』 12(4): 1-38.
- 전제성 · 김형준. 2014.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인도네시아 사례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2(1): 61-87.
- 최경희. 2021. “인도네시아 마카시드 이슬람 경제 추구: 자캣과 자캣 노믹스 실천.” 『동남아시아연구』 31(4): 1-42.
- 현재훈. 2016. “할랄 시장의 부상과 다국적 기업의 대응 전략: 네슬레 말레이시아의 할랄 전략을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20(3): 1-20.
- Abdullah, Tengku & Ireland, John. 2012. “Halal Products: The Views of Muslim Consumers across Malaysi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6(3/4): 260-273.
- Ali, Jan. 2012. *Islamic Revivalism Encounters the Modern World*.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 Antara. 2022. "OJK Catat Pangsa Pasar Perbankan Syariah Capi 7.03 Persen per Agustus." *Antara* 13 October.
- Asad, Talal. 2003. *Formations of the Secular: Christianity, Islam, Modern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Ascarya, Rahmawati Siti & Tanjung, Hendri. 2015. "Design and Determine Holistic Financial Inclusion through Baitul Maal Wa Tamwil." Working Paper. Jakarta: Bank Indonesia.
- Azra, Azyumardi. 1996. "Contemporary Islamic Renewal in Indonesia." *Kasarinlan: Philippine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12(2): 57-68.
- Bush, Robin. 2008. "Regional Sharia Regulations in Indonesia: Anomaly or Symptom?" Greg Fealy & Sally White (eds.), *Expressing Islam: Religious Life and Politics in Indonesia*. Canberra: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Choiruzzad, Shofwan Al Banna. 2013. "More Gain, More Pain: Development of Indonesia's Islamic Economy Movement (1980s-2012)." *Indonesia* 95: 125-72.
- Esposito, John & Voll, John. 2001. *Makers of Contemporary Isl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ischer, Johan. 2012. "Branding Halal: A Photographic Essay on Global Muslim Markets." *Anthropology Today* 28(4): 18-21.
- Hasanuddin, Ali & Lilik, Purwandi. 2017. *Indonesia Middle Class Muslim: Religiosity and Consumerism*. Jakarta: Alvara Research Center.
- Irfan, Syauqi Beik. 2013. *Economic Role of Zakat in Reducing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A Case Study in the Province of DKI Jakarta, Indonesia*. London: Lambert Academic

Publishing.

- Ismail, Abdul Ghafar, Abdullah Rose & Zaenal Muhammad Hasbi (eds.). 2022. *Islamic Philanthropy: Exploring Zakat, Waqf and Sadaqah in Islamic Finance and Economics*. Palgrave.
- Karim, Muchith (ed.). 2013. *Perilaku Komunitas Muslim Perkotaan dalam Mengonsumsi Produk Halal*. Jakarta: Kementerian Agama.
- Kurniawan, Puji. 2013. "Legislasi Undang-Undang Zakat." *Jurnal Al-Risalah* 13(1): 99-118.
- Lubis, Nur Ahmad Fadhil. 2004. "Financial Activism among Indonesian Muslims." Virginia Hooker & Amin Saikal (eds.), *Islamic Perspectives on the New Millennium*. Singapore: ISEAS. pp. 91-112.
- Luckmann, Thomas. 1996. "The Privatisation of Religion and Morality." Paul Heelas, Scott Lash, and Paul Morris (eds.), *Detraditionalisation: Critical Reflections on Authority and Identity*. Oxford: Blackwell.
- Nurrohmah, Resti Fadhilah, and Radia Purbayati. 2020. "Pengaruh Tingkat Literasi Keuangan Syariah dan Kepercayaan Masyarakat terhadap Minat Menabung di Bank Syariah." *Jurnal Manajemen Perbankan Syariah* 3(2): 140-153.
- Otoritas Jasa Keuangan. 2022. *Statistik Perbankan Syariah*. Jakarta: OJK.
- Salim Arskal. 2008. *Shift in Zakat Practice in Indonesia: From Piety to an Islamic Socio-Political-Economic System*. Shiang Mai: Silkworm Books.
- Raffles, Stamford. 2010. *A History of Jav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hardjo, M. Dawam. 1988. "Question of Islamic Banking in Indonesia." Mohamed Ariff (ed.), *Islamic Banking in Southeast Asia: Islam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east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p. 137-63.
- Rudnyckj, Daromir. 2019. *Beyond Debt: Islamic Experiments in Global Financ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litonga, Linda Teti. 2016. "Apindo Minta Revisi UU Jaminan Produk Halal." *Bisnis Indonesia*. November 15.
- Wibisono, Yusuf. 2015. *Mengelola Zakat Indonesia*. Jakarta: Prenadamedia Group.
- World Bank. 2019. *Aspiring Indonesia: Expanding the Middle Class*. Washington: The World Bank.

(2023.08.04. 투고, 2023.08.11. 심사, 2023.08.20. 게재확정)

<Abstract>

Islamic Economy at Work: Religiou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Muslims in Indonesia

Hyung-Jun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1980s, the Islamization movement has become increasingly visible in Indonesia, with a growing emphasis on applying Islam as a guiding principle in life. The Islamization movement extended into the economic domain in the 1990s, focusing on finance, halal products, and zakat (charitable giving). The operation of Islamic banks, which commenced in 1992, marked the expansion of the Islamic economy to include insurance, bonds, stocks, and pawns. As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was solidified, discussions regarding Islamic finance, halal products, and zakat gained momentum, and efforts to build infrastructure for public use were accelerated.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Muslim consumers, a group that has not received sufficient attention in studies related to the Islamic economy. While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institutions supporting halal products, finance, and zakat has often been seen as a sufficient condition to engage Muslims in the Islamic economy, this paper seeks to examine how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embraced and utilized by Muslims, as well as how these arrangements genuinely impact the lives of

Muslims. Through this exploration, the paper endeavors to present a more balanced understanding of modern Islamic economy. It will be argued that the Islamization of the economic realm is progressing gradually through the selective acceptance of new elements while retaining past practices, rather than through a radical replacement of old practices with new ones.

Key Words: Indonesia, Islam economy, Halal, Zakat, Syariah bank

만달라에서 네트워크로: 므란따우(Merantau) 예술가의 귀환과 장소성의 재배치

이 창규*

국문초록

이 글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반둥과 같은 예술창작의 '중심'과 공생 관계를 맺고, 자신의 고향이나 타지에 정착한 므란따우 예술가(Seniman Merantau)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 예술장의 중층성과 연결성을 검토한다. 특히 자바중심주의를 넘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새로운 장소성의 재배치를 모색하는 서수마트라 부킷땡기의 탐보 아트센터(TAC: Tambo art center)와 자바의 가장 주요한 예술 교육기관인 반둥공대(ITB: Institut Teknologi Bandung)의 결(para-)에 위치하고 있는 옴니스페이스(Omnispace)의 대안예술프로젝트를 사례 분석한다.

므란따우 예술가의 '주변성'으로 시작한 예술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예술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므란따우 예술가들은 예술계의 매개자, 특히 갤러리 관계자와 컬렉터들의 네트워크를 지방에 이식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확장된 글로벌 현대미술의 장소성을 부여한다. 미디어 아트나 에코 아트와 같이 기존의 예술 장르와 문법에서 벗어난 예술생산-수집 방식들을 통해 지역의 토착 지식과 비인간행위자들이 작품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들이 생성된다.

만달라 모델이 포착할 수 있었던 영토의 물리적, 정치적 영향력 또는 상황적 귀속성과는 별개로, 이 글은 예술작품이라는 준-대상의 행위자성을 끌어와 새

* 뉴욕주립대 빙햄튼 캠퍼스 인류학과 박사과정. leeckn@gmail.com.

로운 공생적 교환관계를 갱신하고자 했던 예술가들의 상징적 조합으로 트란따우 예술가들의 실천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비인간행위자 내지는 작품의 물성(materiality)이 만들어 낸 매개와 교환의 열린 순환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주제어: 트란따우 예술가, 팜보아트센터, 음니스페이스, 매개와 교환, 예술작품의 물성

I. 자바중심주의와 귀환

인도네시아 예술은 여전히 자바중심주의에 간혀있다. 예술생산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반둥, 족자카르타, 자카르타는 여전히 자바의 삼각형 안에서 예술계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예술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국제적인 전시에서도 자바의 교육기관에서 훈련된 예술가나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동원된다. 특히 전통적인 장르로 분류되었던 회화, 조각, 공예 등의 관습적인 경계를 넘어 관계미학, 장소 특정적 예술, 미디어아트 등 ‘예술을 예술인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 된 현대의 개념미술에서는 예술창작과 그 과정에 대한 담론이 예술적 가치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글로벌 자본과 예술 시장이 형성된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현대 예술 생산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변모하게 되고, 인도네시아 예술은 자바중심성이라는 틀 안에서 공고해진다. 이것은 정치경제적으로 중심이 된 자바의 지정학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자바 이외의 지역에서는 예술 교육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고, ‘고급’예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둥, 족자카르타, 자카르타의 예술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일시적인 이주를 해야 하는 지역적 위계에도 기인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제3세계 예술사’를 아카이빙 하는 과정에서 보다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점은, 중심-주변부의 이분법이나 타자로 상징되는 비서구 예술에 대한 또 다른 타자화가 아니라, 주변부의 주변부, 주변부의 중심, 중심의 주변부 등 프렉탈 모형처럼 다양하게 존재하는 예술장의 중층성, 특히 예술생산의 중심과 지역의 주변부/중심부가 맺고 있는 새로운 위상관계의 네트워크를 기술하는 방식이다. 실제, 글로벌 예술장에서 서구/비서구, 텍스트/이미지, 물질/비물질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이동과 조합이 존재한다. 다만, 다수의 국제전시나 예술프로젝트에서 보여준 글로벌 현상의 초(trans-), 다(multi-), 횡(cross-), 간(inter-)식 존재론이나 비서구 타자를 동등한 자리에 배치하려는 문화적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는 별도로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의 경계와 국가 경제규모에 비례하는 참여자들 간의 위계, 초대받는 작가의 국적별 안배도 주요한 화두가 된다. 인도네시아 예술가와 같은 소위 비서구 예술가들은 영미 중심의 미술사에서 벗어나 제3세계의 독자적 연대를 추진 하더라도 여전히 영미의 미학 문법을 통해 자신을 ‘영어로’ 설명해야 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분석상의 용어 또한 이를 반영하는데, 글로벌 예술장을 다층적인 세계의 혼종적 결합(Global art worlds)으로 보는 입장과 만들어진 위계나 다양한 네트워크가 얽혀있는 하나의 중층적 세계(Global artworld)로 연구자마다 다르게 취사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Belting 2013; Papastergiadis 2011).

현대예술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제3세계’ 예술계(art world)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¹⁾

1) 비서구 사회의 곤궁 중에 하나는, 서구의 Fine art에 대항하는 개념의 부재 또는 분류 체계의 차이에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예술을 지칭하는 스니(Seni)와 스니 루빠(Seni rupa)를 구분하는데, 전자가 예술 일반을 가리키는 반면, 후자는 ‘시각’예술 또는 예술-창작(행위)이라는 의미론적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수팽갓(Supangkat 1996)을 참고하시오.

이미 존재해왔지만 영미 중심의 미술사에서 변방이었던 인도네시아 현대 예술은 글로벌 예술계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매개가 되고, 번역되며, 교환되는가? 이와 같은 현대예술에 대한 질문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글은 족자카 르타나 반둥과 같은 예술창작의 ‘중심’과 공생 관계를 맺고, 자신의 고향이나 타지에 정착한 프란따우 예술가(Seniman Merantau)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글로벌 현대미술이 만들어지는 예술장의 중층성과 연결성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예술품이 하나의 비인간 행위자로서 맺는 사회적 관계를 컬렉터와 대안예술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프란따우 예술가들은 작품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한다. 작품 생산과 교환, 작품의 판매라는 현실적인 네트워크를 위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술 생산의 ‘중심’인 자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예술대안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고, 아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경험과 예술적 지식을 지역의 토착적 요소와 결합시키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글은 전략적으로 자바의 예술 교육을 체화한 자바 주변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장소성의 재배치를 모색하기 위해 자바 밖에 위치하고 있는 서수마트라 부깃띵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팜보 아트센터(Tambo Art Center, 이하 TAC)와 자바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반둥의 옴니스페이스(Omnispace)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II. 프란따우: 만달라에서 네트워크로

인도네시아어 프란따우(merantau)는 만이나 강가에 뻗어있는 해

변, 추상적으로는 타지, 객지를 의미하는 란따우(rantau)의 동사형(me-)이다. 모계제 전통이 있는 미낭까바우인들의 전통적 관습에서 생계를 위하여 강변이나 해변을 따라 항해하거나, 지식이나 기술 숙련, 또는 돈벌이를 위해 타지로 나가는 일련의 이주를 므란따우라고 통칭한다. 므란따우는 단순히 예술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유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이지만, 므란따우 예술가(seniman merantau)라고 예술가를 한정하는 경우는 보다 독특한 의미를 획득한다. 그것은 고향의 풍토와 색채, 지역의 방언과 같은 토착적 요소를 자신의 예술적 기법으로 발전시킨 민족지적 예술가라는 특질이다.

자신이 자라온 토양과 환경을 예술 창작의 영감으로 삼는 예술가 일반의 사례를 고려할 때 므란따우 예술가의 민족지적 탐구는 사실 인도네시아 예술가의 독자적 성격이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예술계에서 굳이 므란따우 예술가라는 분류를 통해 예술가나 예술 공동체의 특정 양식들을 호명하는 이유는 앞에서 기술한 자바중심주의와 비견되는 주변주의 중심, 즉 예술사적인 기록에서 무시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조가 끼친 영향 때문이다. 발리의 빠따마하(Pita Maha)와 수마트라 출신들이 중심이 된 겐델라(Gendela) 그룹이 그 두 개의 사조인데, 전자의 빠따 마하가 1936년 러시아 태생 독일 화가 발터 스파이스(Walter Spies)와 네덜란드 예술가 루돌프 보넷(Rudolf Bonnet)에 의해서 만들어진 므란따우 양식의 초국적, 식민주의적 개입이라면, 후자의 겐델라 그룹은 족자카르타에서 기반하며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수마트라 출신 독립운동가, 반독재운동가 등과 결합된, 민족주의적, 리얼리즘적 확장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므란따우 예술가의 예술사적 양식과 사회적 실천을 분석할 때 자바를 중심에 놓고 그 중심의 자장 아래 영향을 주고받는 동심원적, 지역과의 위계적 권력관계로 보는 관점은(Holt 1967; Wright 1994;

Widyosisoyo 2002; Yudoseputra 2005; Burhan 2013; Prihatin 2017) 주로 동남아의 권력체계를 설명하며 자주 등장했던 만달라(mandala)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만달라 정치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그것이 중심에서 원형으로 퍼져나가는 확장형 모델이라는 점이다. 물론 유동하는 만달라의 비고정성, 중심과 중앙의 집권을 피하는 다양한 산악 고지대와 변방의 기술들도 동남아시아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참조점이 되었지만, 여전히 상정하고 있는 중심과 주변부의 이항대립은 존재하며 발리의 빼따 마하와 수마트라에 연결된 존델라 그룹의 활동에 대한 기술도 자바중심성의 자장을 내과하지 못하고 예술사의 각주나 참조로서만 기술되고 있다.

중심에 신성한 존재인 메루산이 자리하고 그것을 둘러싼 겹겹의 원형적 확장은 신성한 존재와 주변 존재들의 영적 위계 관계, 전근대적 왕국의 위계 체제와 지리적 경계, 즉 영토의 물리적, 정치적 영향력과 상황적 귀속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메타포로 자리해왔지만 현대예술가들의 실천적 예술 활동을 설명하기에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그치고 만다.²⁾ 또 과거 국가나 지역의 경계가 불분명했을 때 만달라 모델에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되었던 원형적 물결이 겹치는 공간(조공국이자 종주국이었던 변방), 물결이 다다르지 못하는 결절의 공간(조미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오히려 프란따우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장소성은 기존의 중심-주변부의 이항 대립 안에 있지 않고, 경계와 틈의 공간에 있다는 점에서 만달라 모델은 상징적 메타포로서 프란따우 예술가들을 설명하는 제한된 모델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장소성의 생성과 공명을 상징해 볼 수 있는 이미지적인 도구일 수는 있다.

2) 드루스(Druce 2017)는 명확한 영토 개념이 없었던 전근대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만달라(Mandala), 갤럭시(Galactic), 느가라(Negara) 모델을 비교하면서, 특히 만달라가 ‘인도화(Indinization)’ 된 동남아시아만을 토대로 생성된 개념임을 비판하는 입장들을 소개한다.

인구가 적은 외부 섬으로 자바인을 이주했던 통치정책, 자바 중심적 경제 개발과 자바 중심성(Javanization), 그리고 그에 대항할 만한 지역 세력의 부재에 대한 논의 (Thornton 1972; Dowling 1992; Rizqi et al. 2020; Arnout 2021) 또한 자주 언급되어 왔다. 지역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다시 자바 중심의 위계를 받아들이면서 지역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자본을 공고히 하는 형태는 특기할 만한데, 족자카르타나 반동의 대표적인 예술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유학과 예술가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갖게 되는 위치,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자바와의 위계 관계는 자바중심성에 대한 보다 다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요약하자면, 근대국가 성립 이전의 왕족체계와 느슨한 형태의 비고정적, 동심원적 권력관계를 기술한 만달라 모델은 현대사회의 예술 생산방식을 설명하는 메타포가 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양식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도구이다. 정교하지 못한 이론적 도구가 놓치는 지역의 미시적 실천은 결국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일련의 이론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심과 주변, 도시와 시골, 서구와 비서구라는 이분법 사이를 넘나드는 유동성의 물질 만들기가 트란따우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가장 큰 추진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은 결국 ‘전체적’ 연결을 구축할 수 있는 사잇길로서 제시된 ‘부분적 연결들’(partial connections, Strathern 2004), 부분이 전체이기도 한 자기 유사성의 기하학적 구조인 프랙탈(fractal), 상호연결(interconnected)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interwoven, entanglements) 메쉬 워크(meshwork, Ingold 2011)의 이론들은 특히 예술작품이라는 비인간행위자를 중심으로 재편된 예술계 네트워크를 기술하는 핵심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예술장과 예술의 물질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방법론적 접근은, 어떻게 사물이 사회문화적 실천과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예술의 대상이 인간의 의도적 표현에 후

발적으로 생성되는 수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생산하고 매개하는 적극적인 행위자인지 밝히는 데 유용한 참조가 된다 (Thomas 1991; Gell 1998; Miller 2005; Henare 2007).³⁾

Ⅲ. 예술가의 귀환과 매개자로서 컬렉터

변화하는 트란따우 예술가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뚜렷한 하나의 사례는 서수마트라(Sumatra Barat) 부킷팅기(Bukittinggi)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땀보 아트센터(TAC)다. 미낭까바우(Minangkabau)라는 지리적, 종족적 연대에 바탕을 둔 사카토(Sakato) 예술 커뮤니티와 존델라(Jendela) 그룹은 자바의 예술생산에 한 축을 담당하며 수마트라 출신이라는 지역적 연대에 기반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수마트라 출신이자 무이 인디 화풍의 대표적인 화가와끼디(Wakidi), 나샤르(Nashar), 에펜디(Effendi), 자이니(Zaini), 아핀(Mochar Apin)과 같은 선구적 예술가들은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⁴⁾ 중앙으로 진출한 자신들의 선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앙에서 머물며 고향의 자원들을 미학적

3) 젤(Gell 1997)은 행위자로서 사물을 인간의 능력과 동일하게 상정하지는 않는다. 의도를 지닌 인간은 일련 행위과정을 유발하는 주요 행위자(primary agents)이기에 사물의 이차적 행위성(secondary agency)과는 구분된다. 오히려 젤은 인간의 의도와 창의성이 사물에 어떻게 분배되어(distributed) 사물이 하나의 확장된 개인(extended personhood)으로 작동하는지 관심을 가졌다. 인간의 개입(human dependency)이 없이 물건 스스로가 발휘할 수 있는 힘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이상블라주(assemblage, Latour 2005), 그레이엄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등을 거치며 최근의 '존재론적인 전환'이라는 논의들로 확장된다. 관련 논쟁들을 통한 인도네시아 예술장과 예술작품에 대한 분석은 트란따우 예술가의 다양한 실천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다음 기회에 보다 분석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4) 미낭까바우 예술 공동체의 역할과 지역적 연대에 대해서는 브룬(Bruhn 2018)을 참조하십시오.

인 질료로 발전시켰다면, 현대의 발전된 교통 인프라와 통신네트워크, 지역 문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맞물려 고향으로 귀환하는 다수의 트란따우 예술가가 2010년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 예술시장의 광적인 붐과 함께 시작된 트란따우 예술가들의 자바로의 이주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거치며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반대 흐름을 만들었고, 귀환한 트란따우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넘어 지속적인 예술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화된 단체들을 설립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단체인 TAC는 2015년에 개설되었지만, 족자카르타에 있는 사카토 그룹과의 교류를 통한 2018년의 전시를 통해서 전국적인 데뷔를 하며 다양한 매체에 소개된다. TAC의 연례행사인, 팜보 아트 페스티벌은 매년 미낭까바우 칠학과 이념에 바탕을 둔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2017년 산디(Sandi: 암호, 부호를 의미)와 같은 전시를 통해 미낭까바우의 독특한 경험과 예술가들의 작업을 연결하고 있다.

트란따우 작가의 귀환에 있어 가장 주목할 점은 그들이 자바 예술 생태계에서 만든 예술계의 매개자, 특히 갤러리 관계자와 컬렉터들의 네트워크를 지방에 이식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특기할 만한데, 예술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 트란따우 예술가의 귀환과 그들이 끌어온 네트워크를 통해 한순간에 확장된 ‘글로벌 현대미술’의 장소성을 획득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귀환한 트란따우 예술가의 이방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보여주는 물성, 지역의 지식(local knowledge)과 비인간행위자(생태계, 쓰레기, 동물, 수마트라 농수산 특산물)들이 작품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들이 새로운 장소성을 통해 시도된다는 점이다.

1. 원 피스 클럽 (One Piece Club)

2020년부터 윤 인드라(Yon Indra)의 초대로 인도네시아 예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2명의 컬렉터 멜라니 스티아완(Melani Setiawan, 인도네시아 예술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지닌 1세대 컬렉터)와 오홍진(Oei Hong Djien, 말랑에 위치한 OHD 뮤지엄의 설립자이자 족자카르타 예술계의 가장 큰 후원자)이 연례 전시에 참여하면서 TAC는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난다. 적극적인 중재자와 조력자로 컬렉터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구입하고 진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예술 생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수마트라 예술의 국제적인 소개 역할까지 자처하면서 TAC의 위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예술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2명의 컬렉터가 보여준 파급력은, 프란따우 예술가들과 맺었던 오래된 관계의 끈이 그들의 고향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되살아나는 후원-수혜 관계의 확장형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에서 이미 자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컬렉터들은 TAC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예술계 종사자들을 수마트라로 초대하기도 하고, 수마트라 뼈당 대학교 예술가들과 자바의 갤러리, 유럽의 예술 교육기관을 연결해주는 중매 역할도 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예술에 대한 자바중심의 연구를 넘어 다양한 예술장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외국 큐레이터들, 중국 이후에 부상할 동남아 미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블루칩 작가를 찾아다니는 상업 갤러리들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미남까바우 예술계와 접속하기 시작했다.

TAC의 지속적인 전시와 세미나, 관련 프란따우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전국적, 국제적 단위에서 모색해줄 수 있는 자바 컬렉터들의 외교력과 정치력은 단순히 작품을 수집하는 사적 소유의 개인(possessive individual)이라는 컬렉터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단힌 소수의 예술계를 넘어, 변방이었던 TAC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멜라니와 오홍진의 매개를 통해 원피스 클럽 국제 지부와 연결된 사건을 통해서다. 원피스 클럽 (One Piece Club, 이하 OPC)은 2007년 일본인 컬렉터인 히로코 이시나베 (Hiroko Ishinabe)에 의해 도쿄에서 시작된 사립재단으로, 갤러리 소유주나 운영자, 예술품 판매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참여할 수 없는 컬렉터들의 단체다. 현재 인도네시아, 대만, 상하이에 각 지부를 두고 아시아 전역에서 진행된 아트페어나 국제전시에 단체로 참석하는 것은 물론, 각국의 지부가 호스트 역할을 하며 각 지역의 예술단체나 작가의 작업실, 대안 공간 등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예술창작 공간을 OPC의 네트워크로 이어주는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OPC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투기나 투자로서 예술작품을 구매하고 파는 경제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작품을 일 년에 (최소) 한 작품을 소장하고 이것을 회원들에게 소개하며 그 작품이 생산되고 자신의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개인의 구술로 자신의 삶에서 기록한다는 점이다. 즉 OPC는 작품 가격의 순위나 더 뛰어난 작품이라는 위계적 서열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들의 독자적 작품을 소장하는 작품 수집 과정의 수평적 확장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예술가 입장에서는 보다 넓은 작품 수집 기회가 담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자카르타, 싱가포르, 홍콩 등의 아시아 예술시장과 직접적인 매개가 없거나 상업 갤러리와 계약을 통해 글로벌 예술장에 소개되지 않았던 일군의 예술가들에게 OPC의 네트워크와 연례방문은 지역의 자생적 예술생산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줄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제공해주는 셈이다.

귀환한 예술가가 지역에 이끌고 온 글로벌 컬렉터들의 네트워크와 지원은 단순히 그들의 사적인 공간이나 물리적으로 제한된 미술

관에 머물지 않는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소성, SNS 나 소셜 미디어가 새로운 개인 전시 공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접속한 다수의 예술 애호가와 컬렉터, 예술계 종사자는 TAC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follow’와 ‘좋아요’를 통한 공감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 않아도 변방의 예술 공간을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 즉 프란따우 예술가의 가상공간 예술계를 형성하는데 OPC를 포함한 글로벌 컬렉터들의 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이미지의 교환과 분배는 켈티(Kelty 2008)가 지적한 일종의 재귀적 공적 영역(recursive public sphere)으로 작동하면서 소장품을 디지털 형태로 교환하는 새로운 대화의 공간을 형성하게 한다. 가상의 새로운 장소성은 기존에 존재했던 위계와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예술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장의 유동적 존재론(fluid ontologies)의 메타 공간, 또는 자신들을 식민주의 타자화나 대상화 과정과 거리를 두고 새로운 미학적 실험과 시각적 경험, 감각적 참여(sensory engagement)를 통한 지역 예술생태계의 데이터베이스로 기능하게 되었다(Srinivasan and Huang 2005; Isaac 2015; Verran 2014).

2. 글로벌 쓰레기-연망과 로컬의 벌집

프란따우 예술가들의 귀환과 그들이 만들어낸 장소성의 재배치는 중심-주변부, 서구미학과 비서구 미학, 글로벌과 지역이라는 이분법의 대립 항을 다각화하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새로운 예술생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 가능성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로서, 장소성의 재배치는 교환이론에서 가정하는 주고, 받고, 되돌려줘야 하는 증여의 호혜성이 상정하는 위계성, 즉 멜라니와 오홍진과 같이 사회/문화

/경제적인 자본을 가진 상위의 '후원'과 도덕경제의 하위 주체로서 지역 예술 공동체의 '수혜'라는 이분법을 일부 확장한다. 다만 기존의 교환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사회적 총체성과 항상성의 폐쇄적 순환은 변화하는 글로벌 인도네시아 현대 예술을 기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미셸 세르의 기생(parasitism)과 자크 데리다의 순수 증여는 자바중심성의 가치 전복 기제로서, '사건'을 만드는 외부자(the third)의 개입과 예술이라는 가치재의 비인간행위자(quasi-object, non-human object)성을 모색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이경목 2016; 이승철 2019).

TAC의 지속적인 전시에서 드러나는 주요 주제는 자연과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적응 방식을 특징하는 사회문화적 맥락들이다. 특히 미낭까바우 철학과 이념에 바탕을 둔 지역의 독특한 경험과 예술가들의 감각적 개입을 통해 미낭까바우의 자연과 생태, 그리고 과학이라는 근대화 과정이 어떻게 서로의 세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자양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실험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어떻게 다시 인간 사회로 되돌아오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회 참여 예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생산해내는 예술가 집단의 실천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과 문제의식을 통해 TAC는 쓰레기를 재료로 하여 예술이라는 형태로 만든 물건들을 다시 사회로 주입하는 전시 기획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예술의 사회 참여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예술의 독창성을 발휘하는 소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낭까바우의 철학적 이념과 지역의 토착적인 요소(토양, 물감을 만드는 데 추출되는 식물 성분, 강이나 하천의 이끼, 벌집을 만드는 벌의 독특한 패턴 등)가 예술작품에 지속적으로 개입된다.



그림 1. 출처: 로미 아르몬(Romi Armon), 감각을 일깨우고, 가능성을 찾기 (Menyentuh Rasa, Mencari Kemungkinan), 120 x 85 x 180 cm, 데이크론, 섬유, 플라스틱, 아크릴, 나무 혼합, 2018.

그림 2. 출처: 데이비드 아르미 뷔뜨라(David Armi Putra), 침이 없는 벌의 스케이프 (Stingless Bees Scape), Dimension Variable, 2018.

수면에 물방울이나 다른 액체가 튀어 텅텅거리며 만드는 과급효과를 일컫는 까빠짜(kapacak)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시는, 예술의 사회 참여라는 과정에서 물질성(materiality)에 주목한 민족지적 연구 결과물들을 작품으로 담아내기도 했다. 기존의 사회참여 예술이 한 지역의 예술가 집단이 지역에 밀착되어 특정 지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나 특정 사회 이슈들을 부각시키는 방법이었다면, 까빠

작의 작품들은 사양 산업이 된 기와공장, 공항 재개발로 폐허로 남은 잔여물, 도심지 개발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산업 잔해물과 전 세계 도처에서 인도네시아로 모여져 온 플라스틱 등을 소재 삼아 일종의 ‘쓰레기-연망’을 비교분석한 것이었다. 단순히 예술 생산의 의미나 일회성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이 새로운 기능을 부여 받고 예술로 변모된 혼합의 물건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과정이었다. 새롭게 만들어진 쓰레기-예술-연망을 통해, 제3세계 비서구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의 예술에 대한 정의를 묻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상자, 관객들과의 상호관계가 쓰레기라는 예술작품의 물질성을 통해서 어떻게 재창조될 수 있는지 고찰해 보는 작업이었다.

정리하자면, TAC의 트란따우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물성(materiality)과 그것이 담보하고 있는 지역의 토착 세계관에 주목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공유된 지표나 숫자로 양적 전환이 불가능한 가치재로서 예술품은 항상 교환체계의 객관적 토대가 부재하기 마련이고, 이를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즉 언어적 번역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잡는다. 그런 점에서 데리다의 환대론 안에서, 예술은 ‘지속적 미결정상태로서 타자의 외재성’을 실험하는 비인간행위자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는 선물의 불가능성, 비경제적 돌발적 ‘사건’으로 선물의 존재론적 불확실성은 데리다에게는 당위적 윤리적 주체나 정치적 주체성을 탐색하는 가능성이 되지만, 예술가들은 일종의 ‘내재하는 외부’로 자바 안에서 생산-소비-교환되는 폐쇄성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

IV. 공생과 예술 공동체

프란따우 예술가의 귀환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한정될 수 없다. 즉 자신이 태어난 장소로의 귀환과는 다르게 삶의 궤적에서 자리해온 특정 시공간으로의 귀환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비중심주의의 내파, 즉 자바 안의 주변부를 자처하는 대안예술공동체에서 활동하는 프란따우 예술가들을 살펴보는 작업은 새로운 장소성의 재배치를 그려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자바의 예술 교육기관 중에 가장 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반둥공대(ITB: Institut Teknologi Bandung)의 바로 곁(para)에 위치하고 있는 옴니스페이스(Omnispace)는 타지에서 반둥으로 유학 온 프란따우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대안예술공동체로 ‘이방인 정체성’을 자신들의 특징으로 내걸고 있다.

자바의 내부에서 새롭게 터를 잡은 프란따우, 특히 반둥에 기반을 둔 프란따우 예술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미술사에서 반둥 예술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근대적인 예술교육이 식민지 정부의 기획 아래 반둥공대(ITB)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1947년 두 명의 네덜란드 예술 교사 사이먼 애드미랄(Simon Admiraal)과 라이스 멀더(Ries Mulder)가 주도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근대 예술 교육기관(Universitaire Leergang voor de Opleiding van Tekenlelaren, Center of Art Teaching University)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반둥예술공대 미대(ITB FSRD)의 전신으로 식민주의와 근대미술의 도입이라는 교차로에서 인도네시아 미술사의 변곡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네덜란드 큐비스트 작가 라이스 멀더가 주도한 근대예술교육 시스템은 당시 현지 예술가들이 유럽의 사조와 작품 생산 양식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도제식 스튜디오 교육(상가르, Sanggar)과는 대비되는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이었으며 당시 비서구사회의 예술이 서구의 예술적 자장에 개입해가는 아시아 근대 예술사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질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식민주의 시대를 거쳐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도모하던 독립 운동 시기에 족자카르타의 리얼리즘과 대비되는 반동의 예술사조는 ‘서구의 미학적 노예 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족자카르타 사실주의 예술가들에 의해 비판받기도 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보다는 추상화, 모노크롬, 이슬람 모티프를 형상화한 기하학적 표현주의 등에 주목했던 반동의 추상표현주의 전통은 오히려 미학이나 예술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심화하는 추상성을 고도화할 수 있었고, 라이스 멀더로부터 이식된 유럽의 미학적 용어들로 자신들의 작품들을 해석한 시도들은 족자카르타의 전통적인 예술사조와 다른 현대미술의 개념주의를 대비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반동의 후속 세대 예술가들은 선배들의 그림과 조각,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형식주의(formalism)에 매몰된 예술담론을 확장해 예술의 일상성, 대중성, 문화 민주화를 외쳤던 인도네시아의 신예술운동(GSRB: Gerakan Seni Rupa Baru)을 성취해냈고, 고급예술과 저급예술이라는 이분법의 도식을 깨고 예술의 위계에 도전하는 아방가르드 작가의 작품을 전폭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현대예술의 시대정신과 접속하는 지역 예술계의 전환(Yuliman 2001)을 만들어 냈다.

즉, ‘서구의 미학적 노예 실험실’은 오히려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않는 추상주의 신예술운동으로 발전했고, 이는 1980-90년대 현대미술의 시대사조와 맞물려 족자카르타보다 먼저 이론적인 담론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 이를 계승한 일군의 큐레이터들이 2000년대 들어 국제적인 무대에 진출함에 따라 예술창작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과 예술단체들이 존재하는 허브로 반동이 자리하게 된다. 문제는 반동공대의 명성과 영향력에 힘입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반동으로 이주한 예술가들이 졸업 후에 자신들의 삶을 유지해가는 방식이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움니스페이스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1981년생 에윙(Ewing, Erwin Windu Pranata)의 생애사는 자바의 내부, 반동이라는 중심에서 프란따우 예술가들이 맺어가는 공생의 방식과 공동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공한다.

(1) 학부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지 않고, 반동교육대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전공한 에윙은, 반동공대예술 졸업장 없이도 반동에 기반해 작업을 해가는 ‘외부인’이다. 예술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학비가 부족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취직이 잘되는 학과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예술가로서 삶을 동경하며 미술 선생님이 아니라 미술가가 되기로 한 전업 작가이다. 그래서 그는 스튜디오에서 혼자 작업하는 외로운 천재형 예술가가 아니라, 또 다른 외부인을 초대하고, 워크샵이나 전시 공간을 제공해주는 동료이자 예술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선생님이기도 하다. 프란따우 예술가로서 자신의 이방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반동공대미대라는 엘리트주의와 인도네시아 예술계의 가장 큰 생태계인 족자카르타 이너 씨클의 담도 넘어, 언제나 그들 곁에 앉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객이다. 그가 이런 평판을 얻게 된 것은 작가 개인으로서 자카르타 유수의 상업 갤러리와 계약을 맺어서 이기도 했지만, 반동에 기거하며 반동의 외부인인기를 자처하는 타자들을 모아 움니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 작가가 되면 배가 고프니, 예술 작업은 취미로 하되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진학한 반동예술교육대학에서도 에윙은 2000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예술시장 호황기를 목격한다. 이미 그러지지 않은 흰 캔버스에 반 년 치 월세를 지불한다는 싱가포르, 뉴욕 갤러리가 등장하고, 자신들의 친구들이 블루칩 작가라는 호명으로 자카르타 갤러리에

초대되어 글로벌 컬렉터를 만나기 시작할 시기, 에빙도 갤러리와 계약을 통해 전업 작가라는 명찰을 단다. 한때, 팝아트 작품, 1 EYE MICKEY로 2012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시장에서 호가 \$10,463 USD을 기록하기도 하며 떠오르는 인도네시아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2년 뒤에는 아시아 경매 시장을 선점하려는 자카르타 소재 글로벌 화랑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갚을 수 없는 채무에 빠져 파산한다. 자카르타 화랑의 주인이 분할되면서 그 중 하나의 갤러리가 소유주의 젊은 아들에게 운영권을 넘기고, 여전히 갚을 수 없는 채무는 굴지의 대기업 가문의 손자인 갤러리 소유주의 구두 협의에 따라 다음 작품,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에빙의 채무는 변제되고, 빚은 탕감된다.

2000년도를 기점으로 서서히 시작된 아트 붐과 2007-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터진 예술시장의 거품(art bubble)을 경험한 에빙은 상업 갤러리가 주도하는 시장의 예술교환에 회의를 품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당시 반동에 모여 있던 ‘터진 거품 후 세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예술대안공동체를 만들고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예술의 교환, 보다 정확히는 시장의 가격과 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인 방식의 예술생산-소비 양식에 대한 실험을 시도한다.

옵니스페이스라는 대안예술공동체가 물리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던 계기는 에빙을 비롯해 옵니스페이스의 핵심 멤버들과 오랜 친분을 쌓고 있던 친구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옵니움(Omnium)이라는 4층짜리 인디뮤직 가게의 창고로 사용하던 맨 윗 층 공간을 전시, 세미나, 모임의 공간으로 무상 임대해 주었던 2015년 4월 16일, 옵니스페이스는 7평 남짓의 방을 얻게 된다. 반동 하위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던 옵니움이라는 인디뮤직 가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가들을 돕는 호의를 베푸는 동시에, 그 공간에 드나드는

다양한 예술가들과 그들이 속한 확장된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인디 뮤직의 장을 확대해줄 거라는 기대, 가장 크게는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에 정리해야 할 각종 음반과 장비로 가득 찬 먼지 낀 창고를 준-갤러리로 변모할 수 있는 변곡점이기도 했기에 옴니움은 흔쾌히 옴니스페이스를 받아 들였다.

프란따우 예술가의 ‘주변성’으로 시작한 다음 2개의 예술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예술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미디어 아트나 에코 아트와 같이 기존의 예술 장르와 문법을 벗어나는 예술생산-수집 방식을 통해 새롭게 생겨나는 호혜성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물건으로서 예술작품이 어떻게 수동적인 객체나 피동작주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갱신하는 주체적 (비인간)행위자 인지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두 사례는, 프란따우 예술가의 공생과 공동체성을 포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들을 제공한다.

1. 오픈 빼오(Open P.O): 교환의 기생적 연쇄 고리

큐레이터의 기획 아래 전시를 기획하고, 갤러리와 계약을 맺고, 작품 판매 수수료를 5:5나 6:4로 나누는 상업 화랑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제도권의 방식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예술 생산 방법, 즉 가격표를 부여하고, 가격의 거품을 만들고, 이론과 담론으로 예술사에서 위치 지우고, 다시 되파는 2차 마켓의 유통까지 담보하는 보수적인 상업 화랑의 거래를 벗어난 예술품 교환의 방식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옴니스페이스는 오픈 빼오(Open P.O, 오픈 피오의 인도네시아식 표기)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시작한다. 사전 구매(pre-order) 방식으로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이 프로젝트는 선수금(Advance fee)을 지불하면 작가와 컬렉터가 매칭이 되어 작가가 제시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시작해 작품의 내러티브, 질료, 배송

까지 둘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업을 통해 생산해 배송까지 해주는 프로젝트다. 매년 9월 아트 자카르타(Art Jakarta) 아트 페어를 전후로, 옴니스페이스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10명 내외의 작가를 오쁜 빼오의 참여자로 선정해 소개한다.

이 과정은 변방의 예술사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로 축적되고 있으며 참여 작가들의 이력뿐만 아니라, 작품 경향, 작업 철학 등을 담은 소개문은 발굴되지 않은 블루칩 작가를 찾으려는 글로벌 갤러리가 주목하는 리스트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단순히 회화나 판화, 조각 등의 전통적인 장르의 예술작품을 하는 작가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티스트, 퍼포먼스 예술가, 예술의 경계를 실험하는 환경운동가, 이슬람 페미니스트 등 인도네시아 예술장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예술적 실험을 도모하는 신진 작가들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작업을 문서화하는 과정의 역사가 쌓이면서 오쁜 빼오는 단순히 대안적인 예술 생산-교환-소비를 만들어 가는 이상화된 예술가들의 낭만에서 벗어났다.

이미 상업 갤러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중장년의 안정된 작가들과는 다르게, 당장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어려운 작가들도 존재하고, 블루칩 작가로 명성을 얻다가 어느 순간 작품 문의나 의뢰가 없어진 젊은 신진 작가들(Arum Tresnaningtyas, Dayuputri, Chabib, Duta Hapsoro, Ferry Gelluny, Iwan Adhisuryo, Meicy Sitorus, Mufti Priyanka, Nasrul, Akbar Resatio, Adi Putra)에게는 자신들의 작품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중간 마진이 없는 직거래라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작품 구입방식일 뿐만 아니라, 완성된 최후의 작품을 맨 마지막 단계에서 구매하는 수동적 감상자나 컬렉터가 아닌, 예술생산과 분배에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 협업자, 과정으로서 예술 작품의 공동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은 상업 화랑이 주도하고 있는 미술시장에 대한 메타

비평이기도 했다. 이제 막 컬렉션을 시작한 컬렉터들, 상업 화랑의 안전한 추천과 조언을 벗어나 자신의 감식안으로 직접 수집을 해보고 싶은 컬렉터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과정으로서 예술 생산’이라는 주제에 옴니스페이스가 주목한 이유는 작가 자신들도 자신들의 작품이 구매자의 여러 요구와 목적에 맞는 내러티브를 담기를 원해서였다. 그래서 오픈 빼오로 매칭이 된 작가와 컬렉터는 첫 일주일동안 작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스타일, 작품의 물성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작품에 담겨야 하는 몇 개의 키워드들을 나누기도 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가 아들이 평소 좋아하던 블록을 대형 조각품으로 확장해 마당에 전시하는 프로젝트, 이슬람 근본주의와 혐오주의 사이에서 다양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발휘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확대한 질밥 사진 시리즈 등은 기존의 화랑, 아트 페어, 경매 등에서 달성하기 힘든 협업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미술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Para-라는 접두사가 만드는 므란따우 예술가의 정체성으로, 상업 화랑의 유통망 안에서는 출품되거나 소장되기 힘든 미디어 아트, 장소 특정적 미술, 관계 미학 퍼포먼스, 인도네시아에서 쉽사리 다루어지지 않는 이슬람적 논쟁 요소를 지닌 작품들이 생산되고 거래되기 시작했다. 즉 예술품이라는 비인간 행위자를 통한 매개와 번역을 통해 전통적인 예술생산양식의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개념미술이 중심이 된 현대 미학의 키워드들이 미술시장 안으로 개입되는 틈이 오픈 빼오 프로젝트를 통해 열린 것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의 확산을 거치며 이 플랫폼의 양상은 더욱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아트페어의 부스나 물리적인 갤러리 공간을 갖기 힘든 대안공동체에게 소통의 매개가 되었던 인터넷 플랫폼이 이제 상업 갤러리도 운영하는 온라인 경매나, 온라인 전시와 같은 맥락으로 격상되었고, 인도네시아 창의경제(creative economy)의

e-commerce 지원 아래 2019년부터는 자카르타 아트페어와 같은 굵직한 행사에 초대되기도 했다. 즉 코로나라는 ‘소음’을 통해 이제 막 작품 수집을 시작한 젊은 컬렉터나 전혀 다른 양상의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는 글로벌 컬렉터들의 마우스 클릭이 인도네시아 예술계와 접촉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2. 게톡 툴라르(Getok Tular): 대안의 ‘태도’가 작품이 되었을 때

오픈 빼오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다른 프로젝트는 물질에서 물건이라는 결과물로 귀착되는 예술생산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작품의 비물질성, 즉 개념과 관계로만 예술작품을 만들어 경매 시스템 안으로 주입하는 기획, 게톡 툴라르(Getok Tular)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 주는 이야기 또는 말의 영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는 2년마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예술가뿐만 아니라 컬렉터, 관객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진행되는 참여형 전시다. 특히 수집된 비물질성(아이디어, 흥얼거리는 소리, 봉사라는 헌신, 창작을 위한 여백으로서 공상이라는 전략 등)에서 시작된 작품들이 일정 기간 다양한 형태로 전시되었다가 폐막을 앞두고 경매를 통해 각 작품의 소장처를 찾아가게 하는 프로젝트다. 예술계 관련 종사자들에게 ‘예술이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짧은 답신 문장(Getok Tular #1, 물음표 2015)을 풀라주 방식으로 내건 전시를 시작으로, 잉여의 시간을 보내는 창작자들의 고통과 마음 비우기의 방법(나의 공상, 멍때리기 Lamunanku..., Spacing out 2017), 국제행사인 족자카르타 비엔날레가 열리는 장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무상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기록한 (나의 헌신, Pengabdianku 2019, Biennale Jogja XIV Equator),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공간에서 고독하게 흩어져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와 같은 비언어적인 소리를 취합해 이를 미디어 매체

를 통해 교차 편집했던 프로젝트(집에서 흥얼거리기, Humming At Home 2021)를 계록 풀라르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서 옴니스페이스가 행사 주체가 되어 진행해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자본의 노동과 시간에 귀속되지 않는 개인의 여가와 잉여가, 창조적 변형의 재료가 된다는 점이며, 작품을 완결하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우연성, 기생관계의 인간/비인간 모두를 포함한 내재적 연결망의 다층적 성격을 그대로 작품 안에서 드러낸다는 점에 있었다. 즉 사회적 총체성과 항상성을 선형적으로 가정했던 선물의 폐쇄적 순환을 넘어, 얽혀있음(entanglement),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상호의존, 예술이라는 물건의 힘이 다시 만들어내는 방향의 전도가 없는 복잡한 교환적 다발적 공생을 만들어내는 시도였던 것이다. 미셸 세르(2002)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울기가 다양한 지식적 화살이 흩어진 다양성의 세계와 우연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예술장을 둘러싼 위계적인 관계가 다시 재배치되기도 한다.

계록 풀라르는 사실, 인도네시아 문화와 예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농끄롱 문화와 맞닿아 있다.⁵⁾ 농끄롱(nongkrong)을 의역하자면, ‘담배를 물거나 차를 마시며 길가에 웅크려 앉아 있기, 어떤 특정한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둘러 앉아 이야기 나누기’로 번역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잉여의 시간, 비생산적인 사회적 시간 죽이기가 - 시간은 돈이라는 자본주의적 효율과는 대비되지만 - 사실은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의 고민을 나누고 연대하며, 나아가 해결책을 찾는 인도네시아 사회조직의 문화적 기저형으로 보는 입장들이 존

5) 농끄롱 문화는 전술한 상가르(Sanggar)라고 부르는 도제식 예술 교육제도 안에서 지식 습득과 전승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근대적 미술 교육이 성립되기 전 상가르는 농끄롱 문화의 대표적 장소였고, 수하르토 정권에서는 공산당과의 연대나 정부 독재에 반대하는 저항 예술의 근원지로 인식되어 정부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재한다.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상주하며, 자본의 시간에 벗어난 그들의 호혜적 시공간인 농끄롱은 꼭 밀폐된 공간일 필요가 없으며, 도처에 산재하는 비공식적인 공간, 사회적 유대관계의 접촉제(Dahl 2016)로 기능하는 사회적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농끄롱이라는 시공간의 개방성과 정보의 교류, 편안하고 자유로운 대화 방식 속에서 예술 작업에 대한 상호 자극과 갱신을 제공하는 예술가 공동체의 농끄롱 문화는 작품이 하나의 완결된 생산물이라기보다는 긴 시간의 역사가 누적된 사회적 관계의 총체적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⁶⁾

농끄롱의 시공간은 상업 화랑의 매매계약서나 예술 경매 시장의 호가와 같은 제도권의 가격표를 뒤 흔드는 반자본주의 예술 생산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다른 관계의 원자를 생산하는 자율적인 예술창조 과정으로 봐야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사례는, 동료 의식이라는 공동체성 안에서 그다지 분화되지 않는 예술가들의 서열과 위계가, 시장의 질서 속에서 다시 재배치된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로서 다윈성 속의 통일이라는 정치이념 아래, 실제로는 희생된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탐색으로 이미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작가가 된 아구 스와게(Agus Suwage)의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짧은 문장과 스케치가 전시되고 이 작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자카르타 컬렉터들까지 작고 허름한 옴니스페이스의 다락에 문전성시를 이룬 하나의 사건도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상업 갤러리와 계약을 맺고 글로벌 예술장에서 평판을 다지는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 관리에 엄격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전시나 기획 의도

6) 랑시에르(2004)의 ‘무지한 스승’이 계몽의 위계를 무화한 수평적 관계, 전도된 권위에 대한 사례라면, 농끄롱은 중심이 없는 열린 네트워크라는 다발적 (무)생산성의 장이다. 다만 농끄롱 안에서도 여전히 위계나 분화는 존재하며 이는 세력화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농끄롱 커뮤니티를 (직업적) 전문화 과정을 통해 와해될 대안 공동체의 미분화 상태나, 남성 중심의 ‘보이 클럽’으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두기도 여전히 존재한다.

에 따라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구 스와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까다로운 작가로 정평이 나 있었고,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그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던 터에, 반동의 트란따우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한 대안예술 공동체에서 그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다는 하나의 사건은 옴니스페이스의 다른 활동도 전국적인 조명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한 관계를 창출해 새로운 예술 체계를 모색해 본 게뚝 톨라르에 대한 반감도 여전히 존재한다. 개념과 관계로만 엮는 비물질성과 작품의 물성이 아니라 작가와 공동체의 ‘태도’에 천착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여전히 또 하나의 실험에 그칠 뿐이라는 학계와 예술계의 비판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내내 지속되었다. 작품 거래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수 그들만의 리그에서 교환되는 암호 화폐 같은 것이라고 결론짓는 일부 상업 갤러리는 아구 스와게가 소속된 갤러리에 연락해 게뚝 톨라르가 작품의 시장 교환을 흔드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했다. 결국 작가 스스로 전시는 하되 판매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는 진행되었다.

정리하자면, 세르의 기식자 이론에서 보여준 숙주의 para-, 즉 ‘결에 있음’은 옴니스페이스와 같은 트란따우 예술가들의 대안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반동 예술계의 새로운 중심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연결을 통해 관계를 매개하는 관계, 옴니움과 반동, 인도네시아 예술계에서 식객으로 초대되지만, 여전히 대안의 거리감을 유지하며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주지 않고 가져가는(taking without giving)’ 일종의 뒤집혀진 증여의 존재론이 기식자로서 옴니스페이스를 설정해볼 수 있다.

V. 결론

이 글은 자바중심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예술계의 인적자본으로 새로운 ‘중심’을 만들고 있는 TAC와 위계적 후원-수혜(patron-client)관계나 사회적 총체성과 항상성으로 귀결되었던 닫힌 체계로서 증여에 대비되는 매개와 교환이라는 열린 순환을 만들어낸 반동의 움니스페이스를 사례 연구로 분석했다. 특히 자바섬 이외의 다양한 예술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트란따우 예술가들의 새로운 정체성과 네트워크가 인도네시아 예술장의 변화를 생성하는 주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만달라 모델이 그려낼 수 있는 영토의 물리적, 정치적 영향력과 상황적 귀속성과는 별개로, TAC가 인도네시아 컬렉터들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화교 공동체의 호혜적 지원에 힘입은 장소성의 재배치였다면, 움니스페이스라는 대안예술공동체가 가능했던 것은 가장 개인적인 방식, 농끄롱 문화를 체화한 예술 공동체의 공생적 교환관계에 기반하고 있었다.

결국 네트워크를 통한 옆, 곁이라는 para-는 경계를 넘고 다시 귀환한 트란따우 예술가의 존재방식이며 이것은 어떤 것의 대안(alter)이나 변형된 또 다른 타자(another)도 아니다. 오히려 para-의 결합이나 편차, 돌출로서 ‘관계의 관계’를 생산해내는 변화의 차별적 조작자라고 할 수 있다. 굳이 para-를 인격체와 동등하게 상정할 필요가 없듯이, 준 객체/대상으로 예술작품이 매개하는 기식음과 일탈이 나중에 기록될 새로운 미술사를 구성하는 프렉탈의 소유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다. 예술이라는 물건의 힘이 만들어내는 방향의 전도가 없는 복잡한 교환적 공생으로 예술사가 다시 기록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 트란따우 예술가들이 보여준 TAC와 움니스페이스의 사례는 단순히 글로벌 자본의 스펙터클에 대항하는 힘에

대한 대안(alternative)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와 작품 창작이라는 예술가의 자율성 사이의 긴장을 조절할 수 있는 식객, 그리고 작품이라는 준-대상의 행위자성을 끌어와 새로운 공생적 교환관계를 갱신하고자 했던 트란따우 예술가들의 상징적 조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넓은 초원이나 광대한 열대 우림, 벌거벗은 여성을 원시화한 무이 인디(Mooi indie)풍의 화풍에 반기를 들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일반인과 일상을 담아낸 인도네시아 근대 회화의 아버지 수조 요노(Sujoyono)의 정신(Ketok Jiwa)은 이어받되, 민족주의에 경도된 사실주의 화풍이 지켜왔던 젊은 세대들이 서구 모더니즘을 자기화해 만들어낸 신예술운동(GSRB: Gerakan seni baru)의 영향과 변용이 현재 인도네시아 현대 작가들의 시대정신라고 할 수 있다. 타자의 거울을 통해서만 결국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다원화된 미술장에서 중심/주변부는 어떻게 재배치되고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이 만들어내는 교환의 네트워크는 어떤지 살펴보는 작업은 영미 중심의 미술사 지평을 넓혀줄 중요한 주제이다. 전시, 화랑, 경매와 같은 제도권의 교환체계를 흔드는 대안공간의 예술 생산은 자본주의 시장 교환의 변주인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다른 관계의 원자를 생산하는 자율적인 과정인가? 영미중심의 미학용어가 비서구사회의 예술을 기술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며, 인도네시아 역사 안에서 새로운 미학적 자질들을 발견해 갈 때 그 번역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네트워크 또는 연결망, 그리고 비인간행위자 내지는 작품의 물성(materiality)을 통해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때 비로소 인도네시아 예술작품의 생산과 교환이 만드는 독자성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미셸 세르. 2002. 『기식자』. 김웅권 역. 서울: 동문선.
- 이경목. 2016. “물건의 힘과 작동-망(work-net)의 상상력.” 『비교문화연구』 22(1): 311-343.
- 이승철. 2019. “불가능한 증여, 기생의 사회: 자크 데리다와 미셸 세르의 상호성 비판.” 『비교문화연구』 25(2): 191-229.
- 자크 데리다, 앙 뒤프르망텔. 2023. 『환대에 대하여』. 이보경 역. 서울: 펠로소픽.
- Arnout, van der Meer. 2021. *Performing Power: Cultural Hegemony, Identity, and Resistance in Colonial Indonesia*. Cornell University Press.
- Belting, Hans, Buddensieg, Andrea and Weibel, Peter. 2013. *The Global Contemporary and the Rise of New Art Worlds*. The MIT Press.
- Burhan, M. Agus. 2013. *Seni Rupa Indonesia Masa Jepang Hingga Lekra*. UNS Press.
- Bruhn, Katherine L. 2018. “Community and the Rantau: West Sumatran Artists in Indonesia’s Art World.” *Southeast of Now* 2(1): 119-42.
- Dahl Sonja, 2016. “Nongkrong and Non-Productive Time in Yogyakarta’s Contemporary Arts.” *Parse Journal*.
- Dowling, Nancy. “The Javanization of Indian Art.” *Indonesia* 54: 117-138. Cornell University Press.
- Druce, Stephen C. 2017. “The Decentralized Austronesian polity: Of Mandalas, Negaras, Galactics, and the South Sulawesi

- Kingdoms.” *Suvannabhumi* 9(2): 7-34.
- Gell, Alfred. 1998. *Art and Agency: An Anthropological Theory*. Oxford: Clarendon.
- Harman, Graham. 2011. *The Speculative Turn: Continental Materialism and Realism*. Melbourne, Australia: re.press.
- Henare Amiria, Holbraad, Martin and Wastell, Sari 2007. *Thinking Through Things: Theorising Artefacts Ethnographically*. Routledge.
- Holt, Clare. 1967. *Art in Indonesia: Continuities and Change*. Cornell University Press.
- Ingold, Tim. 2011. *Being Alive: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Routledge.
- Isaac, G. 2015. “Perclusive Alliances.” *Current Anthropology* 56(12): 286-296.
- Jim Supangkat. 1996. “Multimodernisms.” *Contemporary Art in Asia: Traditions/Tensions*. Asia Society. New York.
- Kelty, C. M. 2008. *Two Bits: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Free Softwar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Latour, Bruno.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 - Network Theory*. Oxford UP.
- Miller, Daniel eds. 2005. *Materiality(Politics, History, and Culture)*. Duke University Press.
- Papastergiadis, Nikos. 2011. “Collaboration in Art and Society: A Global Pursuit of Democratic Dialogue.” Jonathan Harris (eds.), *Globalization and Contemporary Art*. New York: Wiley-Blackwell. pp. 275-288.
- Prihatin, Purwo. 2017. *Seni Rupa Indonesia dalam Perspektif Sejarah*.

- Padang Panjang: Institut Seni Indonesia Padang Panjang.
- Rancièrè, Jacques. 2004. *The Politics of Aesthetics*. New York: Continuum.
- Rizqi, Z. U., Cahyaningtyas, R. W., & Yogiari, D. 2020. "Javanization in Student City: finding and prioritizing idea to maintain local language in Indonesia." *OISAA Journal of Indonesia Emas* 3(2): 66-72.
- Srinivasan, R. S. and J. Huang. 2005. "Fluid Ontologies for Digital Museums."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Libraries* 5: 193-204.
- Strathern, Marilyn. 2005. *Partial Connections*. AltaMira Press; Updated edition.
- Thomas, Nicholas. 1991. *Entangled Objects: Exchange, Material Culture, and Colonialism in the Pacific*. Harvard University Press.
- Thornton, David Leonard. 1972. *Javanization of Indonesian Politic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Verran, Helen, and Michael Christie. 2014. "Postcolonial Databasing? Subverting Old appropriations, Developing New Associations." *Subversion, Conversion, Development: Cross-Cultural Knowledge Encounter and the Politics of Design*. Cambridge, MA: MIT Press. pp. 57-78.
- Widyosisoyo, Supartono. 2002. *Sejarah Seni Rup Indonesia*. Universitas trisakti.
- Wright, Astri. 1994. *Soul, Spirit, and Mountain: Preoccupations of Contemporary Indonesian Painters*. Oxford University Press.
- Yudoseputra, Wiyoso. 2005. *Histrografi Seni Indonesia*. ITB.

184 동남아시아연구 33권 3호

Bandung.

Yuliman, Saneto. 2001. *Dua Seni Rupa: Atas dan Bawah*. Kalam.

(2023.07.16. 투고, 2023.07.17. 심사, 2023.08.01. 게재확정)

<Abstract>

From Mandala to Network:
The Return of Merantau Artists and the
Reconfiguration of Place

Changkyu LEE
(SUNY Binghamton)

In this article, I conduct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intricate interconnections within the Indonesian art scene,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artistic endeavors of Seniman Merantau. These artists have established a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prominent artistic centers like Yogyakarta and Bandung in Indonesia, while also demonstrating a propensity for settling in various locations, including their hometown. The study places particular emphasis on the Tambo Art Center (TAC) in Bukittinggi, West Sumatra, and explores the alternative art community of Omnispace, which exists on the periphery of the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ITB), a crucial hub for art education in Java. These entities actively challenge the prevailing Javacentrism paradigm and seek innovative approaches to redefine and relocate artistic spaces. To illustrate these concepts, a detailed case study of the avant-garde art project, Omnispace, operating on the fringes, is presented.

Departing from the traditional focus on the tangible, political influence, and situational aspects of territory often encapsulated in the mandala

model,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symbolic representation of artists who endeavor to establish renewed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by harnessing the agency inherent in their artistic creations. By adopting a holistic perspective that intertwines the practices of Merantau artists, I assert the significance of acknowledging the dynamic and open circulation of mediation and exchange facilitated by non-human actors and the materiality of artworks.

Key Words: Merantau Artists, Tambo Art Center, Omnispace, Mediation and Exchange, Materiality.

<서평>

25년에 걸친 트랜스내셔널 한인 공동체에 대한 역작

김지훈, 『싱가포르 한인사회: 글로벌 한인, 트랜스내셔널
한인 공동체』, 서울: 나남, 2023.

김 종 영*

김지훈 교수는 트랜스내셔널 연구와 이민 연구에 찬란한 이정표를 세웠다. 대학원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수에 이르기까지 25년에 걸친 싱가포르 한인사회 연구는 동료 연구자들과 후학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전범이자 역작이다. 비행기 안에서 보내었던 무수히 많은 시간들, 수많은 인터뷰이(interviewee)를 찾기 위한 각고의 노력, 모든 인터뷰를 전사하는 고된 노동,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울인 수많은 문헌 연구, 그리고 이 모두를 종합하려는 연구에의 의지. 트랜스내셔널 연구와 이민 연구에서 『싱가포르 한인사회』를 하나의 고전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동남아시아 이민 사회에 대한 종합적이며 인류학적이며 역사적인 관점을 동시에 잘 엮어서 제시한다. 김지훈은 ‘글로벌 한인’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는 한국인의 이동성, 역동성, 지리성을 잘 포착하는 개념이다.

*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jykim24@khu.ac.kr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무수히 많은 집단과 층위로 이루어진 복잡하고 중층적인 이민 사회다. 김지훈은 중산층 위주의 주재원 사회라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이민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싱가포르 한인사회를 철저히 추적한다. 가령 4장에서 보여주듯 싱가포르 이민 초기에 정착한 사람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싱가포르 봉제공장과 전자공장에서 일했던 20대 초반의 한인 여성이었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발견이다. 독일로 건너간 광부와 간호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꽤 알려진 사실이지만 싱가포르 공장에 취직한 여성들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이 힘들었지만 이들이 정착한 이유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것도 아닌 혼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이 더욱 놀랍다. 싱가포르 공장에서 일한 한인 여성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많은 경우 이혼했다. 가부장제가 엄격했던 1980년대 시부모들과 남편들은 이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외국물을 먹은 여자’라는 편견 때문에 이들의 정조는 의심받았다. 이혼을 결심한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과 싱가포르에서 배운 영어 덕분에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었다. 한국 사회의 글로벌화와 함께 이들은 영어학원 강사나 영어와 관련된 직종을 선택할 수 있어 이혼 후에도 자립할 수 있었다.

한국의 이러한 이혼 소식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도 전해졌고 이들은 싱가포르 남성들과 결혼하여 싱가포르에 정착한 초기 집단 중 하나였다. 젠더, 국가, 계급 사이에서 이들이 택한 인생 노정은 어떤 책이나 논문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다. 김지훈이 들려주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롭고 가슴 찡한 글로벌 한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싱가포르 한인사회를 특징짓는 것은 주재원 사회라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과 세계적 기업들이 아시아 거점으로 싱가포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파견된 주재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고 영어가 공용어이며 교육 시스템이 위계화 되어 있다. 주재원들에게 집과 교육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이들 주요 요소에 의해서 이들의 인생 궤적이 변하는 것을 김지훈은 잘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철저한 자본주의 룰에 의해 지배되는 싱가포르 사회를 한편으로는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로 다른 한편으로 돈이 지배하는 비정한 사회로 묘사한다. 글로벌 금융기업에서 통용되는 ‘골드만삭스 룰’은 이 책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 룰은 매년 본인의 성과에 관계없이 하위 10%를 잘라내는 것으로서 싱가포르 금융 종사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자 이직의 주요 원인이다.

평자는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이란 책에서 뉴욕의 월스트리트,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시카고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분석한 바가 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싱가포르 금융가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점은 높은 연봉을 받되 이직률이 높고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두 지역 모두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하는데 한인 전문가 집단은 상대적으로 언어 자본과 사회 자본이 약하다. 영어를 못하면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인맥을 넓히는데도 어렵다. 싱가포르 금융가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지훈의 책에서도 밝히듯이 “사내 정치를 포함한 네트워크 관리, 자기관리, 그리고 명확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에서 지적했듯이 한국 전문가 집단은 착함·성실·겸손 아

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회사가 요구하는 인성 자본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 금융가와 미국 금융가의 한인 전문가들의 차이점이라면 아무래도 한인 타운과 한인들 간의 네트워크의 차이가 눈에 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뉴욕은 LA와 더불어 가장 큰 한인 타운이 존재한다. 또한 대규모 교회에 다양한 종류의 한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뉴욕이라는 도시가 뉴저지와 코네티컷 등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도시인 반면 싱가포르는 공간적으로 보다 좁은 활동 반경을 가진다. 싱가포르의 한인 전문가들의 삶을 통해서 평자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는 일은 평자에게 매우 큰 즐거움이었다.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이 사회를 ‘조용하고 치열한 사회’라고 특징 짓는다. 한인 타운이 없는 한인사회로서 싱가포르 이민사회는 강력한 구심점이 없는 분절된 사회다. 초기 싱가포르에 정착한 한인들은 생존과 정착에 온 에너지를 쏟아야했기에 조직을 만들거나 네트워크의 확장을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이민사회가 다원화되고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더 많이 진출하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인 사회는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성장했다. 한인 타운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싱가포르의 도시정책과 한인들의 직업적 구성이 영향을 미쳤다.

한인들이 느끼는 싱가포르 사회는 투명하고 치열하며 자본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통하는 사회다. 국가와 기업의 청렴도가 높기로 명성이 자자한 싱가포르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반면 지나치게 높은 주택과 자동차 가격은 한인들의 생활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소다. 현대자동차 중형 모델이 1억 원에 가깝다는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중산층 생활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졸면 죽는다!”라는 한인들의 고백은

싱가포르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112쪽).

이 책 5장에서 보여주는 싱가포르 한인 2세대 자녀의 교육과 정체성은 다른 교육 인류학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매우 흥미로운 점들을 제시한다. 싱가포르 한인들의 자녀는 싱가포르 현지 대학, 한국 대학, 미국을 비롯한 서구 대학이라는 크게 3가지 선택지를 가진다. 이는 또한 계급과 연관된 교육 전략으로 가령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은 자녀들을 미국 대학으로 진학시킨다. 같은 가족일지라도 자녀가 여러 명 있는 집은 각기 다른 국가에서 대학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들로서 동남아 국가에서 자란 한인 세대들이 겪는 트랜스내셔널 상황과도 비슷하다. 교육이 글로벌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이민 자녀들은 다양한 교육 전략들을 구사하는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를 열어주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

김지훈 교수의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무수히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사례들로 아로새겨진 역작이다. 이 책은 싱가포르 연구뿐만 아니라 동남아 연구와 이민 연구의 필수통과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이 될 것이다. ‘이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는 단순한 인구의 이동이 아니라 직업, 교육, 정체성, 공동체, 젠더가 상호 교차하는 복잡다단한 영역임을 이 역작은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한국이 여러모로 모델로 여기는 도시국가이기에 이 책이 보여주는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풍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 25년에 걸친 김지훈 교수의 역작은 평자로 하여금 다시금 연구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책이자 트랜스내셔널 연구자로서의 낭만을 느끼게 해 준 책이었다. 25년 역경의 결과물에 어찌 걱정적인 감정과 감미로운 추억이 깃들지 않겠는가. 이 책을 읽는 동안 평자는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싱가포르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싱가

192 동남아시아연구 33권 3호

포르 한인사회』를 다 읽은 후 잠시 상념에 빠진다. 싱가포르의 눈부신 태양과 태평양이 눈앞에 선하다.

<서평>

한국 학자의 인도네시아 연구,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다!

Hyung-jun Kim dkk., *Indonesia dalam Transisi: Catatan
Para Indonesianis Korea*, Yogyakarta: UAD Press, 2023.

정 정 훈*

1. 위대한 말레이어, 하지만 여전히 낯선 언어

일찍이 책의 저자 중 한명인 신윤희(2008)은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이하 인도네시아어)를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동남아의 국제어”로 칭송한바 있다. 인도네시아어가 무엇보다 배우기가 쉽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평등, 높은 성감수성, 시장에서 확산된 소통성이 인도네시아어의 위대함을 재차 확인시킨다고 주장한다(신윤희 2008: 83-85).

분과 학문을 넘어 지역연구자의 현지어 구사는 학문적 능력과 함께 학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현지에서 자신만의 정보를 찾고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략 4억 명의 사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 서강대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blue3j@gmail.com

르, 티모르-레스테의 국민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럴 듯 동남아의 국제어로 인도네시아어는 꽤 많은 사람과 국가에서 사용되고 언어 습득의 장벽이 낮다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한국인에게 낯선 언어이다. 인도네시아어를 일상에서 접하는 기회가 거의 없고 언어 습득의 동기를 찾기도 여러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분명하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책은 아니다. 도리어 인도네시아의 연구자와 대중에게 한국 학자들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에 적합하다. 즉 인류학 관련 대중서 중 하나인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를 응용하여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사회’가 이 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문구이다.

이 책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것 제외하고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사회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는데 여러 장점을 가진 책인 것은 분명하다. 다행히 다양한 번역사이트는 인도네시아어를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하기에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욱이 저자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기 이전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논문이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 검토도 가능하다.

2. 8인의 저자, 현장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찾다.

‘비네까 똥갈 이까(Bhinneka Tunggal Ika)’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상징인 ‘가루다 판짜실라(Garuda Pancasila)’에 새겨진 공식 국가 표어이다. 옛 자바어에서 유래한 문구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언어, 종교, 종족, 믿음 체계의 다양성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특징이지만 새로운 국가 건설 과정에서 통합 역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이 책의 첫 번째 특성과 관련된다. 이 책의 8명의 저자가 논의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는 분과 학문별 논지를 펼치는 방식과 연구지역과 대상의 다양성이 분명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도네시아 사회를 다방면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한편으로는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글을 완벽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물론 이 책의 제목인 『전환기의 인도네시아』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논의시기에 대한 통일성은 주목된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이행을 겪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에 주목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문구 중 하나인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저자들이 관련 자료를 획득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수라바야, 술라웨시, 자카르타, 말루쿠 등지에서 관계자들과 공식적·비공식적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획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즉 수하르토의 32년 장기 독재 집권이 끝나가는 1998년 전후 사회적 혼란, 어떤 미래가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군사정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현실에서 현지조사에 이루어졌다. 저자들의 현지조사는 결국 국가와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좀 더 내밀하게 그려내고 맥락적 분석을 가능케 했다.

구체적으로 신윤환은 1990년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에서 벌어지는 노사관계의 실상과 변화 과정에 주목한다. 특히 ‘중간착취자’로서 한국인 이미지와 비인간적인 ‘한국적 경영방식’이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담론 투쟁을 펼친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제성은 수하르토 체제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투쟁 역량이, 민주화 이후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과

함께 저항 양상의 변화를 촉발한다고 역설한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제조 기업 중 하나인 마스삐온의 노동조합에 주목하고, 이들이 민주화 이후 연속적인 파업과 협상을 통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성공한 과정을 검토한다. 마스삐온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노동자 리더십의 등장은 결국 노동운동이 ‘노동계급의 운동’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기여함을 확인시켜준다.

최난경은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행기 이후의 정치적 과정 검토를 위해 과거의 정치체제와 정당의 관계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독립 이후 다당제로 시작된 인도네시아 정치체제의 실패는 결국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에 의해 권위주의 정권 출현으로 이어졌다. 권위주의 정권은 합법화라는 미명하에 정당을 억압하는 과정을 통해 집권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과거 정권의 집권 방식은 1998년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의 정치체제와 정당에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귀결되었음을 논의한다.

김형준은 1999년 북말루쿠주 할마헤라섬에서 발생한 무슬림과 기독교도간의 충돌 이후 종교 전쟁설이 공적 담론의 전면에 대두되고, 기독교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슬람 부흥과정에서 나타난 일상에서 이슬람화의 노력은 초기의 개인적 믿음의 영역에 집중하였지만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어 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슬림과 기독교도와의 관계가 전면에 등장하고 개인적 일탈과 상대 종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종교적 소수인 기독교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비록 이슬람 부흥의 문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상당수의 무슬림들은 여전히 상대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 부흥의 문제, 즉 경전 중심적 경향을 갖는 무슬림의 주장이 공식적 담론에 등장했음은 기독교도와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여타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음을 밝

히고 있다.

김예겸은 북술라웨시에 위치한 미나하시 지역의 또모혼 공동체 사례 연구를 통해 마을 주도의 교역활동에 주목한다. 교역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론, 교역활동의 역사적 발전 과정, 교역과정에서 여성 참여 그리고 또모혼 지역의 교역활동의 유형을 검토한다. 또모혼 지역의 교역활동은 기존의 시장 중심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을 중심 연구를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송승원은 술라웨시섬 남동쪽에 위치한 부툼섬 바우바우시의 짜아-짜이족이 한글을 채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한글의 수입은 지역 발전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측면으로 이해된다. 이는 수하르토 정권의 몰락 이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 자치 운동의 일환으로도 이해된다. 짜아-짜이족의 한글 채택 프로젝트는 한 지역이 지방자치에 대응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지원은 재임 중 인권 침해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수하르토 정권이 민주화 이후 어떤 방식으로 과거사에 대한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HAM)는 신질서 시기 독재자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수하르토 사임 이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민주화 이행기 기간이었고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의 미흡한 역할 그리고 과거 정권 관계자들의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과거사에 대한 단죄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다른 국가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 역시 과거 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딜레마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은숙은 인도네시아의 거대 이슬람 조직 중 하나인 무함마디아(Muhammadiyah) 사례를 통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조직과 정치의 상관성을 논의한다. 특히 민주화 이후 무슬림 사회 및 교육 기관이 어

편 방식으로 선거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기존의 정치 관행과 달리 무함마디아는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스스로 정당을 구성하거나 다른 정당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자제한다. 특히 민주화 이후 선거 실패의 경험은 무함마디아 운영에 있어 당파색이 강한 정치로부터 조직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 과정에서 무함마디아는 정치적 이익보다 종교적·사회적 의무에 집중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영향력을 획득하는 방식을 모색하였다.

김형준과 전제성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인도네시아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관련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에 관한 양적 분석을 통해 20여 년간 관련 연구와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 졌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한국외대와 비한국외대 그리고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계열 연구자들의 분리라는 현상을 마주하게 됨을 지적한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저자들은 초대학적으로 연결된 후속 세대의 양성, 학문계열 간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 추진, 대중 접근성이 높은 단행본 집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3.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사회

8명의 저자에 의해 작성된 9개의 글이 수록된 이 책은 내용적 그리고 방법적 측면에서 여러 특징을 공유한다. 내용적 측면에서 수록된 각각의 글은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민주화 이행기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회를 다루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샘솟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체제의 질은 그림자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드리워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준다. 방법적 측면에서 ‘참여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이 연구 자료 수집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외부자적 관점’을 가진 연구자가 현장에 있음으로써

(being there) 연구대상과 상호 작용을 실천했다. 저자들이 다루는 내용적 그리고 방법적 측면의 특징은 이 책이 가지는 여러 의의와 관련된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적 현안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직접적이면서 선명하게 저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인권 침해와 관련된 과거사, 노사관계의 실상, 무슬림 조직의 선거 참여 문제, 무슬림과 기독교간의 갈등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금기어이자 성역으로 간주되는 부분이다. 물론 인도네시아 학자들 역시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뚜렷한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다는 수하르토의 하야 그리고 사망 이후에도 그의 정치 행위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논의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다. 이럴 듯 이 책은 외부인이 상대적인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한 사회를 관찰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연구에 뜻이 있는 학문후속세대들에게 이 책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연구 수행에 있어 참여관찰을 수행한 점은 결국 내부자가 경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더욱이 기존의 내부자가 인도네시아 사회의 ‘상식’과 ‘당연함’을 일정하게 낯선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장점 또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신용환과 전제성은 각각 인도네시아의 한인기업과 현지기업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기업의 여러 행위에 대해 절대적 약자가 아닌 저항과 투쟁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언론에 의해 알려지지 않거나 때로는 일방적으로 매도되어 보도되었던 노동자들의 상황을 심층면접조사와 전문적 분석을 통해 ‘실제 일어난 일’을 알리고 있다. 이 책 저자의 글은 학문후속세대에게 향

후 연구기획과 실행단계에서 현지어와 참여관찰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 시켜준다.

끝으로 이 책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의는 한국 학자에 의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첫 사회과학 저작물이라는 것이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국에서는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술 분야 역시 포럼과 학술대회 등이 진행되었고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학술분야 교류 증진 방안이다. 양국 학자들은 학술분야 교류에 있어 비대칭성과 상대국의 정보 부족을 염려한다(한국동남아학회 2023).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한다. 또한 양국 학자들의 직접적인 교류 부족으로 한국 학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반대로 인도네시아 학자들은 한국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을 토로한다. 이 책이 양국 학자 교류의 비대칭성과 정보 부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매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신윤희. 2008. 『동남아문화 산책: 신윤희의 동남아 깊게 읽기』. 파주: 창비.
- 한국동남아학회. 2023.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포럼 결과 보고서: 논의요약 및 정책제언.”
- 한국문화인류학회. 2006.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서울: 일조각.

<서평>

깻잎 뒤에 가리어진 ‘우리’의 얼굴 우춘희, 『깻잎 투쟁기』, 서울: 교양인, 2022.

부 경 환*

나는 ‘깻잎파’이다. 고깃집에서 상추와 깻잎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고민할 것 없이 깻잎을 고를 것이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항상 사는 품목 가운데 하나도 바로 깻잎이다. 투명한 비닐 포장 안으로 보이는 깻잎이 크고 싱싱하면 괜히 흐뭇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깻잎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생각해본 적도, 궁금해한 적도 없다. 그저 내 관심사는 오늘 사는 깻잎의 상태가 어떠한지, 세일을 하거나 혹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지 뿐이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깻잎 역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우춘희 선생의 『깻잎 투쟁기』는 손바닥보다 작은 깻잎 뒤에 가리어진 커다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이 책의 부제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이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가 오랜 시간 이주노동자 가까이에서 직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suasdei@gmail.com

접 보고 경험한 것을 글로 풀어낸 것이다. 사건이 벌어지거나 도움을 요청받으면 어디든 부리나케 달려갔으며, 때로는 비닐하우스에서 같이 깻잎을 따며 이들의 삶과 노동 현장 깊숙한 곳을 참여 관찰했다. 비단 한국의 농촌만이 아니다. 캄보디아에서도 현지조사를 수행하며 이주 준비와 이주 과정까지 파악하고자 했다. 덕분에 이 책은 풍부하고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언론 보도만 훑어보거나 형식적인 인터뷰로는 알 수 없는 이주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가 살아 있다. 그러나 저자는 단지 이주노동자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이 처한 상황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지 정책과 제도,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불합리를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균형은 자신을 “이주인권 활동가이자 연구자”로 소개한 저자의 정체성과 역량이 십분 발휘되는 지점이자,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부제를 통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저 멀리 캄보디아에서 건너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깻잎 생산 현장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캄보디아일까? 2006년 11월 캄보디아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된 이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캄보디아인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비전문취업 자격 입국자 가운데 캄보디아인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이래 그 추세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¹⁾ 특히 비전문취업 세부 업종 가운데 농업(E-9-3)에 한정하면, 전체 발급 대상의 약 41%가 캄보디아인이다.²⁾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연간 전체 캄보디아인 입국자 가운데 비전문취업 자격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매년 조금씩

1) 국가통계포털(통계표명: 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조회기간: 2007~2022년). 2013년(2위), 2018년(3위), 2022년(3위)을 제외하면 캄보디아가 줄곧 1위이다.

2) 국가통계포털(통계표명: 고용허가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현황, 조회기간: 2010~2021년). 해당 통계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국가별 구분 없이 총계만 제공하고 있어 조회기간에서 제외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수치가 80%를 넘나든다.³⁾ 이는 비슷한 규모로 고용허가(비전문취업) 인력을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에 입국하는 캄보디아인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오는 것이고, 이들이 국내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 현장의 비전문취업 노동자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은 캄보디아인이다. 즉,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농산물 가운데 많은 것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손을 거쳐 온 셈이다. 갯잎 농사는 특히나 더 노동집약적이라고 하니, 이 ‘투쟁기’의 당사자들이 캄보디아인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비닐하우스 집’부터 ‘코로나19’까지

이 책은 모두 7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각 장의 핵심 주제를 살펴 보면, 주거(1장), 임금(2장), 노동이주 과정과 제도(3장), 갯잎 농업(4장), 고용허가제(5장), 사회·보건 안전망(6장), 사회적 인식(7장) 등으로 나름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물론 이 주제들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법적 기반이 되는 고용허가제는 5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책 전반에 걸쳐 이주노동자의 불합리한 처우를 생산해내는 기제로 작동한다. 약간의 감상이나 논평을 곁들여 장별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여과 없이 고발한다. 포문을 여는 것은 2020년 12월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한파 속에 목숨을 잃은 속행 씨 사건이다. 당시

3) 국가통계포털(통계표명: 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조회기간: 2007~2022년).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자 이주노동자 인권과 관련하여 여전히 회자되는 사건이다. 1장을 읽고 나면 비로소 책 표지 그림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표지에는 깃잎을 연상시키는 녹색 바탕에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 그려져 있다. 그중 한 동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는 단순히 비닐하우스를 덮은 차광막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곳이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던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가건물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위생이 열악한 것은 물론, 화재와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보안이 허술해 늘 걱정과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여기에 더해 기숙사비라는 명목으로 비싼 월세를 공제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주노동자 실태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라면 첫 장부터 ‘열악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하기에 부족한 상황에 충격을 받을지 모른다.

2장 “임금 체불의 나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만연한 임금 체불 문제를 다룬다. 사업주 동의, 재입국 특례(일명 ‘성실 근로자’) 등과 같은 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용자(농장주)와 이주노동자는 자연스럽게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로 귀결된다.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일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묵인된다. 저자는 “근로기준법 위에 ‘고용주의 법’”(p.77)이 있다고 비판하지만, 이를 사용자 개인의 잘못으로만 환원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한다.

3장 “사람 없는 인력”은 캄보디아인들이 어떻게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오게 되는지 그 과정과 절차, 그리고 제도적 배경을 설명한다. 특히 장 후반부에서는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하여 탄생한 고용허가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2004년부터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삶을 “‘영원히 일시적인(permanently temporary)’ 상태”(p.127)로 만드는 “단기 순환 노동 이주 정책”(p.124)에 불과하다고 보고, 정부의 노동 이주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

을 주문한다.

4장 “갯잎밭 여성들”은 갯잎 농업의 현실을 묘사한다. 환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과 농한기가 없으며 거의 모든 것을 사람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노동집약적 특성은 갯잎 농업으로의 전환과 이주노동자의 결합을 가속화시켰다. 미루어 보건대 ‘값싼’ 노동력의 이주노동자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갯잎의 대량 생산은 불가능했을 것이 자명하다.

5장 “합법적 노예 상태와 불법적 자유”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은 물론, 실제 노동 현장과의 괴리가 얼마나 심한지 낱알이 보여준다. 합법적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여러 자유와 권리가 박탈되지만,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오히려 ‘자유’를 얻고 사용자와의 협상에서도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저자는 “제도가 불법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p.169) 고용허가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6장 “고립과 폭력에 둘러싸여”는 이주노동자가 겪는 범죄 피해,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문제를 다룬다. 이들은 피해를 당하는 순간은 물론, 이후의 신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법적 정의를 찾는 것이 너무나 요원한 일이다. 또한 장 후반부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인지,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분석한다.

7장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은 제도적 혹은 관용적 표현, 일상화된 욕설과 비인간적 처사, 이주노동자 집단을 사회의 위험한 존재로 전제하고 진행되는 불심 검문이나 전수조사는 낯선 타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필요에 따라 생성된 집단이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 건설, 서비스 등 산업 각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저자는 이제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할 때라고 역설하며 책을 끝맺는다.

‘무감한 공모’를 넘어

책을 다 읽고 나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깻잎이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주노동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고된 환경과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서점이나 블로그에 게시된 리뷰를 훑어봐도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다. 간간이 미디어를 통해 이주노동자 뉴스를 접하긴 했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미처 몰랐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설가 최은영은 추천사에서 “나의 무감한 공모를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아팠다”고 술회한다. 이 책을 읽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대상은 깻잎 농장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이 깻잎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에서만 펼쳐지는 것도 아니며, 캄보디아인에게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투쟁기 덕분에 조금은 더 많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던’ 이주노동자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저자는 책 곳곳에서 시중에서 흔히 유통되는 저개발국가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사나 편견을 보기 좋게 반박한다. 이를테

면 여전히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에 대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불법 운전자’라고 하지 않듯이, 초과 체류한 이주민에게 ‘불법 체류자’라고 할 필요가 없다. …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 없[다]”(p.222)고 강변한다. 저소득국가에서 왔으니 법정 임금보다 적은 돈을 주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큰 액수 이기에 괜찮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주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 준다.

“그래요? 우리가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최저임금의 절반만 준다고요? 그럼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세금도 절반만 낼게요.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음식 값도, 버스 값도 절반만 낼게요. 그러면 될까요?”(p.94)

이러한 비유는 학술적 설명보다 훨씬 더 쉽고 강력하게 와 닿는다. 연구자로서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게 표현한 것은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이다. 덕분에 이주노동이나 캄보디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책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한 북토크 행사에서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묻는 질문에, 비록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지만 이주노동자가 길게는 10년 가까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주노동자의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모습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한 바 있다(니은서점 2022). 아마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저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우리 사회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의 변화를 이끌 만큼 충분히 ‘불편한’, 그래서 충분히 좋은 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주노

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2023년 2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되었다. 그동안 몇몇 자치단체에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나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주노동자(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다룬 자치법규는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특히 이전의 다른 조례들이 원론적인 내용과 지원센터나 쉼터 설치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의 조례는 인권보장, 근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무엇보다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고 올해부터 도 예산을 마련해 기숙사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박다예 2023; 최찬홍 2023). 부디 속행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러한 변화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고대하며 서평을 마친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니은서점. 2022. “하이엔드 북토크 [깟잎 투쟁기].”

<https://www.youtube.com/watch?v=vFLT30iJ5u8>

박다예. 2023. ““속행씨법(故 캄보디아인) 상임위 통과...현장, 환영 목소리.” 『인천일보』. 2월 8일.

최찬홍. 2023. “경기도의회, 전국 첫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조례안’ 의결.” 『연합뉴스』. 2월 14일.

부록

- 한국동남아학회 회칙
- 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 간행규정
 - 〈별표 1〉 동남아시아연구 발간일정
 - 〈별지서식 1호〉 동남아시아연구 논문게재신청서
 - 〈별지서식 2호〉 논문심사평가서
 - 〈별지서식 3호〉 논문재심평가서
 - 〈별지서식 4호〉 연구윤리서약
- 원고집필원칙
- 한국동남아학회 연구윤리 규정

한국동남아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동남아학회(이하에서는 본회)라 하고, 영문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동남아시아와 관련되는 분야의 학술연구, 발표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동남아시아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조사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회지 및 관련 학술서적의 간행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들과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아래에 규정한 자격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동남아와 관련된 분야의 강의,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 의 승인

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거나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관심을 표명하는 국내외의 개인 및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 및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5. 기관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할 권리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회원은 임원으로 피선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의 의무를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 8 조 (회장의 임기)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제 9 조 (회장 및 감사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은 전임회장의 임기 종료 전 1년 이내에 개최하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후보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회장과 감사는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한 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제10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아래의 권한을 갖는다.

1.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관례상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임기) 본회는 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2인의 부회장, 20인 이하의 상임이사, 그리고 40인 이하의 이사의 임원을 두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 및 감사의 직무) 임원은 아래의 직무를 행한다.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권한을 대행한다. 또한 회장은 부회장에게 회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을 도와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편집, 국제, 기타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각 1-5인씩 위촉할 수 있다.
3. 감사는 재정을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본 회의 운영을 협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명예회장) 전임회장은 임기 종료 후 2년 간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어 학회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1회 개최하고, 상임이사회의 결정,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40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본 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단순 다수로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발의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출판에 관한 사항
4.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7. 기타 회무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상임이사 및 상임 이사회) ① 회장은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위촉하며 상임이사는 총무, 연구, 편집, 국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20조(편집 및 기타 위원회) ① 본 회의 학회지 논문심사와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기타 필요시에는 회장이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편집 및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은 회장 및 관련 이사가 제정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받는 즉시 발효된다.

제5장 사 업

제21조(학회지 발간) 본회는 연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학회지를 발간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2조(연구발표회 개최) 본회는 연 3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3조(기타 사업) 본회의 목적에 관련하여 행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 성격에 따라, 상임이사회,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찬

조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회비, 찬조금, 기타 지원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예산과 회계) 회장은 본회의 예산작성 및 집행권을 갖는다.

회계연도는 제15조에 의거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고 차기 정기총회전일에 종료된다. 회장은 회계연도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26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

여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준용)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1991년 6월 29일)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 (창립회원) 창립회원은 제5조에서 정한 정회원의 추천과 이
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1999년 10월 23일)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2001년 6월 15일)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2009년 6월 19일)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2012년 5월 11일)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 21 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 간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동남아시아학회(이하 본학회)에서 간행하는 『동남아시아연구』(영문명 The Southeast Asian Review,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 1) 학회지의 심사, 편집, 출판,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학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5-10인으로 구성하며, 편집간사 1인을 둔다.
- 3) 편집위원장은 본학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를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 4) 편집위원 선정기준은 지역별, 학문별 분야의 안배를 고려한다. 이때 편집위원장이 속한 대학을 제외하고 2인 이상 같은 대학에서 선임되지 않도록 한다.
- 5)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간행업무를 주관하며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6)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간행과 관련한 제반 규정의 신설 및 수정,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결과의 판정,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 7) 편집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연구대상지역과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대학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최대한 배제한다.
- 3) 심사위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이상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해당 연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편집규정)

- 1) 학회지는 매년 1호(2월 28일), 2호(5월 31일), 3호(8월 31일), 4호(11월 30일) 연 4회에 걸쳐 발간한다.
- 2)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연구로 국한하며, 연구논문, 번역, 서평, 연구단편(research note) 등 학술적 성격이 분명한 글이어야 한다. 타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게재 가능하다.
- 3)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이미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4) 본 학회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제출될 수 있다. 다만, 1호 심사대상 논문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2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3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4호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 5) 원고 제출 시 필자는 논문게재신청서(별지서식 1호)와 영문

또는 국문 초록이 포함된 원고를 전자메일이나 디스켓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원고집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집필원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6)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초록, 영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 7)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연구논문(번역, 연구단편 포함)의 경우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 서평의 경우 50매 이내이다. 편집위원회는 규정 분량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간행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 8) 게재 확정된 논문의 필자는 소속과 직위를 논문에 기입하여야 한다.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기입한다.
- 9)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가 한국동남아학회의 회원이 아니라면 논문 게재 이전에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과정)

제출된 논문은 다음 4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학회지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단계: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즉시 제출된 논문과 논문게재 신청서가 학회지 편집규정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10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2단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

사평가서(별지서식 2호)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도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3단계: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를 즉시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논문 투고자는 수정 논문을 지정된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하며,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원심자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다.

4단계: 1차 심사와 재심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결과 판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 여부를 확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심사결과 판정)

- 1) 심사위원은 심사의 결과를 ‘게재 가(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C)’, ‘게재 불가(D)’로 판정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를 수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을 내린다. 일반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심사결과			판 정
A	A	A	수정 없이 게재
A	A	B	수정 없이 게재

A	A	C	부분 수정 후 게재
A	A	D	부분 수정 후 게재
A	B	B	부분 수정 후 게재
A	B	C	부분 수정 후 게재
A	B	D	부분 수정 후 게재
B	B	B	부분 수정 후 게재
B	B	C	부분 수정 후 게재
B	B	D	부분 수정 후 게재
A	C	C	전면 수정 후 재심
A	C	D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B	C	C	전면 수정 후 재심
B	C	D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C	C	C	전면 수정 후 재심
C	C	D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A	D	D	게재 불가
B	D	D	게재 불가
C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

* 재심 또는 게재 불가 여부를 결정

- 3) 심사위원과 관련된 개인 정보와 심사결과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6조의2(편집위원의 투고)

- 1) 편집위원은 투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 또한 제5조와 제6조에 정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결과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논문 게재료)

- 1)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는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가 거부된다.

- 2) 기본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이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본 게재료에 10만원을 추가하여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집 논문의 경우도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대학원생 및 미취업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면한다.
- 4) 만약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한 원고 매수가 20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초과된 매 10매마다 5만 원씩의 간행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저작권) 논문의 게재는 학회의 논문 사용 및 공개에 필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해왔던 이전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05년 11월 2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전의 간행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제반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7. 8.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및 제6조의 변경내용은 학회지 제17권 2호 (2007년 8월 31일 발간)에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6.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2)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

제 4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8)

제 4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

제 6조(심사결과 판정)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남아시아연구』 발간일정

	게재신청마감	원고제출마감	학회지발간
각권 제1호	12월 1일	12월 31일	2월 28일
각권 제2호	3월 1일	3월 31일	5월 31일
각권 제3호	6월 1일	6월 30일	8월 31일
각권 제4호	9월 1일	9월 30일	11월 30일

<별지서식 1호>

『동남아시아연구』 논문게재신청서

성 명	한 글 (한자)	영 어	
소 속		최종학위	
직 위		전 공	
연 락 처	주소 (우)		
	전화 () E-mail	팩스 () 휴대폰	
논 문 제 목	한글 영어/외국어		
논 문 개 요			

<별지서식 2호>

『동남아시아연구』 논문심사평가서

논문제목				
심사자	성명:		소속:	
심사판정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
심사평				

<별지서식 3호>

『동남아시아연구』 논문재심평가서

논문제목				
심사자	성명:		소속:	
심사판정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
심사평				

<별지서식 4호>

『동남아시아연구』 투고자 연구윤리서약

논문 저자(들)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아래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투고 논문을 작성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1)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 (2) **출판 책임 및 업적**: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3)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 (4) **위조 및 변조**: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의 이용, 연구 과정의 조작, 자료나 연구결과의 변경 혹은 생략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 (5) **자료 제시**: 저자는 연구에서 이용되는 모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위 규정에 서약합니다.*

논문투고자(공동저자 포함)

* 서명 후 스캔해서 보내주세요.

원고집필원칙

I.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 성격> : 제출된 원고는 학술적인 성격이 뚜렷한 글로서 일체의 표절이 행해지지 않은 독창성을 지녀야 하며, 단행본이나 타 학술지에서 이미 출판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2. <원고 분량>
 - (1) 연구논문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이며, 서평은 50매 이내이다.
 - (2) 원고의 분량이 20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초과분의 간행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 분량이 250매를 초과할 수 없다.
3. <원고 구성> : 원고는 표지,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국문 원고의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의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고, 주제어(key words)를 표기한다.
 - (1)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기고자의 이름,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주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사의 말을 포함한다.
 - (2)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1, (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3)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 중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구두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 (4)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 계속해서 “참고문헌”이란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 또는 “<그림 1> …”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한글로 작성되지 않는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는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 (6) <영문초록>은 제목과 필자 명을 포함하며, 요약문은 40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국문초록>은 450자(공백제외) 이내로 작성한다.
4. <필자의 익명성> : 심사시 필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자의 이름을 별도의 표지에만 적으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필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 “줄고 xxx” 혹은 “줄저 yyy”
 5. <한글사용> :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로 쓰고 괄호 속에 한자(漢字)를 부기하기로 한다.
예: 종족집단(種族集團)
 6. <외래용어> : 통일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지역연구(Area Studies)

7. <외국인명> : 외국인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규정이 없는 외국인명의 경우는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야노토루(失野暢), 세데스(George Coedes)
8. <외국 지명> : 외국지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규정이 없는 외국 지명의 경우는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양곤(Yangon), 쿤밍(Kunming)
9. <외국기관, 단체 및 정당의 명칭> :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은 통용되는 번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예: 국제연합, 아세안 등)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될 때는 한글 번역명 혹은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아웅산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민족연합(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미얀마 군부에게 집중되고 있다. NLD는 지난 1990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바 있다.”
10. <영문 원고에서의 한글의 영문 표기> : 영문으로 제출되는 원고의 한글 고유명사나 특수한 개념을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문화관광부 고시 2000년 8호의 새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야 한다.
예: 제주도 → Jeju-do, 불국사 → Bulguksa
11. <출전의 표시> :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

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표시 요령을 참고한다.

II. 출전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姓)(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등의 인명은 성명), 출판년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ibid.”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예>
 - (1) 저자명이 본문의 글에 나오는 경우: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 홍길동(1998)은 ...”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姓)과 출판년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Moore 1966)는 ...”
 - (2) 저자명이 본문의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인과 일본인 등의 인명은 성명)과 출판년도를 괄호 속에 표기하여, 이것을 구두점 앞에 둔다.
 예: “...(홍길동 1992),” “...(Moore 1996).” “...(毛澤東 1962).”
 - (3) 면수는 출판년도 다음에 콜론을 하고 한 칸을 띄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 Evans(1997: 56)” 또는 “(홍길동 1994: 12-14)”

-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 또는 “et al.”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홍길동 외 1991: 35-38)” 또는 “(Evans et al. 1992: 15-18)”

- (5)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각기 다른 저자의 문헌들인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같은 저자의 다른 문헌인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한다.

예: “... (홍길동 1990: 18; Cumings 1981: 72; Weiner 1967: 99)”
또는 “... (홍길동 1965, 1967)”

- (6)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하는 경우: 지명, 발행년/월/일(월간지의 경우 발행년/월),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 (중앙일보 1993/04/08, p.5) 혹은 (신동아 2003/02, p.233)”

- (7) 간행예정인 원고: “미간”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년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아예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그 자리에 “n.d.”를 쓴다.

예: “... Pye(forthcoming), 또는 홍길동(미간), Coleman(n.d.) ...”

- (8) 기관저자일 경우: 식별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 (외교안보연구원 1992) ...”

Ⅲ.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지 않는 동양어문헌(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버마어, 크메르어 등), 로마자로 표기되는 문헌(구미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3. 저자명은 성을 기준으로 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단, 중국어와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로 표기하여 한자음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4.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 또는 저서명, 출판지와 출판사의 순서로 기재한다. 각 항목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하되, 출판지명과 출판사명 사이는 콜론(:)으로 구분한다.

예: 박이문·홍길동. 1997.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서울: 당대.

Wolf, Eric R. 1982.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5.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6. 각각의 문헌은 아래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The Coming of...*)로, 한글, 일본어, 중국어, 한문인 경우는 이중꺾쇠(『...』)로 표시한다.
- 각 문헌의 첫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1) 저서

① 저자가 1인인 경우:

고인돌. 1993. 『변화하는 동남아시아』. 서울: 민음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허생·홍부. 1995. 『조선시대 소설 인물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Evans, Grant, Christopher Hutton and Kuah Khun Eng (eds.). 2000. *Where China Meets Southeast Asia*. Bangkok: White Lotus.

신돌식 외. 1995. 『인도네시아 문화의 전통과 변화』. 서울: 모듬사.

(2) 학위논문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사회경제적 동인.” 집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Doc,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ertation. Singapore: Robin Hood University.

(3) 학술지, 월간지, 계간지 등에 게재된 논문이나 기사

정해조 1998. “지역연구의 방법론(1).” 『국제지역연구』 2(2): 317-334.

Birch, Anthony H. 1978. “Minority Nationalist Movements and Theories of Political Integration.” *World Politics* 30(3): 325-344.

※ 권, 호 또는 volume, number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권(호), Vol(no)에 해당하는 숫자만 위와 같이 표시하고, 면수는 콜론을 찍은 다음 숫자만 표시한다.

(4) 편집된 책 속의 글

①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필리핀의 경험.”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동남아의 국가와 사회』. 서울: 호박사. 210-235.

Cotton, James and Kim Hyung. 1996. “The New Rich and the New Middle Class in South Korea.” R. Robinson and D. Goodman (eds.), *The New Rich in Asia*. London: Routledge. 56-80.

②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정해창. 1993. “인간의 정체.” 『언어, 문화, 인간』. 서울: 고려원. 355-400.

③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본문에 언급될 경우에는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정보를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Cohen, Paul T. 1993. “Order Under Heaven: Anthropology and the State.” Evans (ed.). 175-204.

Evans, Grant (ed.). 1993. *Asia's Cultural Mosaic*. London:

Prentice Hall.

Hellowell, Christine. 1993. "Women in Asia." Evans (ed.).
260-286.

(5)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기사 및 칼럼

서경교. 1993. "태국 민주화의 교훈." 『중앙일보』 4월 8일.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2, p. 23.

(6) 인터넷 검색 자료일 경우 저자, 작성년도, 제목, 웹주소, 검색
일자의 순으로 하되, 검색일자는 괄호 안에 둔다.

Clark, John. 2006. "China Threat." [http://atimes.com/atimes/
printN.html](http://atimes.com/atimes/printN.html) (검색일: 2006.02.02)

한국동남아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8년 02월 02일

개정 2009년 06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한국동남아학회(이하 학회) 회원이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회원 이외에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비회원(이하 비회원이라 함)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 ① 한국동남아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 ②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 ③ 한국동남아학회가 학술지 원고모집 또는 학술발표대회 기획안을 공고할 때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비회원은 학술지 또는 학술발표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4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5조 (출판 업적)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6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제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3조 (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5조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7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동남아학회 편집위원이 겸임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윤리위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윤리위에서 제외한다.
-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남아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제4조 내지 제7조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또는 비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0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 또는 비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 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비회원 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보고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상임이사회는 제재 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조치를 결정한다.
- ② 상임이사회가 제4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한 회원 또는 비회원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단, 이들 각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3. 향후 일정 기간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4. 기타의 제재

- ③ 상임이사회가 제2항 제2호의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 ④ 상임이사회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위원회와 보고자 및 피보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 (윤리규정의 개정)

- ① 윤리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 ②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02. 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6. 19)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동남아시아연구

33권 3호 (2023년)

2023년 8월 25일 인쇄

2023년 8월 31일 발행

발행인 전제성

편집인 이한우

발행처 한국동남아학회

(5489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203호

tel 063-219-5601

www.kaseas.org

kaseas2021@gmail.com

(편집위원회: kaseasedit@gmail.com)

ISSN 1229-6899

The Southeast Asian Review

Volume 33 Number 3

(August 2023)

| Articles |

- The Impact of Minilateralism on ASEAN Centrality:
Strategic Implication on Korea's Approach to ASEAN*
Dong-Yeob KIM 1
- Water Diplomacy on Transboundary Dam Development:
Role and Challenges of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Yo-Han LEE 39
- Startup Support Policies in ASEAN:
A Comparative Analysis of Malaysia, Thailand, and Indonesia*
Young Kyung KO 71
- Islamic Economy at Work:
Religiou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Muslims in Indonesia*
Hyung-Jun KIM 119
- From Mandala to Network:
The Return of Merantau Artists and the Reconfiguration of Place*
Changkyu LEE 153

| Book Review |

- A Masterpiece of the Transnational Korean Community Over 25 Years*
Jongyoung KIM 187
- Indonesian Studies in Korea, Written in Bahasa Indonesia!*
Jeonghun JEONG 193
- Invisible Migrant Workers beyond Perilla Leaves*
Kyunghwan BOO 201

| Appendix | 209



KASEAS

한국 동남아 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http://www.kaseas.org>